

기본연구 2011-02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Fisheries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Korea and Africa

2011. 12.

홍현표 · 장홍석 · 김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홍 현 표 : 제1장, 제2장, 제3장, 제6장, 제7장

● 연구진

- 장 홍 석 :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 김 수 진 : 제6장

● 외부 집필진

- 박 영 호(KIEP) : 제2장 1절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송 기 선(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장)

● 장 영 수(부경대학교 교수)

● 박 창 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 김 승 범(KOICA 아프리카부 부장)

● 서 장 우(농림수산식품부 前 국제기구과 과장)

● 윤 분 도(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과장)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연구감리자

● 신 영 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머 리 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외치고 있다. 최근에 비단 공적개발 원조 확대를 배경으로 이 지역의 빈곤 해소와 국격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역동적인 사업자들의 시선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 그중에서도 수산 분야는 최근에 아프리카 등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금세기 들어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라 어업 부문에서는 어종과 어법 등이 달라지는 점,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적 조업으로 인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식량 부족에 따른 기아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는 수산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그동안 수산분야에서 정책 및 산업기술 개발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전문가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수산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프리카 수산업은 이제 단순한 식량자원의 공급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KMI는 해양수산분야의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 지난 20여년간 해양수산분야의 정책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적잖은 연구역량을 투입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연구역량과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현안들을 연구하고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KMI는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2010년에 한·아프리카수산포럼(Korea-Africa Fisheries Forum: KORAFF)을 창립한 이래, 2011년에는 한·남태평양포럼(Korea-South Pacific Fisheries Forum: KOSOPFF)을 만들어서 수산분야에 관해서 세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에

이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아프리카 등 현지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제수산협력사업과 종합적인 진출 전략 등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지면을 통해 수산분야의 한·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두 지역의 글로벌화와 협력적 관계 확보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수산연구실의 홍현표 연구위원과 장홍석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고, 신영태 선임연구위원이 감리를 맡아 작성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 중 아프리카와 관련된 일반적 특징과 주의 사항 등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영호 박사 및 기타 자문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으며, 이분들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아프리카 곳곳을 뛰어다닌 우리 연구진들의 방문 시 많은 도움을 준 V. F. Neto 앙골라 농업자원부 수산청 차관, Nii Amasha Namoale 가나 수산부 차관, Abdullah Khanafou 알제리 어업자원부 장관, Hechmi Missaoui 튀니지 농업자원부 수산국장, Moussa Conde 기니 수산양식부 장관 및 여러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수산분야 협력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아무쪼록 많은 독자들이 이 연구를 기초로 양 지역의 수산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학 소

차 례

Executive Summary	i
-------------------	---

제1장 서론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3. 연구의 추진 체계 및 내용	10
1) 연구의 추진 체계	10
2) 주요 내용	11

제2장 아프리카 경제 현황과 협력 필요성	13
------------------------	----

1. 저성장 원인과 발전 가능성	13
1) 절대빈곤	13
2) 저성장의 이유	15
3) 경제 발전의 가능성	18
2. 아프리카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 고조	26
1) 세계의 아프리카 지원 현황	26
2) 주요국의 대(對)아프리카 원조 사례	28
3.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협력사업 실태	41
1) ODA 사업 실태	41

2) 평가	47
4. 글로벌 시대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필요성	49
1) SWOT 분석	49
2) 한국적 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	51
3) 수산협력의 필요성	52
제3장 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의 추진 전략	58
1. 수산협력사업의 추진 목표	58
2. 목표별 추진 전략	59
1) MDGs 달성 목표	59
2) 해외수산자원의 개발 및 확보	59
3) 산업협력	60
3. 단계적 추진 전략	61
4. 추진 방법	63
1) 지원대상 국가의 선정	63
2) 협력 가능 분야	69
3)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81
5. 효율적 협력 체계의 구축	83
1) 수산협력 수요 발굴 체계	85
2) 수산협력 선정, 평가 체계	88
제4장 수산가공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	91
1. 협력대상국의 수산분야 현황과 특성	91
1) 가나의 일반 경제지표	91
2) 수산분야의 현황	92
3) 수산업의 구조	94
4) 경제 기여도	99

5) 시사점	100
2. 협력사업의 내용	101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01
2) 협력사업의 개요	102
3) 세부 추진 방안	103
3. 문제점	105
4. 추진 방안	107

제5장 어업생산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 109

1. 협력대상국의 수산분야 현황과 특성	109
1) DRC의 일반 경제지표	109
2) 수산분야의 현황	110
3) 수산업의 구조	111
4)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	122
5) 수산업 성장을 위한 목표	127
2. 협력사업의 내용	128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8
2) 협력사업의 개요	129
3) 세부 추진 방안	130
3. 문제점	132
1) 사업 대상지의 확정 문제	132
2) 사업 운영관리자의 선정 문제	133
4. 추진 방안	134

제6장 양식개발형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 방안 136

1. 협력대상국의 수산분야 현황과 특성	136
1) 수산물 생산	136

2) 수산물 교역	138
3) 수산물 소비	139
4) 수산물 유통·가공	141
2. 협력사업의 내용	142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42
2) 협력사업의 개요	144
3) 세부 추진 방안	148
3. 문제점	152
4. 추진 방안	153
제7장 결 론	155
1. 요약 및 정리	155
2. 정책 제언	157
참고문헌	160
부 록	163
부록 1.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의 주요 논점	163
부록 2. 아프리카 수산분야 ODA 지원 내역	187
부록 3.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재단	193
부록 4. 가나의 한국 자본 참여 수산기업 및 문제점	199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표 2-1. 아프리카의 빈곤 관련 지표(2011)	13
표 2-2. 시기별 ODA 수혜지역 비중 추이	27
표 2-3. 미국의 대외원조 사업 및 예산구조	30
표 2-4. 미국의 아프리카 원조 실태(2002~2006년)	31
표 2-5. 중국의 아프리카 대외원조사업 추진 연혁	33
표 2-6. 중국 대외원조의 지역별 유형(2002~2007년)	35
표 2-7. 중국의 아프리카 13개 투자대상국별 산업지도 목록	37
표 2-8.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 추이	41
표 2-9. 우리나라 대 아프리카 ODA 공여실적	42
표 2-10. 한·아프리카 간 협력네트워크 추진 현황	46
표 3-1. 수산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 전략	62
표 3-2.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원양선사 진출현황(2008)	64
표 3-3. KOICA의 아프리카 협력 국가의 우리 수산분야 진출	67
표 3-4. 대 아프리카 수산분야 잠재적 협력대상국	68
표 3-5. 수산자원 관리 협력형 사업의 내용	71
표 3-6. 어업 관리 협력형 사업의 내용	73
표 3-7. 양식어업 협력형 사업의 내용	75
표 3-8. 수산인프라 협력형 사업의 내용	76
표 3-9. 수산가공 협력형 사업의 내용	78
표 3-10. 어촌지역 개발협력형 사업의 내용	79
표 3-11. 수산정책 개발협력형 사업의 내용	80
표 3-12.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협력체계 현황	84

표 3-13. KORAFF의 중·장기 운영을 위한 연간 추정 예산	88
표 4-1. 가나의 일반 경제지표(2009)	91
표 4-2. 가나의 수산물 수급(2007)	92
표 4-3. 가나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동향	93
표 4-4. 가나의 연도별 수산물 생산 추이	94
표 4-5. DR 콩고의 어종별 생산량	95
표 4-6. 가나 수산업의 경제 기여도	100
표 5-1. DRC의 일반 경제지표(2009)	109
표 5-2. DRC의 수산물 수급(2007)	110
표 5-3. DRC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이(연간)	111
표 5-4. DRC의 연도별 수산물 생산 추이	112
표 5-5. DRC의 어종별 생산량	113
표 5-6. 주요 생계형 영세어업의 분산지역(호수)-서부	115
표 5-7. 주요 생계형 영세어업의 분산지역(호수)-동부	117
표 5-8. DRC의 수산물 가격	119
표 5-9. DRC의 수산물 유통망과 유통 수단	121
표 5-10. DRC의 수산물 생산 잠재력과 실제 생산 비교	123
표 5-11. DRC의 생계형 영세어업의 어구어법	125
표 5-12. 동 사업의 사업 규모(DRC 계획)	131
표 6-1. 말라위의 수산물 수급	139
표 6-2. 말라위의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	140
표 6-3. 말라위 수산협력사업 개요	144
표 6-4. 말라위 농수산 통합형 양식장 개발사업 추진 방안	148
표 6-5. 대규모 상업형 양식장 사업 세부 추진방안	149
표 6-6. 소규모 통합형 양식어가 구축사업 세부 추진 방안	150
표 6-7. 자급자족형 사료공급 농가 구축사업 세부 추진 방안	151

표 6-8. 기술인력 지원사업 세부 추진 방안	152
부록 표-1. 연안 및 내륙국가간의 경제지표 비교	169
부록 표-2. 아프리카의 자원의존도와 인간개발지수	175
부록 표-3. 아프리카 환경 문제의 주요 영향	185
부록 표-4. 아프리카 수산분야 ODA 지원규모 추이	187
부록 표-5. 아프리카 대상 수산분야 ODA사업 추진현황	188
부록 표-6. 다랑어류 자원 국제기구의 국가별 킬터량(2008)	19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접근방법	6
그림 1-2. 본 연구의 추진 체계	11
그림 2-1. 아프리카 저개발의 구조적 원인	17
그림 2-2.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의 1인당 실질 GDP 비교	21
그림 2-3. 아프리카의 분쟁 감소 추이(1996~2007)	24
그림 2-4.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추이	26
그림 2-5. 주요 선진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현황(2002~2006)	28
그림 2-6. 중국의 대외원조 추이	34
그림 2-7. 아프리카 지역별 우리나라 양자원조 현황	42
그림 2-8.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부문별 원조 비중(2006~2010)	43
그림 2-9. 수산분야 ODA사업의 아프리카 점유 비중	45
그림 2-10. DAC 회원국별 무상원조 비율(2007)	48
그림 2-11. 경제협력 관점에서의 대(對)아프리카 SWOT 분석	50
그림 2-12.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협력정책 기초	52
그림 3-1. 한·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의 추진 목표	58
그림 3-2. ODA 사업 과정과 KORAFF의 지원 기능	87
그림 3-3. 아프리카와의 협력사업을 고려한 수산 ODA 추진 체계	89
그림 4-1. 가나의 다랑어류 생산 추이	96
그림 4-2. 가나의 테마 항 및 배후부지	102
그림 4-3. 동 사업의 사업 과정	103
그림 4-4. 가나의 테마항 양륙 모습	106
그림 5-1. DRC 지도와 호수 위치	124
그림 6-1. 말라위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비중	137

그림 6-2. 세계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 현황 및 전망(대륙별)	140
그림 6-3. 말라위의 주요 수산물 생산지 및 소비지 현황	142
그림 6-4. 말라위 농수산 통합형 협력사업 추진대상지	147
부록 그림-1.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운송비용 비교	178
부록 그림-2. 아프리카 농산물의 교역 조건	182
부록 그림-3. 일본 해외어업협력의 지원 흐름도	194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Fisheries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Korea and Africa

- Amid rising international attention to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it is time that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review the possibilities.
 - This study aims to develop cooperative measures with the African fisheries sector after an analysis on its current status from Korea's point of view.

- While Africa got stuck in the Poverty Trap, positive and negative views got mixed over the causes behind the continent's under-development.
 - According to negative views, causes of underdevelopment are not limited to economic factors.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reasons are at play, making it difficult for the continent to get out of the poverty trap in the short term.
 - On the other hand, positive views said t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have changed since 2000 and internal reform began appearing in the continent. Therefore, Africa will become an important driver of the global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 Such positive views became the basis for the developed countries' major efforts to court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 Advanced nations'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based on their focus: humanitarian cause, economic cause (reciprocity

type, seeking economic benefits) and colonial management.

- Humanitarian cause: ex) Sweden, Norway, Finland and those who live up to MDGs
 - Economic cause: Japan, Italy, Taiwan and those who boost their exports with aid to Africa
 - Colonial management: France, Spain, the UK, Portugal and those who try to maintain political and economic clout on their previous colonies
- Meanwhile, the US and China are establishing their own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and ratcheting up their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 The US has sought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under the proclaimed ‘Washington Consensus’ which urged poverty reduction for global security. However, some critics called this ‘hegemonism of the US.’
 - China, under the Beijing Consensus, is rapidly replacing the US as an economic cooperation partner for Africa. However, it has been blamed for local industrial side effects resulting from cost minimization and evasion of local employment.
- Africa holds the highest share in the global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owever, Korea maintained a low level of ODA for Africa and has minimal interest in fisheries ODA.
- Out of Korea’s total ODA, ODA for Africa makes up 12.9% of which fisheries sector accounts for less than 1%.
 - Most ODA projects in fisheries sector are training invitations which have less impact on poverty reduction in Africa.
 - But ODA in fisheries sector recently gained momentum after cooperation with Algeria, Tunisia and Senegal were carried out for fish farm construction.

- Moreover, the Korea Maritime Institute(KMI) established the Korea–Africa Fisheries Forum(KORAFF), boosting fisheries cooperation with Africa.

- Under the circumstances, fisheries cooperation with Africa should aim for the following three goals under the mutual vision of building the Korea–Africa joint foundation.
 - First, to promote ODA projects which can reduce poverty in Africa and achieve MDGs
 - Second, to promote fisheries cooperation linked with developing and securing overseas fisheries resources
 - Third, to promote industrial cooperation for market creation, including detour production bases

- The implementation is divided into three phases. Fisheries cooperation should concentrate on certain target nations, while diversifying the areas for cooperation.
 - The first stage is to keep the relevant system and supporting organization in order for project implementation. The second stage is to carry out projects by area in Africa, while considering their possible complementation. The last stage is to keep implementing and expanding those projects.
 - The study designated potential nations (27 nations) and core nations (4 nations) for cooperation, based on Korea-Africa cooperation, private fisheries advancement into Africa and current fisheries status in individual African nations.
 - Areas for possible cooperation are as follows: Fisheries Areas for Cooperation -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cooperation type

- Fisheries production cooperation type: fisheries management cooperation/Aquaculture cooperation
 - Fisheries infrastructure cooperation type: fishing port development/Seafood distribution & logistics
 - Fisheries processing cooperation type
 - Fishing village development cooperation type
 - Fisheries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type
-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fisheries industries of Ghana, D. R. Congo and Malawi through data collection and field surveys. And it evaluated fisheries cooperation promoted by these countries.
- Ghana has prosperous tuna catching and tuna processing industry around the Tema port. However, this falls short of stabilizing seafood demand and supply due to underdeveloped facilities and coastal fisheries at the Tema port.
 - Therefore, the Ghanaian private sector needs to vitalize the tuna catching and tuna processing industry at the Tema port under the cooperation with Korea. And both governments need to use the port development projects to stabilize the concerning local economy and support the industries indirectly.
 - The potential production of inland fisheries of D. R. Congo stands at 700,000 tons but the total fisheries production remains at 240,000 tons, which implies the nation's enormous potential for production.
 - Therefore, cooperation with Korea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inland fisheries, which will contribute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When it comes to designating target areas for project, western provinces with easy market, physical and technological access look prominent.

- Malawi is the poorest nation in the world. There have been many requests for cooperation in the inland aquaculture since it has well developed inland waters.
 - However, if aforementioned cooperation projects just end with physical construction of aquaculture farms, the recipient countries would encounter many troubles in continuing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ose facilities. Therefore, compensating cooperation schemes with other related projects, such as fish feeds (corn farms) and other agricultural and fisheries businesses are needed.
-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 First, concept of Korea-Africa cooperation should become clear before implementing actual projects, as in the case of the Washington Consensus or the Beijing Consensus. Based on this clarified idea, fisheries cooperation should proceed as well.
 - Second, a committee or organization which can represent fisheries project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fisheries cooperation actually contributes to poverty reduction in Africa.
 - Third, an organization specialized in fisheries cooperation is recommended to be established. Because we think that types of fisheries cooperation will be much helpful for African countries.
 - Fourth, other important nations in Africa should be involved in the Korean core recipient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fisheries strategies.
 - Fifth, various kinds of networks for fisheries cooperation with Africa, including KORAFF, should be cultivated and invigorated.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이슈는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가 비단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 등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차원에서도 중요한 대상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공적개발원조사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OECD/DAC에 가입한 2009년에 국민순소득(GNI) 대비 0.1% 수준이었던 ODA 예산 규모를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 0.25%로 늘리는 등 대외원조액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최근 들어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에 적극 대응하고자 녹색성장(Global Green Growth) 어젠다를 매개로 하는 글로벌 협력 관계의 구축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지역은 새로운 관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¹⁾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06년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서울)’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 등을 논의하는 등 한·아프리카 간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1) 한국 정부는 2011년 6월 20일,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1’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지구문명적 책임을 주창하여 녹색성장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관계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²⁾ 그 밖에도 기획재정부 주최로 2006년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되어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 시작했다.³⁾ 그 밖에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출연 연구 기관 차원에서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⁴⁾이 2010년 12월에 창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자원 고갈과 꾸준한 소비 증가의 여파로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아프리카 어장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양 수산물의 공급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도 크기 때문에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에 중요성이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우수한 기술과 경험, 자본 등을 바탕으로 대외적 협력사업의 내적 능력도 증대되고 있다. 이미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우리의 양식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는 등 아프리카와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⁵⁾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이미 유럽 선진국들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과거 식민지 건설을 통해 절대적인 영향력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요즘은 이러한 기존 식민지 관계가

2) 외교통상부는 ‘제1차 한·아프리카포럼’(2006. 11. 8, 서울 롯데호텔)이 개최된 데 이어, ‘한·아프리카포럼 회기간회의 2007’(2007. 11. 15,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아프리카포럼 회기간회의 2008’(2008. 10. 16, 모로코 모하메드 5세대학), 제2차 KAFORUM(2009. 11. 23, 서울) 등의 계속사업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3)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2006년, 2008년, 2010년의 3차례에 걸쳐 KOAFEC 기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최근까지 4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4)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ea·Africa Fisheries Forum: KORAFF)은 수산분야에서 결성된 민간협력기구로서, 아프리카 및 한국의 수산업자, 수산전문가, 수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협력사업 수요의 발굴 및 협의를 주제로 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5) 알제리, 튀니지, 세네갈 등에서 새우 등의 어종을 대상으로 양식장 설립 및 기술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소 퇴색되고는 있지만, 언어·제도·문화 등에 있어서 기존 식민통치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다른 지역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 밖에 일본과 중국 등이 최근 들어 아프리카로 대거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원 및 자본 등의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인 규모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협력 확대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진출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조업, 에너지·광물 자원, 의료 및 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사업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산분야는 1960년대 중반부터 원양선사⁶⁾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연근해까지 진출하여 조업을 하면서 아프리카 연안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본격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빈곤 해소 등의 목적으로 아프리카 개발지원사업이 수산분야에도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수산업’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시급할 뿐 아니라, 현지 진출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등도 미리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수산업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수산분야의 협력 방안 및 추진 사례 도출을 연구 목적

6) 원양어선을 소유하여 직접 원양에서 조업을 하는 수산기업.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주요국의 수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수산분야 협력사업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각종 아프리카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에 동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수산업 유형을 연안 자원국, 내수시장형 및 내륙국 등으로 구분하여 수산업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적 연구 결과 및 현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발원조사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함으로써, 수산분야는 물론 아프리카 협력과 관련한 기본 연구에서 학술적으로 한걸음 앞서 나간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을 본격적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학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성 및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범위와 방법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보다 독창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분야의 협력사업, 특히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연구들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도 현장 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 등을 통해 협력사업의 특징과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프리카 경제의 본질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조사 및 분석 등의 발견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적으로 유용한 사업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으로도 명료하고 타당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본 연구는 아프리카 수산협력 사업의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방안의 구체적 추진 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법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시되는 정책 방안의 실현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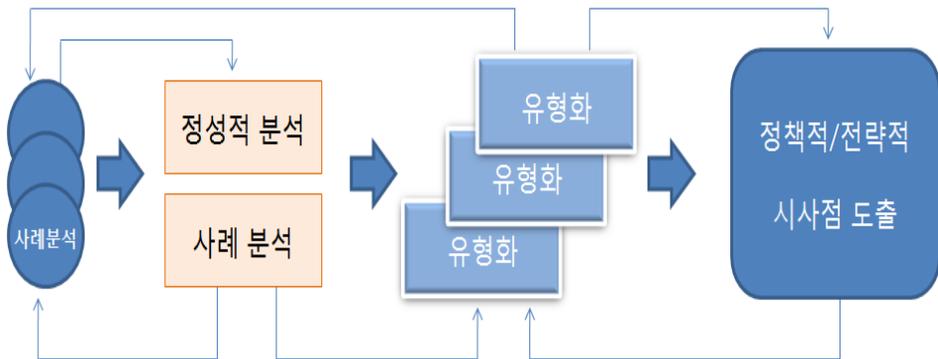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수산분야’에 대한 ‘기초적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는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략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부적 분석에서는 아프리카의 국가 중 수산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형적으로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 포함된 아프리카 국가로는 가나(Ghana), 콩고민주공화국(D. R. Congo), 말라위(Malawi)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 기니(Guinea),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 앙골라(Angola), 세네갈(Senegal), 가봉(Gabon), 나미비아(Namibia), 카메룬(Cameroon), 알제리(Algeria), 튀니지(Tunisia)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다.

본 연구는 수산분야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되, 어업 생산 분야, 양식 분야, 수산물 내수시장 분야 등에 관한 검토를 병행했다. 따라서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어업 자원 및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식량자원의 공급을 위한 시장 진출 방안 등도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산협력’이란 정부차원에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글로벌화 일환으로서 필요한 ‘경제적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아프리카 전체 수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통한 통계 분석, 일부 대표적 국가 수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사례 분석(case analysis)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주요 연안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수산기업 및 수산관계자 등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특성상 정책적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술적인 유의적 관계 도출보다는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결과를 통해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발견적 해결방식(heuristic approach)’을 사용하였다.



| 그림 1-1 | 연구의 접근방법

이와 같은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 및 아프리카 지역의 수산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포럼(forum)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였으며, 이 포럼의 심포지엄⁷⁾을 통해 아프리카 수산업 관련 협력적 과제와

7) ‘한·아프리카수산포럼(KORAFF)’은 그 결성(2010. 12)과 함께 제1차 남아공 케이프타운 심포지엄(2010. 7), 제2차 서울심포지엄(2010. 12), 제3차 앙골라 심포지엄(2011. 9) 등을 추진하여 아프리카 관련 수산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수행하였다.

(1) 자료 수집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아프리카 수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에서 시작하여, 각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아프리카 관련 통계들을 이용하였다. 특히 FAO, OECD, World Bank, 유럽의 전문지(EUROFISH) 등의 아프리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핵심 분석대상 국가의 경우,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⁸⁾ 회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대표적 유형의 수산국을 분류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아프리카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⁹⁾

(2) 선행연구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연구 방법론 및 자료 활용, 정책적 시사점 도출 시 적극 활용하였다. 기존의 대부분 아프리카 연구는 수산분야보다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유망업종에 집중되어 있다.¹⁰⁾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함께 적극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유럽 및 아프리카 등 연구가 추진되었다. 다만,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은 글로벌

8) ‘한·아프리카수산포럼(Korea-Africa Fisheries Forum)’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0년 12월에 창립한 수산분야 전문 협력네트워크로서, 글로벌수산정책 분야의 해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9) 앙골라, 카메룬, DR콩고, 가나, 기니, 알제리, 튀니지(2011년)를 현지 조사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2010년), 세네갈(2009년), 말라위(2006년) 등은 기존의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10) 특히 KIEP의 「유망산업 연구」(2006)가 대표적이다.

시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등의 유용한 공급처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았다. 따라서 이들 에너지 및 제조업 분야의 연구 접근 시각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글로벌화를 위한 시장 혹은 자원공급원으로서의 전략적 가치와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표 1-1 |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유망국 산업연구 · 연구자: KOTRA · KIEP(2006) · 연구 목적: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탐색 및 산업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 통계 분석 · 대상국 산업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신흥시장(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폴란드 · 남아공)의 산업 환경 분석 · 국가별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이외에 서비스산업, 신성장산업 등에 대해 조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수산분야 ODA사업 증장기 추진 전략 수립 · 연구자: 홍현표 외(KMI, 2010) · 연구 목적: 수산분야 ODA사업 추진 필요성 및 추진 전략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자료 조사 · KOICA 자료 분석 · 문헌 및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ODA 추진 실태 · 지역별 수산업 실태와 ODA 지원 필요성 · 수산분야 ODA사업의 증장기 추진 방안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전략적FTA 추진 대비, 수산 부문 대응 전략 연구(3차년도) · 연구자: 홍현표 외(KMI, 2010) · 연구 목적: 중국 및 SACU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FTA추진시 영향 및 대응전략 등을 연구하기 위해 남아공 등 일부 아프리카지역 연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및 현장 조사 · 국제기구 자료 조사 · 계량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SACU 대상 연구 · 대상국의 수산업 및 교역 실태 · FTA 추진 시 교역증대효과 분석 · 대응 전략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농업 개발협력 방안 · 연구자: 강봉순 외(KREI, 1983) · 연구 목적: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농업개발협력의 필요성과 협력사업 추진 방안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조사 · 국제기구 자료 · 문헌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간 농업개발협력 필요성 · 농업개발협력 가능분야 · 주요 대상국가의 농업 현황(아프리카 4국, 아시아 5국 등) · 농업개발협력 추진 상황 · 농업개발협력 방안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연구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탐색 및 부존자원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양자 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산분야 ODA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되, 가장 중요한 대상지역인 아프리카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참고문헌 · 국내외 통계자료 · 수산자원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 아프리카 현장 조사 (제도 및 실태 등) · 전문가 심포지엄 (인적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가별 수산정책 및 수산 자원 관리 · 주요 국가별 수산업 실태 분석 · 주요 국가별 수산물 교역 실태 · 우리나라의 원양산업 진출 현황 · 국제협력사업 수요 조사 · 국제협력을 위한 아프리카 진출 방안

둘째, 농업분야에서도 아프리카 연구가 수행되었다.¹¹⁾ 새마을운동 등과 같은 농업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 식량기지 확보 차원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전형적인 농업대상국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 등이 수행되었으며,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수산분야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대비하여 아프리카의 SACU 지역 국가들¹²⁾에 대한 수산 현황 연구에서 시발되고 있다.¹³⁾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접근 시각은 한국과 SACU 시장의 통합에 대비한 양자협정을 위한 사전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협력사업의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SACU 지역 국가와의 수산물 시장통합에 대비한 경쟁력 접근 분석도 중요시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통한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보다 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산분야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시장, 자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국격 제고 등의 모든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결과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이와 같은 종합적 접근방법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둠으로써 정책적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11) 농업분야의 아프리카 연구는 이미 198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주제도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협력사업의 관점에서 연구가 추진되었다(『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농업부문 개발 협력 방안』, 강봉순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12) South Africa Custom Union의 약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등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13) 홍현표 외, 『전략적FTA 추진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 연구』, KMI, 2010.

3. 연구의 추진 체계 및 내용

1) 연구의 추진 체계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아프리카 간의 발전적 협력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체계를 갖추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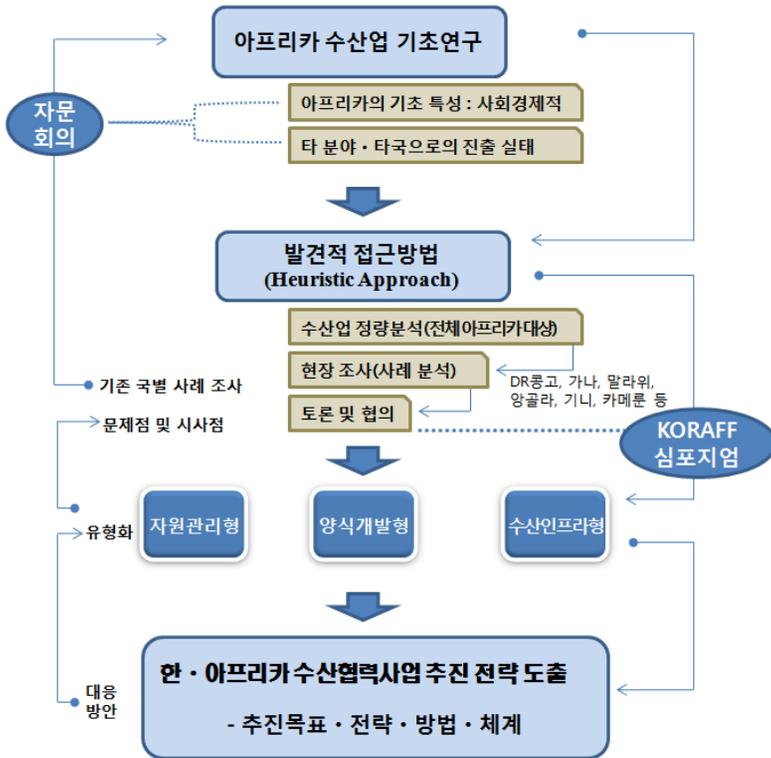
우선 본 연구과제의 연구진은 아프리카 수산업 기초연구, 발전적 접근 방법을 활용한 사례 분석 및 한·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의 전략 도출 과제 등 핵심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¹⁴⁾을 활용하여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수산협력사업의 발굴과 활발한 토론을 시도하였다. 이때 KORAFF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아프리카 주요국의 수산부처 관계자는 물론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자국의 수산협력 수요 혹은 자원 관리의 필요성 등 지역적 현안을 제기하고 이를 토론하였다.

그리고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빈곤 문제의 심각성에서 출발하는 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수산분야와 공유될 수 있다는 인식을 협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진, 수산분야는 물론 이외 분야의 아프리카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자문회의 그룹, 그리고 KORAFF 회원 그룹 등의 원활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 정보의 빈곤과 수요 발굴

14) 2010년 12월에 창설된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은 창설 시점 기준 회원 152명, 참여국가 8개국(앙골라, 가나, 케냐, 남아공, 나미비아, 가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11년도 국제심포지엄을 앙골라(2011. 9. 21)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KORAFF 회원 규모가 개인 기준으로 200명, 국가 수 기준으로 15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및 평가 등의 애로 사항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중층적 추진 체계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발전적 접근방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상국가의 유형화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등을 수행하였다.



| 그림 1-2 | 본 연구의 추진 체계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과 이를 위한 협력사업의 전략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일반적 상황과 협력 필요성 및 우리나라 주요 부문의 진출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수산부문의 아프리카 진출 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산협력 모델을 수산자원 관리형, 양식산업 개발형, 수산인프라 지원형 모델로 유형화하여 세부적 연구를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목표와 전략, 그리고 추진 방법과 추진 체계, 중장기 단계적 추진 로드맵 등이 제시되었다. 실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제시된 세 가지의 유형에 따라, 협력사업의 발굴, 기존 협력사업의 사례, 문제점 및 시사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유형별로 가나, 말라위, DR콩고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수요 발굴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수산분야는 양식장 개발협력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개발협력 수요 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제시될 것이다.

끝으로 제7장은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아프리카 경제 현황과 협력 필요성

1. 저성장 원인과 발전 가능성

1) 절대빈곤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들 지역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곤과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UN, OECD, 각 지역개발은행¹⁵⁾ 등과 같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아프리카의 빈곤과 저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새천년개발목표(MDGs)’로서 제시되는 각종의 사회·경제·문화 이슈들은 이와 같은 빈곤과 저개발로 인해 야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표 2-1 | 아프리카의 빈곤 관련 지표(2011)

항목	SSA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남미
인간개발지수(2007)	0.463	0.548	0.671	0.731
빈곤층 비율(%)	63.0	37.6	28.3	14.1
평균 기대수명(세)	54.5	65.9	72.4	74.4
영아 사망률(1천 명당, 명)	129	69	26	22
15세 이상 문자해독률	61.6	62.8	93.5	91.0
평균 교육기간	4.5	436	7.2	7.8

주: SSA(Sub-Sahara Afric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자료: UNDP통계(<http://hdr.undp.org/en/>)

15) 대표적인 지역개발은행으로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2010년 인구는 10억 명이며 이 중에서 3억 명을 상회하는 아프리카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30% 이상에 해당하며, 세계에서 빈곤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큰 문제는 아프리카의 이러한 빈곤 현상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곤 해소를 위한 경제 개발을 위한 초기 여건 혹은 조건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러한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 나올 계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 10대 최빈국¹⁶⁾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1인당 연소득이 250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어 극빈 계층에 속한다.

앞에서 설명한 ‘빈곤의 함정’은 빈곤의 되풀이는 물론 아프리카의 절대빈곤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UN은 2015년에 아프리카의 빈곤 인구가 현재의 3억 명에서 1.3배 늘어난 4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까지 개도국의 빈곤 감축을 목표로 지난 2000년에는 대규모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인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가 추진되고 있으나, 아프리카에서는 그 성과가 미미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에서 극빈 지수로 이용한 인간개발지수(HDI)나 1인당 국민소득 외에 다른 선별적 지표¹⁷⁾를 통해서 보더라도 아프리카의 빈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빈곤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빈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질병 만연, 유아 사망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10명의 어린이 가운데 1명 이상이 5세 이전에 사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양 실조, 각종 질병(에이즈, 말라리아¹⁸⁾ 등)의 확산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평균

16) UNDP가 발표하는 HDI 기준으로 2011년 10대 최빈국은 DR콩고, 니제르, 브룬디, 모잠비크, 차드,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임.

17) 유아사망률, 문맹률, 기대수명, 교육 이수율 등.

수명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남미의 평균 기대 수명이 각각 65.9세, 72.4세, 74.4세인 것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54.5세에 불과하다.

이처럼 아프리카가 극단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 개발 정도가 낮은데다가 경제성장률마저 낮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 4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었다. 경제지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데 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을 보면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1960년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소득 수준은 동아시아와 거의 같았지만, 지금은 동아시아의 1/6 수준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이러한 빈곤의 현상 속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그렇다면 아프리카는 왜 ‘빈곤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비해 경제 수준이 오히려 높았다. 이러한 논리에 가장 흔히 드는 사례가 바로 1960년대 가나와 한국 간 소득 차이로, 당시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0달러였던 것에 반해 한국은 100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현재 아프리카에서 국민소득이 최상위층에 속하는 가봉은 당시 국민소득이 350달러로 우리나라의 3배 이상에 달했다.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이와 같았다.

2) 저성장의 이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개도국이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경제 성장을 꾸준히 이룩한 것에 반해 아프리카는 왜 오히려 상대적 빈곤에 처하게

18) 말라리아의 경우 건강한 신체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는 감기 정도로 지나가지만, 신체가 약해져 있을 때는 치사율이 매우 높아진다.

되었는지가 아프리카를 ‘빈곤의 함정’에 빠뜨린 저성장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규명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유로 인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즉 아프리카의 저성장 및 저개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전체에 걸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 이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저성장 및 저개발의 원인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을 보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아프리카가 직면하여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자연·환경적 요인은 물론이거니와 인종·종족·역사·문화적 요인, 식민지 유산, 국민들의 개발의욕 부족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을 이미 이룩한 국가들의 현 국민들의 생활 및 습관에 비추어 아프리카의 저개발 원인을 국민의 무능력과 게으름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러한 시각은 인종차별적 혹은 식민주의 사관에서 비롯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빈곤 및 저성장·저개발의 원인으로 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아프리카의 저성장 원인을 규명하는 데 조심해야 할 것은 아프리카의 저성장 및 저개발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원인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개발에 대한 수많은 원인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적으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 방식들은 일면적 또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유의점을 고려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아프리카의 저개발 원인을 규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의 저성장 및 저개발은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악순환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결과로 아프리카 국민들은 대부분 ‘자국 발전’에 대한 ‘비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성장에 대한 ‘확신’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인적배양 혹은 인적양성(capacity

building)을 의미한다.



자료: 박영호 외(2008), p. 51

| 그림 2-1 | 아프리카 저개발의 구조적 원인

아프리카의 ‘빈곤의 함정’ 원인에 대한 연구는 다수가 있으며, 그 논의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종다양한 연구의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다.

즉 첫째는 대외적 요인에서 아프리카의 빈곤과 저성장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자연환경과 지리적 요인, 세계적인 교역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내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자국의 정책 무능으로 인한 실패, 부정부패, 관계자들 및 국민의 의지 부족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⁹⁾

19)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해 박영호 외(2008, pp. 47~49)는 미국을 대표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제프리 삭스 교수 등의 개발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쟁점을 잘 정리하고 있다.

3) 경제 발전의 가능성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빈곤과 저성장의 나락에 빠져있는 아프리카의 경제를 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즉 현실의 논의에서는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의 관점을 비관론(Afro-pessimism)과 낙관론(Afro-optimism)으로 분명하게 구분 짓는다.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간에 걸쳐 치유될 수 있으며,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관론적인 시각이다.

이에 반해, 낙관론은 최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개혁과 개방화가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는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낙관론자들은 다른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못지않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1) 부정적 시각(Afro-pessimism)

아프리카의 각국들은 나름의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빈곤의 악순환에 따른 개발자금 및 집행능력의 절대적 부족, 교육환경 부재로 인한 인적 자원의 부족, 부정부패 등과 같은 문제들에 의해 그들이 기대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지 못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은 비관론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면서 해외투자자들의 기피 지역으로 분리되어, 경제 성장을 위한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못했다.²⁰⁾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1960년대 초반 독립 이후 50여 년이 지난 현재,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국가들(인도, 인도네시아 등)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재의 경제 수준은 낙후되어 있고 향후 경제 발전 가능성 역

20) 성장과 희망보다는 퇴보와 절망이라는 암흑의 역사 속에서 이른바 ‘위기의 대륙(Continent in Crisis)’으로 명명되었다.

시 불안정한 정치·사회 상황으로 말미암아 희망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아프리카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법과 제도의 합리적인 입법과 집행 과정을 유린하고 있다. UN 자료에 의하면, 아프리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약 1,480억 달러)이 이러한 부정부패로 흘러들어 간다고 보고 있다.²¹⁾ 단적인 사례로서 1963년에 독립한 케냐는 1980년까지 연평균 6.5%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지만 1990년대부터 독재에 의해 부정부패가 확산되면서 경제가 정체되었다.

한편,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원유, 광물 등)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일부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부정부패 등이 만연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관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이들은 자원 개발 자체가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비관론적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현실이다. 즉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은 지금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곳에 풍부하게 존재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에서 경제가 성장한 국가의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풍부한 자원을 경제 성장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자국의 자원을 수출하여 확보한 자본을 자국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도로, 항만, 통신, 토목, 교육, 의료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나 차드와 같은 산유국에서조차 원유로 벌어들인 자본이 이러한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에 투입되지 않고, 독재자나 일부 계층의 부정부패

21)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해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다. CPI란,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계량화한 지수를 말한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CPI 5점 이하를 기록, 부패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은 지속된 것이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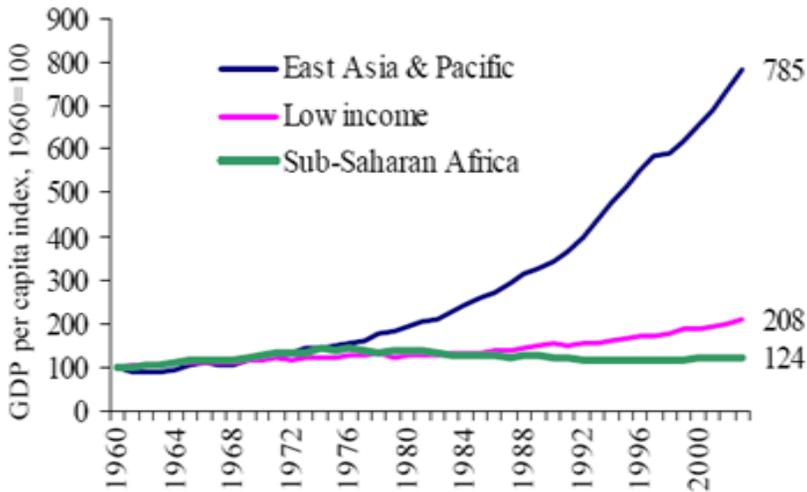
독재정권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민주적 통치시스템(good governance)의 부재를 낳으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투자의 장애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은 원유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국부가 국가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인프라 산업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은 아프리카의 정부 체제는 부정부패, 사회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경제 성장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으며, 심각한 치안 상태는 해외투자자들의 발길을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치유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2000년대 중반부터 아프리카의 경제는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유가 상승에 기반을 두고 있고 아프리카의 대내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한 결과라고 볼 수 없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22) 원유 수출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확보한 나이지리아는 1960년 독립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4,000억 달러의 국가 재정이 부정부패로 이용되면서 사회·경제적 인프라는 개선되지 못했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2011년 HDI 기준으로 187개국 중 156위이며, 실업률이 50%에 달하고, 인구의 60% 이상이 절대 빈곤에 놓여 있다.

23) 최근 『Africa Business』라는 잡지는 막대한 오일머니가 유입되고 있고, 거시적으로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아프리카 경제가 30년 전과 구매력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이를 ‘아프리카의 수수께끼(African Conundrum)’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아시아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 인구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박영호 외(2008)

| 그림 2-2 |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의 1인당 실질 GDP 비교

즉 지금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은 대내외적인 성장 변수 중에서 대외적인 변수만이 작용한 결과로 내적인 성장 변수가 제외된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내적 변수에 의한 성장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 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부터의 일인 것이다. 아프리카의 대내적인 경제 성장 변수에서 정치 불안과 부정부패, 물적·인적 시스템의 낙후, 자국 자본의 부족, 높은 실업률 등은 구조적인 위협 요소가 되고 있어 내적인 경제 발전이 수월하게 전개되기는 어렵다.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한 인력 확보가 노동의 질 개선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즉 아프리카는 저렴한 노동력은 충분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한 높은 질의 노동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력을 아프리카 국가들은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주요 3대 변수 중에서 자본과 노동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낮은 자본력과 노동의 질은 ‘저투자 → 저생산 → 저저축 → 저소득’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²⁴⁾

이 외에도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에이즈의 확산, 종족 간 이해관계 등 다양하다. 즉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자본, 노동의 제약은 물론 이들을 제외한 사회·정치·문화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의 경제 성과 정도로는 현재 아프리카가 직면한 낙후성(절대 빈곤 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으며, 아프리카의 인구 성장률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소득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성장률 기준은 최소한 6~7%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비관론적 시각은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²⁵⁾ 등과 같은 범아프리카 차원의 자구 노력이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에 밑거름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에 병목현상이 되는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요인은 앞으로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며,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변수가 될 것이다.

(2) 긍정적 시각(Afro-optimism)

이러한 비관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프리카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이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것은 앞서서도 설명한 바 있는 아프리카의 자구 개혁 노력이다. 즉 아프리카 국가 혹은 지역에서 비관적 시각론의 주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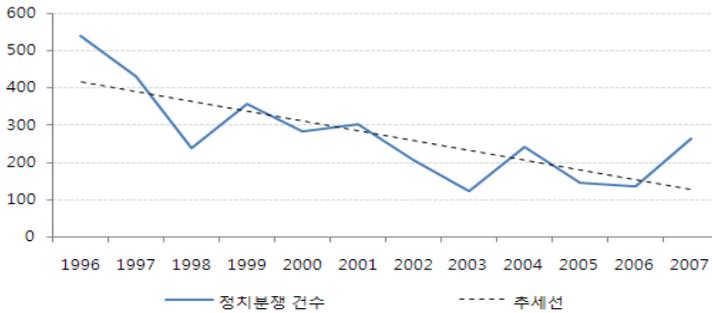
24) 아프리카에 투자된 외국 자본은 세계 국제직접투자(FDI)의 3.2%에 해당하는 290억 달러(2005년 기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일부 산유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25)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 기치 아래 2001년 7월 수립된 경제 발전 종합플랜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아프리카가 변방화되는 것을 막고 정치·경제적 연대 강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 AU)과 같은 지역 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AU에서 최근에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이라고 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의 각국 정부들의 자구 노력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요 메시지는 바로 아프리카의 부존자원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으로부터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에 따른 아프리카의 발전 가능성이 아프리카 각국의 정부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자구 노력 역시 빠르게 전개·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공사(IFC)가 매년 발표하는 ‘경제개혁 지수’에서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 개혁 항목에서 항상 최하위권을 형성해 왔던 아프리카가 동유럽과 OECD 선진국에 이어 3위권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 환태평양, 동아시아, 중남미보다 경제 개혁에서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비관론적 시각에서 제기됐던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치안 부재(분쟁, 내전 등)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개선되면서 해외투자자들을 불러 들이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즉 정치 분쟁 건수가 1990년대 중반에 최대 600여 건에 이르던 것이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2007년에는 1996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안정을 가져오고 있으며, 곧 해외투자자들의 주목을 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료: 상계서

【그림 2-3】 아프리카의 분쟁 감소 추이(1996~2007)

또한 이러한 경제 외적인 환경 변화 외에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각종 지표들에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가 장기에 걸쳐 정체 혹은 상대적 퇴보를 보여 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평균적으로 3~5%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경제 성장세로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낙후된 경제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장세는 국제 자원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원 수출에 바탕을 둔 일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²⁶⁾ 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의 산업구조가 원유, 농산물, 광산물 등 일차산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모노컬처’형 단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후진성으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 전반이 기후 변화와 일차산품의 국제시세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일부의 소수 국가들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장기간의 경제 침체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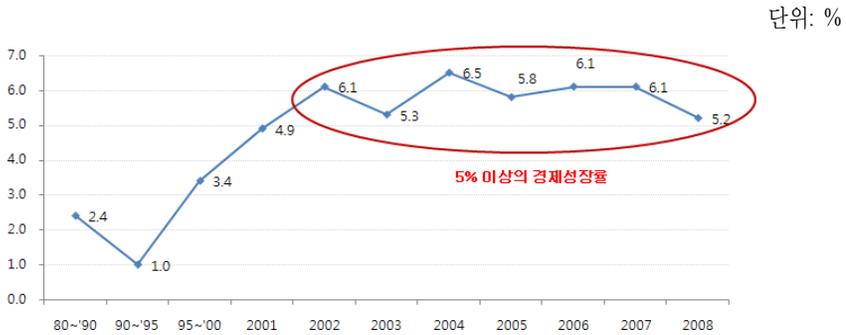
26) Paul Collier, “Primary Commodity Dependence and Africa’s Future”, World Bank, April 2002.

따라서 정치·사회의 발전 및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도 다른 개발도상국에 버금가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즉 아프리카도 세계 경제 흐름으로의 편입 및 경제 성장의 보편성의 도입 가능성이 증명되면서 고도 성장세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지표로서 국제직접투자(FDI)의 유치는 한 국가의 경제 개방화 수준과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국내 자본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직접투자에 의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아프리카의 직접투자 유치 확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미 상당수의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아프리카 투자기회 선점을 위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직접투자 유입이 연도별로 큰 부침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비중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민주화 추세와 함께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 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같이 불안한 국내 정치정세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는 국가도 있지만 모잠비크나 탄자니아와 같이 석유자원이 거의 전무한 국가들도 6~7%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데에서 아프리카 발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짐바브웨 등과 같은 몇몇 실패국가(failed states) 또는 취약국가(fragile states)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가들이 나름대로 발전경로를 서서히 찾아가고 있다. 2000~2006년 동안에는 26개국이 4% 이상의 높은 성장을 실현했는데, 이들 26개국은 현재 아프리카(SSA) 인구 및 GDP의 각각 70%,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상계서

[그림 2-4]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추이

2. 아프리카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 고조

1) 세계의 아프리카 지원 현황

(1) 아프리카 지원규모 추이

OECD는 1970년대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한 ODA 총액이 5,480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에서 32.4%에 달하는 1,776억 달러가 아프리카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ODA사업이 급증했지만, 1990년대 들어 다소 정체되는 면모를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2008년의 9년 동안 ODA 총액은 8,736억 달러였고, 이 중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규모도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 총 3,528억 달러로 40.4%를 기록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줄곧 최대 수원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아프리카에 대한 ODA 원조는 각 시대별로 일부 국가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집트, 탄자니아 등에 ODA 원조가 집중되다가 1990년대 초에 에티오피아와 소말

리아 등을 비롯한 동부 아프리카에서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에 ODA가 집중되기도 했다. 최근의 ODA 원조는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이집트를 비롯하여 탄자니아 등에 대규모로 집중되고 있으며, 공여국의 ODA 전략에 따른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 표 2-2 | 시기별 ODA 수혜지역 비중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개도국 총액	548,020 (100.0%)	738,720 (100.0%)	748,850 (100.0%)	873,630 (100.0%)
아프리카	177,600 (32.4%)	273,920 (37.1%)	293,840 (39.2%)	352,790 (40.4%)
아메리카	(8.7%)	(9.1%)	(10.4%)	(7.9%)
아시아	(42.6%)	(36.3%)	(30.2%)	(32.1%)
유럽	(2.1%)	(1.8%)	(4.3%)	(5.5%)
오세아니아	(3.7%)	(3.3%)	(3.0%)	(1.3%)
기타 지역	(10.4%)	(12.4%)	(12.8%)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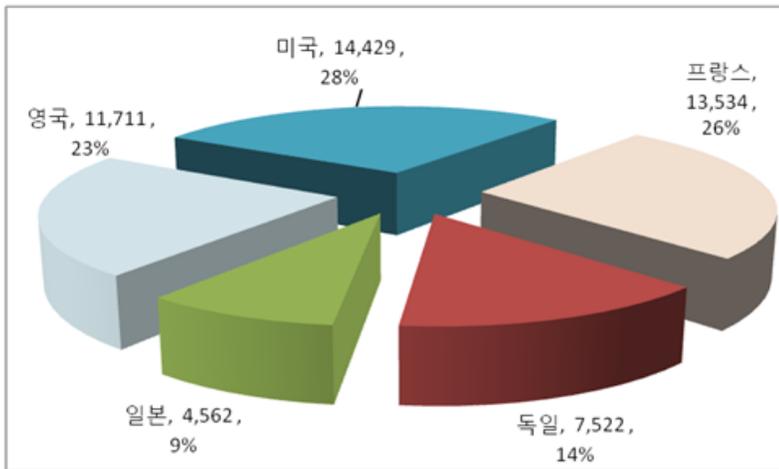
자료: OECD/DAC 통계

(2) 공여국별 특징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유럽 국가들의 대 아프리카 식민 통치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 즉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되는 아프리카 식민지가 1990년대 중반에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들을 식민 통치해 왔던 국가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협력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아프리카에서 만연하고 있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등),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익 추구(미국 등)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그 밖의

나라가 공여국으로 참가하고 있다.²⁷⁾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공여국의 ODA 지원규모는 미국이 58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영국(54억 달러), 프랑스(51억 달러), 독일(34억 달러), 일본(26억 달러)의 순이다.²⁸⁾ 반면, 개별 공여국 자체의 ODA사업비 중에서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비중으로는 프랑스가 60.0~68.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영국이 차지했다.



주: 백분율은 상위 5개국 중 차지하는 비율(%)
자료: OECD/DAC

| 그림 2-5 | 주요 선진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현황(2002~2006)

2) 주요국의 대(對)아프리카 원조 사례

(1) 미국

미국의 ODA사업은 1947년 ‘Marshall Plan’²⁹⁾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27)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해서는 홍현표(2010), 박영호(2008) 등을 참조.

28) 중국은 DAC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들 나라와 비교하지는 못한다.

29) 1947~1951년 기간 중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대해 수립한 대외원조 계획을 말한다. 공식적으로는 ‘유럽부흥계획’이다.

1951년 ‘상호안전보장법’, 1961년 ‘대외원조법’이 제정되어 국제개발처 (USAID)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최근 미국의 대외원조는 안보적 목적의 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다.³⁰⁾ 즉 미국은 정치·사회적 불안에 의해 초래되는 빈곤 현상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ODA 원조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 중의 하나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³¹⁾

이러한 미국의 ODA 지원 전략은 아프리카에 대한 ODA 지원에도 그 성격이 반영되고 있는데, 주요 대상국은 DR콩고, 에티오피아, 수단,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들 전략적 핵심국가에 지원하는 비중이 아프리카 전체 원조 규모의 42%에 이르고 있다.³²⁾

미국의 ODA 원조는 2008년에 총 26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한 독일의 139억 달러의 2배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GNI 대비 0.18% 수준³³⁾으로서 경제 규모에 비해 ODA 지원 비중이 OECD국 중 하위 그룹에 속한다.

30) ‘9·11 테러’를 계기로 하여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한 ODA사업.

31) 권을 외,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통일연구원. 2008. 12.

32) 2002~2006년 기간.

33) 평화봉사단 등 민간부문의 개발원조액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표 2-3 | 미국의 대외원조 사업 및 예산구조

구분	사업	2008년	2009년	2010년 (요구액)	
경제원조	양자 간 경제 원조	· 개발원조(DA)	1,624	2,038	2,734
		· 세계보건과 아동생존사업(GHCS)	6,498	7,189	7,595
		· 평화봉사단 지원	331	340	373
		· 새천년도전협회(MCC) 지원	1,544	875	1,425
		· 무역 및 개발진흥청(TDA) 지원	50	51	55
		· 미주재단(IAF) 지원	21	23	23
		· 아프리카개발재단(ADF) 지원	30	33	30
	정치 안보적 경제 원조	· 경제지원기금(ESF)	5,362	7,018	6,504
		· 유럽,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원조	690	893	762
		· 민주기금 지원	239	116	-
		· 국제마약통제와 법집행(INCLE)	957	1,464	1,947
		· 안데스지역 마약퇴치사업(ACI)	322	315	-
		· 군비확산, 반테러, 지뢰제거사업(NADR)	497	652	765
	인도 주의적 경제 원조	· 국제재난원조(IDA, IDFA)	670	750	880
		· 체제전환 지원사업	45	50	126
		· 이민과 난민원조	1,338	1,578	1,480
		· 긴급난민과 이민지원기금(ERMA fund)	76	40	75
		· 평화를 위한 식량원조 외(PL480)	2,060	1,921	1,690
	군사 원조	· 평화유지활동 지원(PKO)	261	395	296
		· 국제군사교육 및 훈련(IMET)	85	93	110
		· 대외군사금융 지원(FMF)	4,719	5,036	5,274
	다자개발 원조	· 국제기구 및 사업 지원(IO&P)	320	353	357
		· 국제금융기구 지원(IFLs)	1,277	1,493	2,341

자료: 유웅조(2009), U. S. Dept. of State

| 표 2-4 | 미국의 아프리카 원조 실태(2002~2006년)

원조 중점국	원조비중 (%)	비고
콩고민주공화국	11.6	·세계적 광물자원 보유국 ·자원 개발 및 전후 복구 관련 사업 진출
수단	9.6	·이슬람 지역 내 ‘테러와의 전쟁’ 지원 ·중국의 수단석유개발권 장악 견제 필요
에티오피아	9.0	·이슬람지역 내 기독교 국가로 친미 국가 ·지역분쟁 적극 개입(에티오피아 지원)
나이지리아	5.2	·세계 6위 원유생산국 ·미국과의 높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케냐	3.5	·지정학적으로 미국에게 중요 ·동아프리카 테러 근절 기지
남아공	2.4	·세계적 광물보고, 아프리카 진출 최대거점국가 ·남아공과 FTA 추진
라이베리아	1.4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미국 이주 해방노예 거주)

자료: OECD/DAC 통계

미국의 대 아프리카 ODA 지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 및 자국 안보라는 기본 방향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외에도 자원 확보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의 목적도 원조 성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보 목적의 지원대상국은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케냐, 수단 등이며, 자원 확보 목적은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목적으로 한 국가는 남아공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향을 보이는 미국의 ODA 정책은 아프리카 저개발·저성장장의 원인을 부패 권력, 정치 불안, 투명성 부족,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성, 국가 시스템의 퇴행성 등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업의 민영화, 민주화, 투명화 제고,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이는 곧 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³⁴⁾에 근거한 대외정책이라고 할

34)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란 미국식 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한 대외전략으로서 1989년 J. Williamson 교수가 명명하였으며,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자유

수 있는 것이다.³⁵⁾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미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는 빈곤 해소보다는 안보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최근에 부쩍 대 아프리카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국의 ODA 정책에 따라 미국의 대 아프리카 ODA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 중국

사실 중국은 이미 1953년부터 대외원조를 시작했고,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1955년)에 당시의 주은래 총리가 참석하는 등 제3세계 중 아프리카를 주요 외교 대상으로 놓았다. 이는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행하는 ODA 지원의 성격(자원 확보)과는 달리 당시 국제 사회의 이데올로기(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대립 상황에서 중국의 이데올로기 지지와 공산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대외원조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던 중국이 1970년대 후반에 국가 주석으로 등장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1979년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원조 수혜국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에 대한 중국의 원조를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 방침은 오히려 그동안 지속해 왔던 대외원조에 반향을 일으켜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에 중국은 원조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수혜국을 늘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적용했다. 이는

화, 민영화, 정부규제의 축소 등의 정책기조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당시 남미 개혁에 대한 처방으로서 이와 같은 정책기조가 적용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사실상 미국식 경제체제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는 패권주의의 한 유형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35) 박영호 외(2008), p. 48.

1982년에 제시된 ‘대 아프리카 협력 4개 원칙’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표된 것이다.³⁶⁾ 따라서 당시의 중국의 대외원조는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위한 원조로서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 특징을 보였다.

| 표 2-5 | 중국의 아프리카 대외원조사업 추진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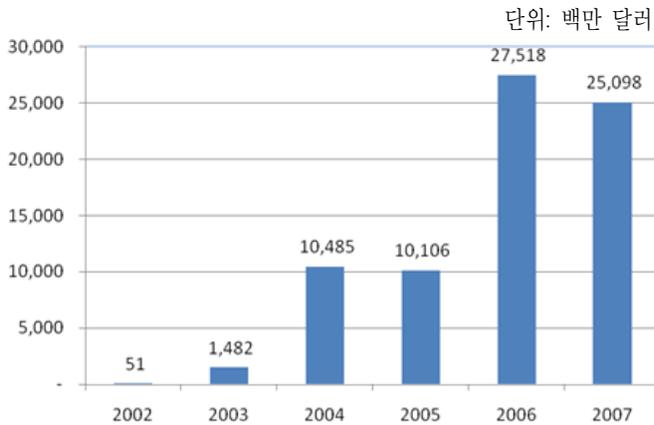
연도	주요 활동 내용
1955	주은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 참석
1963	알제리에 최초의 의료관계자 파견
1975	탄압철도 개통(잠비아-탄자니아 간 1,860km 철도, 5억 달러 투자)
1982	대 아프리카 협력 4원칙 발표 - 호혜평등, 실리추구, 협력 다양화, 공동 발전
2000. 10	제1회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각료회의
2004. 7	대외투자국가별 산업지도 목록 발표
2009. 10	제4회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최(카이로)

자료: 강준영(2008), pp. 269~270

그러나 이렇게 침체되었던 중국의 대외원조는 2000년대 들어서 활발한 경제 성장의 결실을 보면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에 대한 대외원조의 규모나 직접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의 아프리카 원조가 이데올로기적 성향 혹은 외교적 입장의 처신이 목적이었다면, 최근의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는 경제 성장의 지속성

36) 이때 제시된 협력 4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결과 우호,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떠한 권한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는 쌍방의 현실적인 요구와 가능한 조건에 따라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적은 투자, 짧은 공사 기간으로 조기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우수한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다양한 패턴의 원조사업이 가능하며,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며, 기술 서비스 제공, 기술 및 관리자 양성, 과학 기술 교류, 건설 프로젝트 투자, 공동 생산, 공동 사업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넷째로는 수원국의 자력갱생 촉진 및 자국 경제의 발전도 도모하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을 위한 자원 확보에 그 목적을 두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면모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수치를 보면,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와 교역 규모이다. 전자의 경우, 중국은 2002년에 비해 2007년에는 무려 492배가 늘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2008년에 1,068억 달러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료: 중국의 소프트파워(2010), 국회도서관, p. 45

| 그림 2-6 | 중국의 대외원조 추이

중국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 동안의 연간 10% 이상을 기록하면서 자원 수요가 크게 늘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자원³⁷⁾과 시장 확보가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중국이며, 중국은 국제적으로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국의 ODA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자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수출(노동력 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37) 2007년 1~2월에 걸쳐 후진타오 주석이 순방한 아프리카 8개국 중에는 산유국인 카메룬,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와 희소금속이 풍부한 남아공과 나미비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대외우대 차관 가이드를 보면, 대외원조는 중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³⁸⁾

둘째, 중국의 대외협력 지원은 주로 소규모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물자 공여와 같은 소규모 무상원조, 훈련 프로그램 등의 소규모 기술협력사업을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적용하면서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대외원조사업을 유지하고, 전력, 원유, 통신, 항만 등의 대규모 인프라사업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수단 등과 같은 일부 자원 국가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⁹⁾

| 표 2-6 | 중국 대외원조의 지역별 유형(2002~2007년)

구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계
천연자원생산	9,432	18,585	4,788	32,805
인프라 및 공공사업	17,865	7,535	6,438	31,838
불특정사업	5,024	608	2,276	7,908
인도주의	802	32	159	993
계	33,123	26,760	13,661	73,544

자료: 기획재정부(2009. 4. 13), 보도자료 참조(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과 영향분석)

셋째,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징성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 정부 청사나 국제 회의장 등의 건립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38) 다시 말해 중국의 차관은 대부분 tied 차관이며, 타국의 기업들과 경쟁입찰이 가능한 untied 차관은 거의 없다.

39) 2006년 중국 국영에너지회사(CNOOC)는 나이지리아 유정의 45% 지분을 위해 약 30억 달러를 지불했다. 또한 수단에는 800마일의 수송관 건설을 위해 적어도 2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에 따라 수단의 원유 수출 중 64%는 중국으로 수출됐다. 앙골라는 2006년 상반기에 중국 원유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제일 큰 단독 원유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질렀다.

있는데, 이는 수원국 국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홍보효과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 외교부 청사, 수단외 국제 회의장 등이 그것이다.

넷째, 최근 들어 중국은 아프리카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전문가 양성, 수십 개의 병원과 1백여 개의 병원 건립, 4천 명 규모의 장학생 선발 등의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 대륙 안으로 대규모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사업가, 기술 전문가, 의료진, 단순 출장자, 지도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자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활성화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갔다. 예컨대, 해외투자 위험 심사 및 외자 사용 한도 등을 폐지하는 한편, 아프리카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절차 간소화,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여 현지 진출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직접투자에 대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행 아프리카 지점을 설립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지원기금’을 창설하기도 했다. 또한 아프리카 11개국에 ‘중국투자개발무역촉진센터’가 설립되어 중국 기업에게 현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국별·산업별 대외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투자대상국별 산업지도 목록’을 공표하였는데, 그 대상국은 아시아 2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등 총 67개국에 이른다.

| 표 2-7 | 중국의 아프리카 13개 투자대상국별 산업지도 목록

대상국	농림 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집트	면화 재배	석유 천연가스	냉장고, 공조기기 등 전기기기 및 부품, 자동차, 오토바이, 섬유,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금속제품, 화학원료 및 제품	무역, 소매, 건설, 관광
수단		석유 천연가스	트랙터, 디젤엔진, 농업용 기계, 석유제품, 의약품	지질조사, 건설
알제리		석유 천연가스	냉장고, 공조기기 등 전기기기 및 부품, 식품, 의약품	건설
모리타니아	어업		농작물가공, 피혁, 모피	
말리		금광	농작물 가공, 의약품,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건축재료	전화통신
나이지리아	과일 식물 유지	석유 천연가스	냉장고, 공조기기 등 전기기기 및 부품, 트랙터, 디젤엔진 수송기기, 오토바이, 자전거, 철강, 플라스틱제품, 금속제품, 의약품	무역, 소매, 건설
케냐			수송기기 및 부품, 농업용 기계, 의약품	무역, 건설, 소매
탄자니아	마		트랙터, 디젤엔진, 농업용 기계, 의약품	무역, 소매, 건설
잠비아	곡물	동·금광	농산물 가공, 수송기기 및 부품, 오토바이, 자전거, 삼륜차	
모잠비크	수산업		수송기기 및 부품, 오토바이, 자전거, 의약품, 일용품, 도기제품	
나미비아	어업	아연	농작물가공, 섬유의류, 전기기기, 플라스틱 제품	
마다가스카르	어업 수산업		농작물가공, 섬유의류, 의약품	
남아공		크롬 철광석	냉장고, 공조기기 등 전기기기 및 부품, 전자기기, 비디오, CD플레이어, 금속제품, 플라스틱제품, 섬유, 식품, 건축재료	무역, 소매, 건설, 수송, 금융

자료: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의 아프리카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이기도 하다.

중국의 아프리카 ODA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2007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⁴⁰⁾ 실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중국의 ODA나 직접투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말리,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등이다. 특이한 점은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의 기준은 중국과 미국의 비교인데, 이들 국가는 미국보다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즉 아프리카의 원조사업에서 중국은 미국에 비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는 규모 면에서 크지 않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원조 규모가 커지면서 그 혜택 폭이 넓어지는 ‘적하(滴下)효과’⁴¹⁾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이 5% 정도를 유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의 대외원조나 직접투자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보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⁴²⁾

그러나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사업이나 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가 않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200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에 크게 기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기업들이 자국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어 투자 대비 현지 고용 창출 효과가 낮으며, 비용최소화를 위해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 재해 방지 미비, 불투명한 자본 거래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사업 및 직접투자 전략은 미국의 워싱

40) Moyo Dambisa, *Dead Aid -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New York: Niall Ferguson, 2009.

41) 소위 ‘trickle down effect’를 말하는 것으로서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의미이다.

42) 강준영(2008), p. 281.

턴 컨센서스와 비슷한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⁴³⁾로 불릴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관련하여 최근의 성향을 보면,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의 목적과 이것이 추구하는 실리를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은 미국과 대칭을 이루는 패권주의에 의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 확보가 그 핵심이라는 것이다.⁴⁴⁾

(3) 기타 국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사업을 국가 유형별로 보기 위해 미국과 중국을 살펴보았다. 이외의 기타 국가들은 크게 인도주의형, 경제실익형, 식민지관리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① 인도주의형 원조국가

인도주의형 원조국가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사업의 목적을 인도주의에 두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사실 절대적으로 인도주의에 기인한 ODA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상대적인 성향에 근거한 것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국가들은 OECD/DAC에서 요구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이와 관련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

43) 미국에 의한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국 패권에 대항하여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을 말한다. 2004년 중국 칭화대(淸華大) 라모(J. Coopa Ramo) 교수가 처음 제시했다. 소위 제3국 원조는 내정 불간섭, 단계적·점진적 경제 개혁, 균형 발전 전략, 타국 주권 존중 등의 대외정책 기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4) 다르푸르 학살 관련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중국의 초청으로 2011년 6월 29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을 면담하는 등 중국의 국민대우를 받았다. 이어 칭다오의 농업과학원을 방문하고, 성(省) 정부 측과 농업, 무역 관련 협의를 하였다.

는 무상원조가 원조사업의 대부분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② 경제실익형 원조국가

경제실익형 원조국가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사업이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원조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여기서 경제적 실익이란 교역(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 확대)과 자원 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그룹에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대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제실익형 국가인데, 일본의 원조 성향은 아시아 각국에 ODA를 제공할 때, ‘일본의 생산물, 특히 설비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재를 상대국 정부가 구입하게 하고 그 소요자금을 상대국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다.⁴⁵⁾ 한편, 일본의 원조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높이는 데 두고 있다. 예를 들어 UN 안보리 국가가 되기 위한 속내를 원조사업에서도 보이고 있다.

③ 식민지관리형 원조국가

식민지관리형 원조국가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 국가를 식민지로 두었던 국가가 여전히 과거 식민지 지역 내지는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행사하기 위해 원조를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나라로는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즉 이 국가들은 명목적으로는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를 원조사업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성향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조가 집중되고 있다. 즉 과거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식민지형 원조국가 및 원조대상 국가의 짜임을 보면, 프랑스는 주로 모로코와 세네갈, 영국은 수단과 우간다, 포르투갈은 앙골라와 모잠비크에 자국의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45) 박홍영(2003), “일본형 원조외교의 특징 및 변화상 고찰-서구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국제정치논집』, 제3집 제4호, 2003, pp. 381~399.

3.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협력사업 실태

1) ODA 사업 실태

(1) 전체 ODA사업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는 2009년 현재 약 8억 1,600만 달러로서 그 중 양자원조 581백만 달러, 다자간 원조 235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ODA 규모의 GNI 대비 비중은 0.10%에 불과하여 향후 2015년까지 0.25%로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ODA의 61.5%를 차지하는 양자 간 원조금액 중 무상원조는 63.2%인 367백만 달러, 유상원조(EDCF)는 36.87%인 214백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 표 2-8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공적개발원조(ODA) 계	752.32	455.25	696.11	802.34	816.06
양자간 원조	463.32	376.06	490.52	539.22	581.10
무상원조	318.00	258.95	358.33	368.67	366.99
프로젝트/ 프로그램	184.99	81.58	134.31	99.96	159.09
기술협력	80.16	116.78	164.08	181.05	143.27
행정비용	19.38	25.31	31.43	31.51	27.76
기타	33.47	35.29	28.50	56.16	36.87
EDCF차관(유상)	145.30	117.11	132.19	170.55	214.13
다자간 원조	289.01	79.19	205.59	263.12	234.94
GNI(억 달러)	7,901.00	8,887.00	9,713.00	9,347.00	8,372
ODA/GNI(%)	0.10	0.05	0.07	0.09	0.10
ODA 승인액	771.69	892.00	1,381.85	1,667.84	1,975.95

자료: 수출입은행(2010. 3.)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ODA사업 중 대 아프리카 양자원조 규모 추이를 보면, 1999년 10.83백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97.46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71.0%인 69.18백만 달러가 무상원조이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ODA 중 아프리카에 지원한 금액의 비중은 12.9%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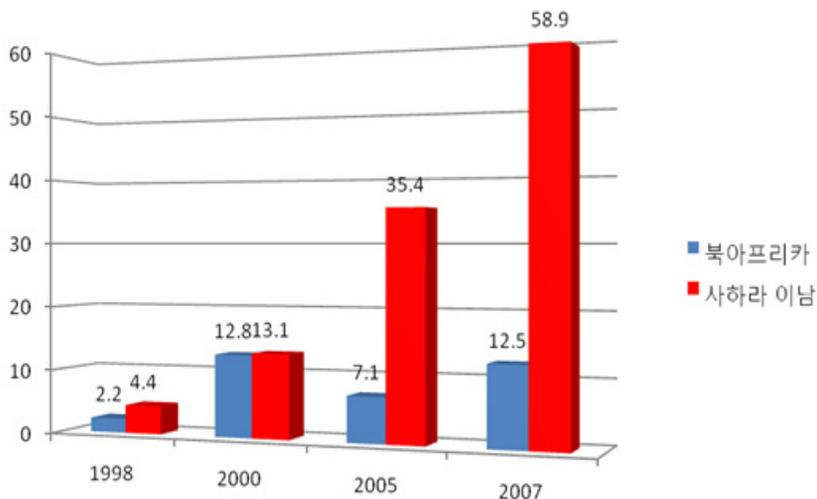
【 표 2-9 】 우리나라 대 아프리카 ODA 공역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양자원조	10.83	7.07	20.92	42.43	73.79	97.46
무상원조	3.35	4.27	8.96	17.85	51.85	69.18
유상원조	7.48	2.80	11.96	24.58	21.94	28.28

주: 총지불(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DAC



자료: OECD/D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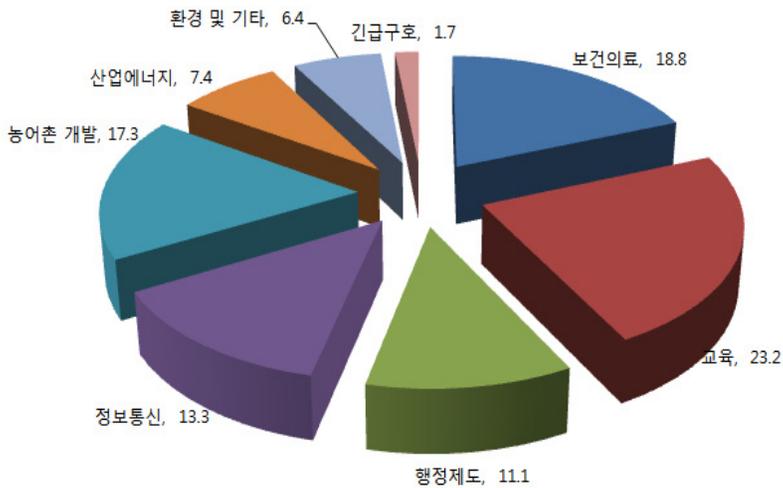
【 그림 2-7 】 아프리카 지역별 우리나라 양자원조 현황

그리고 지역별로는 2007년 현재 북아프리카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SSA) 지역에 대 아프리카 양자원조의 82.5%가 투입되고 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양자원조는 2000년 이후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어, 무상원조 중심의 지원이 절대적 빈곤이 심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문별 ODA사업

한편, 우리나라 ODA사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대 아프리카 무상원조 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 23.2%, 보건의료 18.8%, 농어촌 개발 17.3%, 정보통신 13.3%, 행정제도 11.1% 등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⁴⁶⁾를 천명하고, 초청교육, 개발경험 전수, 의료단 파견,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과 수산 분야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주: 단위는 %임, 2006~2010년 누적에 대한 비중임
 자료: KOICA, 대외무역원조실적통계, 2006~2010

| 그림 2-8 |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부문별 원조 비중(2006~2010)

46)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10위권 국가에 걸맞은 아프리카 지원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3) 수산분야 ODA사업

한편,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수산 ODA 총액은 1991~2008년 기간을 통틀어도 33억 원(3.2백만 달러)에 불과하다.⁴⁷⁾ 이는 같은 기간 중 타 지역을 포함하는 수산 ODA 총액 156억 원(1,488만 달러)⁴⁸⁾의 2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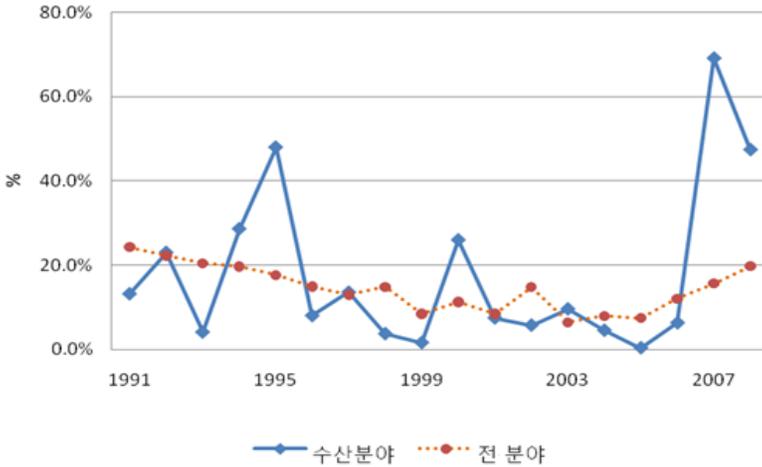
이와 같은 아프리카 지원 금액 중 대부분은 연수생 초청 등 교육 및 훈련사업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양식장 개발사업 등 기획성 사업이 비로소 추진되고 있다. 즉 2008년에는 알제리 보리새우양식장 건설 및 기술 이전사업에 7억 6,180억 원, 2008년 튀니지 패류양식 기술 이전사업 6억 2,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수산양식분야에 대한 규모 있는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⁴⁹⁾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아프리카 수산 ODA 지원 추이를 전 분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수산분야는 1995년, 2000년, 2007~2008년 등 불규칙하게 지원이 늘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 분야의 아프리카 ODA 지원 비율보다 훨씬 낮은 한 자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7) 1991년 이후 집행된 무상원조사업을 KOICA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어업분야는 대부분 그 상위 카테고리인 ‘농어촌 개발’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같은 사업형태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 및 기타’, ‘행정제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가공업은 어업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산업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본고에서 수산 ODA란 어업분야와 수산물가공업분야를 합한 것이다.

48) 이 금액 중에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다음의 대규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1992년 프로젝트 일반사업으로서 자메이카 새우양식 1억 6,100만 원, 1993년 같은 사업에 4,880만 원 투입, 1997년 우루과이 수산청 현대화사업 2억 6,440억 원, 1997년 국제기구에 SPF수산법률가 파견을 위해 사용된 1억 9,100만 원, 1999~2002년 기간 중 스리랑카에 원양어선 항법장치(일반 프로젝트 사업) 개발에 7억 200만 원(1999), 624만 원(2000), 5억 2,340만 원(2001), 그리고 5억 9,400만 원(2002) 등 약 20억 원이 투입되었다. 2005년 프로젝트 일반사업으로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에 17억 5,700만 원, 그리고 그 이듬해 같은 사업에 8억 9,980만 원이 투입되었다. 2008년 필리핀 다구판시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7억 1,1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49) 이에 대해서는 홍현표(2010) 참조.



자료: OECD/DAC

| 그림 2-9 | 수산분야 ODA사업의 아프리카 점유 비중

1991~2008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원 규모는 전체 산업 분야 ODA사업 총규모 대비 평균 14.5% 수준이었다. 그러나 수산분야의 ODA 중 아프리카 지원 비중은 21.2%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기 불규칙한 4개년을 제외하면 9.3%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수산 ODA사업을 1991년 이후 2008년까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그 내역을 국별로 제시한 것이 <부록 표 2-2>이다. 여기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수산 ODA사업은 대부분 연수생 초청 형태의 소규모 지원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끔 전문가 파견 형태로 기술전수 혹은 어업정책과 행정 관리 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몇 건에 불과하다. 현지 아프리카 연안국의 수산업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 등의 지속적 지원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였다. 다만, 2008년부터 튀니지, 알제리 등의 양식장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수산분야에서도 프로젝트 사업 형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4) 한·아프리카 협력네트워크 구축 현황

이처럼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걸쳐 제조업, 에너지·자원 분야 및 수산업 분야에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많은 협력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양 지역의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종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각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왔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각 부처 및 민간기구 등에서 한·아프리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 표 2-10 | 한·아프리카 간 협력네트워크 추진 현황

네트워크 명칭 (주관부처, 기관)	주요 사업
한·아프리카포럼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포럼 개최(서울, 2006. 11) - 아프리카 5개국 정상과 27명의 각료급 인사 참석 - ‘서울선언’ 채택(포럼의 정례화 선언) • 2007년 회기간 회의 개최(남아공, 2007. 11) -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케냐 등 정부관계자 및 학자 참석 • 2008년 회기간 회의 개최(모로코, 2008. 10) - 모로코 측 정부, 학계, 경제계 인사, 모로코 주재 외교단 참석 • 제2차 포럼 준비 중(2009년 하반기 예정)
공동위원회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8개국과 공동위 구성 - ‘공동위’라는 큰 명칭 아래 현안에 따라 ‘경제공동위’, ‘건설공동위’, ‘정책공동위’가 개최됨
한·아프리카경제 협력컨퍼런스 (KOAFEC) (재경부/ 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장관급 컨퍼런스 개최 - 아프리카 15개국 경제장관 참석(서울, 2006. 4) - KOAFEC 자문단(Consultative Group) 구성 - 4대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Action Plan 수립 (① 인프라건설, ② IT 협력, ③ 한국경제개발경험 전수, ④ 인력 개발) • ‘KOAFEC Action Plan 2007/08’ 발표(2007. 5) - 4대 협력분야에 총 16개 사업추진(한국 측 지원규모: 8억 달러) - 유상지원(인프라, 자원개발프로젝트, 전자정부사업), 기술훈련센터 건립 등): 수은금융, EDCF, AfDB와의 Co-finance 활용 - 무상지원(권역별 현지 워크숍, 초청연수, 정보격차 해소사업, 유망사업 발굴을 위한 F/S 지원 등): AfDB 신탁기술협력기금(KITCF), EDCF 활용

| 표 2-10 | 한·아프리카 간 협력네트워크 추진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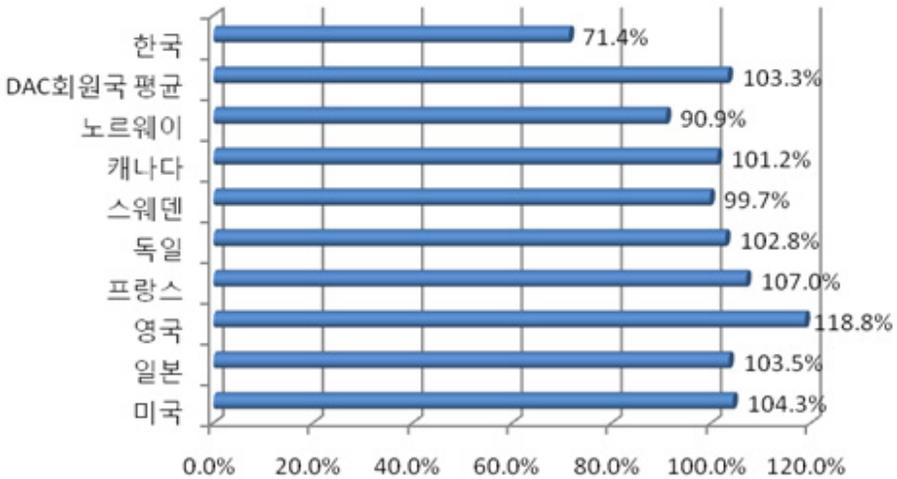
네트워크 명칭 (주관부처, 기관)	주요 사업
한·아프리카경제 협력컨퍼런스 (KOAFEC) (재정부/ 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장관급 컨퍼런스 개최 - 21개국 22명의 장관급 고위인사와 총 130명의 아프리카 대표단이 참석(서울, 2008. 10) - 6대 중점협력 분야에서 29개 협력사업(총 7억 6천만 달러 규모)을 추진(① 인프라와 자원 개발, ② IT, ③ 인력개발, ④ 한국경제개발경험 공유, ⑤ 농업 발전, ⑥ 녹색성장)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2000만 달러 추가 출연 • 권역별 현지 워크숍(한국개발경험 전수) 개최 - 북부지역(2007. 1), 남부지역(2007. 11)
한·아프리카산업 협력포럼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개최(2008. 9) - 아프리카 6개국 에너지·자원 관련 장관, 국내외 CEO 등 300명 참석 - 발전소, 정유공장 건설 등 아프리카의 국가개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촉진
한·아프리카협회 (KOAFI) (소수의 중소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업(중소기업) 차원에서 상호교류 및 세미나 개최 •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도해 내기에는 역부족
한·남아공 경제협력위원회 (무역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남아공 간 경제교류 목적 • 경제인 합동회의 및 비즈니스 상담회의 개최 • 1차 회의(남아공, 2006. 10) • 2차 회의(서울, 2007. 5)
한·이집트경제 협력위원회 (전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절단 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2001년 발족 • 파트너 기관은 이집트 기업인협회(Egyptian Businessmen's Association)로 매년 회의 개최 • 현재까지 모두 6차례의 합동회의 개최
한·나이지리아 비즈니스포럼 (대한상공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기업 간 기업정보 공유 및 기업활동 지원 • 2006년 3월 나이지리아에서 양국 기업인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한·아프리카수산 협력포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지역 수산협력사업 발굴 및 이해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0년 7월 남아공 심포지엄, 2010년 12월 서울 심포지엄

자료: 박영호 외(2008), pp. 132~133

2) 평가

우리나라의 협력사업 추진 실태로 살펴보면, 그동안 아시아에 대한 원조에 치중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아프리카 쪽으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새천년목표 달성 등 국제적 이슈에 근접하여 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빈곤 등 인류적 차원의 목적으로 관심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OECD/DAC

| 그림 2-10 | DAC 회원국별 무상원조 비율(2007)

그리고 지원 방법으로는 DAC 회원국들보다 무상원조 비중이 가장 낮아 아직까지 원리금 상환조건이 따르는 유상차관이 많이 남아 있다.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상차관보다는 무상원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예산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한 점차 무상원조 방식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셋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분야 ODA사업은 그동안 거의 소외되어 왔으나, 최근 알제리, 튀니지 등 양식장 건립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지역어촌 주민의 소득과 고용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갈수록 수요가 확대되는 협력사업 분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도 아프리카의 지역적 여건에 알맞은 방식으로 추진 혹은 준비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

로 평가된다.

4. 글로벌 시대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필요성

1) SWOT 분석

아프리카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었지만, 그 밖의 세계 도처에서는 ‘글로벌 시장 경제’가 급속히 확산되어 지역 간·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소위 각국의 지역적 여건과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상호 협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력 체제를 갖추므로써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경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지역과 우리나라 간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제적 보완관계를 형성해 감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양 지역 간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와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SWOT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와의 상품 교역, 직접투자, 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기회와 강점을 살리고 위기와 약점을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우선 상품 교역 차원에서는 자동차, 선박, 전기 및 전자제품 등의 대 아프리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지역 자체가 새로운 신흥시장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중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에너지 및 지하자원 등의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진출도 직접적인 경제협력의 중요한 대상일 뿐 아니라, 농산물 및 수산물의 확보를 위한 현지 진출도 중요한 협력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수출은 12.4억 달러였으나, 2008년에는 130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총수출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자원 • EU 및 미국과의 관세혜택 • 다양한 식물군과 동물군 - 관광자원 • 파괴되지 않은 자연 - 환경 • 값싼 노동력 • 풍부한 농업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국내시장, 국가 위험성 상존 • 장기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의 부족 • 선진화된 정보와 통신기술의 부족 • 자본의 부족, 무역조건의 취약성 • 분쟁방지와 관리의 부족 • 빈약한 보건서비스(에이즈, 말라리아 등) • 계층 및 성의 불평등 • 빈약한 인프라, 과도한 채무 • R&D의 부족, 정치적 불안정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산품의 가격상승으로 외화자금의 풍부 -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EU 및 미국과의 관세혜택 - 우회수출 기회 • 미개발된 분야가 많음 - 자원개발, 금융 선진화시스템, 전자정부 등 • 지속적인 경제 성장 • 국가 생산시스템의 통합 •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익률 • 교육에 대한 투자증가 및 숙련인력 양성 • 정보기술과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 • 지속적인 외국의 원조(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가(비산유국) • 에이즈 등 질병으로 인한 인력 손실 • 지나친 1차산품에 대한 의존 • 남아공,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집트 등 일부 국가들에 경제력 집중 • 신흥산업국가들과의 경쟁 • 외부기관 및 시장에 대한 의존 • 국경분쟁 및 외적인 변동요인 • 쌀무 및 다자간 원조와 간섭 • 미국과 EU에 의한 1차산품들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 농업기간 흔들

자료: 서상현 외(2009), p. 131

| 그림 2-11 | 경제협력 관점에서의 대(對)아프리카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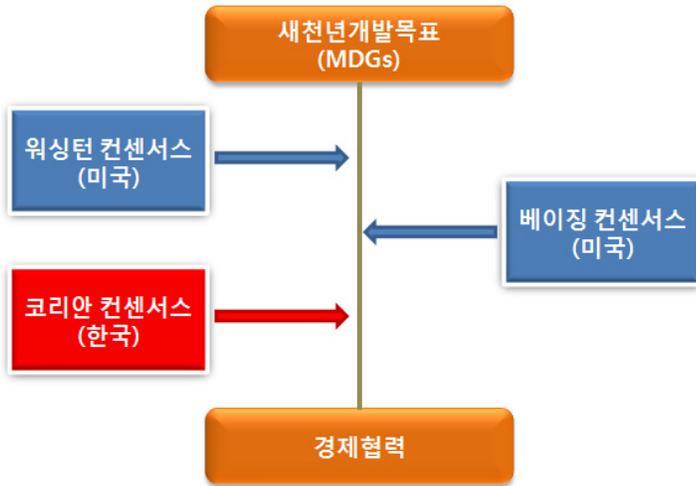
그러나 일반 제조상품과 달리 수산물의 경우 대 아프리카 교역 규모가 아직까지는 매우 작기 때문에 목표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보다는 EU 등의 주변 시장을 겨냥하는 교두보로서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투자 측면에서도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금액 중 1.5%(2008년 9월 말까지 누계 기준)만이 아프리카에 투자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에너지 등 광업(45%), 숙박음식점(20%), 제조업(17%), 도소매업(14%)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수단, 이집트 등의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분야

의 아프리카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서 향후 수산분야의 민간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한국적 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

앞서 아프리카의 절대적 빈곤에 대한 원조정책 기조로서, 식민지관리형, 안보 혹은 패권주의형, 경제실익형, 인도주의형 등의 원조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원조 목적은 크게 빈곤 등 MDGs 달성(인도주의형), 경제협력(경제실익형), 그리고 패권주의(식민지관리형 및 정치·안보목적 등)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안보 목적, 중국의 베이징컨센서스, 프랑스·영국 등의 식민지관리형 등은 사실상 ‘패권주의’의 서로 다른 역사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은 일방적인 경제협력이나 패권주의와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각 유형의 원조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발전경로를 보유한 우리나라로서는 고유한 ‘발전 경험’을 토대로 인도주의 및 경제협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여국 자체가 수원국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소위 ‘코리안 컨센서스(Korean Consensus, 가칭)’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분야 협력사업 등 각 부문별 사업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그림 2-12 |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협력정책 기초

3) 수산협력의 필요성

(1) 한국 수산분야의 선진 경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원국 지위에서 공여국 지위로 전환한 나라이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와 같이 구조적 절대빈곤에 처한 지역에 대해 그동안의 경제 발전과 개발 경험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관계의 구축을 본 연구에서는 ‘코리안 컨센서스’라 잠정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실제로 그동안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전기 및 자동차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개발 경험 전수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협력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번영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산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여타 부문에 비해 왜소한 규모로 축소되어 대외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러나 같

은 기간 동안 수산분야는 미래형 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초 한국은 1960년대 대일청구권자금 및 각종 원조자금과 해외차관을 통해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수산정책은 절대빈곤 탈피를 기본 목표로 국민 단백질 공급 확대를 위해 생산 위주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한국의 수산업은 지금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와 같은 한국 수산업 발전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서 저개발국들에게 자국 수산업 발전의 희망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째, 한국 수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곤의 시기에 수산 관련 기반시설 및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해외원조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어선세력 및 수산 기자재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수산물의 생산량은 1948~1961년까지 1.5배 증가하였고, 수산물을 해외에 수출하여 외화 획득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4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93.3%를 수산물이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둘째, 한국은 그동안 자원 고갈로 수산분야의 침체기를 맞이하였으나, 지속적인 어업구조조정, 자원회복사업 및 불법어업 단속 등에 힘입어 연근해 수산자원이 2002년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셋째, 한국은 2000년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국은 WTO/FTA 협상 대응 및 국내 대책을 마련하였고, 다기능어항의 건립을 통해 어촌과 어항의 기능을 고도화하였으며,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수협경영 개선 및 어업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등 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한국의 양식어업은 세계적인 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수산업 부문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양식어업 생산량은 1962년에 18,709톤으로 총어업생산량의 4.1%밖에 되지 않

았다. 그러나 불과 12년 후인 1980년에 와서는 540,564톤을 생산하여 전체 어업생산량의 22.4%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 분야는 i) 자원관리 및 자율관리어업 체제 구축, 그리고 양식생산기술 등의 어업 생산 분야, ii) 수산가공 분야, iii) 어촌인력 및 어항 등 인프라 개발 분야 등에 있어서 상당한 개발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⁰⁾

(2) 수산협력의 필요성: 아프리카의 입장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만성적인 저개발 구조 속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즉 사회적·경제적·인적 자원의 인프라가 형성되기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 등을 위한 원조는 그 효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고질적인 식량난으로 인한 삶과 노동의 의지 상실이다. 5세 미만 영아의 영양실조율, 영아사망률은 물론이거니와 질적으로 우수한 단순 노동의 재생산에 기반이 되는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은 노동에 대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 동시에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단백질의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축·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열악하다. 여기서 수산물은 식량은 물론이거니와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식량을 공급하는 1차 산업에서 수산업은 자연이 생산해 주는 수산물을 대량으로 어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양식 수산물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1950~1960년대의 식량난에 수산업이 식량 생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바가 있다.

50) 이에 관해서는 홍현표 외(2010), pp. 101~113 참조.

둘째, 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자본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최우선적인 식량난의 해소와 같이 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외화 획득을 통해 가능하다. FAO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1억 5,234만 톤⁵¹⁾에 총교역량은 1억 850만 톤에 달했다. 교역량이 수입과 수출을 합친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이를 2로 나누면, 5,425만 톤이 실제 교역 상품으로 이용되었다. 즉 전체 수산물의 생산량 중에서 35.6%가 교역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공업이 성장하기 이전인 1960~1970년대 주요 외화 획득원은 수산물이었다. 연근해는 물론 원양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했고,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가 경공업에 재투자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산업을 성장시켰다.

셋째, 지역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저개발국가이면서도 국가가 불균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로 수도를 중심으로 경제가 집중되면서 수도를 제외한 지역과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이 현실이다. 수산업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연안을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전개되며, 이를 위한 어항 등의 어업 인프라는 연안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도심화 현상을 줄이면서 지역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안 혹은 내수면 지역을 중심으로 어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어항과 같은 인프라 시설을 건립하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업을 통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51) 해조류 및 수생 포유류 포함.

(3) 수산협력의 필요성: 한국의 입장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의 GDP 비중은 1% 미만으로 외형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은 물론이거니와 공해상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의 어획량이 1990년대 초반에 100만 톤 이상이었던가 2000년대에 들어와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연근해 어획량 역시 수산자원 관리에 의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양식업의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고는 있지만, 천해에 양식장을 확보하는 데는 과거와 같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적 배경 외에 국제적으로는 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둘러싼 교역이 활발해지고 수산분야의 다국적 기업⁵²⁾이 성장하면서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동시에 수산물의 교역을 통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익 외에 물류(보관, 운송), 우회기지 건설을 통한 비용 절감 등과 같은 간접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이다.

아프리카가 글로벌 수산분야에서 중요한 이유는 어장 및 양식장과 같은 생산기지로서의 의미 외에도 물리적으로 인접한 EU와 미국으로의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수산기업들은 앞다투어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수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식량이라는 점, 지역 개발이라는 점에서 다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수산업이다. 앞으로 수산분야에서는 대내외적인 환경

52) 마린하베스트, 닛스이, 페스카노바 등.

을 감안할 때 해외로의 진출과 해외수산자원의 확보가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수산업의 글로벌화가 활성화될 때, 우리 수산분야의 경제 공헌도가 높아질 것이며, 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장 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의 추진 전략

1. 수산협력사업의 추진 목표

지금까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의 수산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산협력사업⁵³⁾의 주요 추진 목표로는 다음과 같다.

- 빈곤 해소 등 MDGs 달성을 위한 수산 ODA사업의 추진
- 해외수산자원의 개발 및 확보와 연계되는 수산협력사업의 추진
- 우회생산기지 확보 등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협력사업의 추진

이하 각 추진 목표별로 단계적 세부 추진 전략을 살펴보도록 한다.



| 그림 3-1 | 한·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의 추진 목표

53) 본 연구에서 ‘수산협력사업’이란 서론에서 밝혔듯이, 순수 공적개발원조사업과 국익과 산업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사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목표별 추진 전략

1) MDGs 달성 목표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사업에서 1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대상 지역의 새천년개발목표에 근거한 빈곤 해소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프리카는 대내외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빈곤의 악순환’에 처해 있으며,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은 기아 해소, 소규모 영세사업자(어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 및 고용 창출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원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의 양 국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수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사업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안 어장 및 자원 관리 정책과 제도 정비사업, 어선 현대화 및 선원의 교육 훈련사업, 양식품종의 개발 및 양식기술 보급, 수산인프라 개발, 수산업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의 사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수원국 수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수원국의 소득원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진시켜 광범위하게 만연된 빈곤의 퇴치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즉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 등 MDGs 달성을 위해 수산분야에서는 i) 수산분야에서의 고용 및 소득 창출형 공적개발원조사사업의 발굴 및 확대 추진, ii) 한·아프리카 수산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 기반의 구축, 그리고 iii)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사사업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등이 시급하다.

2) 해외수산자원의 개발 및 확보

세계의 각국들은 경제 성장 및 그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 확보

각축전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는 곧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원에는 수산자원도 예외 없이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원양산업이 발달한 일본, 중국, 대만, 스페인 등은 물론 노르웨이 등과 같은 수산 선진국에서는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수산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 내수 및 수출시장 수요에 알맞은 수산자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및 확보 계획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이라는 것이 재생산이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적당한 어획노력이 투입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속적 허용어획량 수준(MYS)을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산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의 수산자원에 대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 등 주요 수산물 소비국들에게는 아프리카의 수산자원도 결국은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관리해야 할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에 연계되는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i) 해외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어업자원 조사 및 관리 체계 현대화 지원, ii) 자원연계형 산업 개발 참여, iii) 해외수산자원 개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3) 산업협력

셋째로 아프리카는 자체적으로도 수산물 내수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EU나 북미와 같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우회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협력사업도 선진국 시장에 대한 우회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협력사업(industrial cooperation)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글로벌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내를 비롯하여 현지에 수직적으로 연계되는 수산기업의 구조를 갖추므로써, 선진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리한 비용구조는 물론 저렴하고 합리적인 수출 루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0년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의 법(AGOA)’에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무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39개 나라가 미국의 AGOG 대상국이다. 이와 함께 EU도 아프리카와의 각종 협정을 통해 EU 내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발효된 ‘유럽아프리카경제조약(EPA)’에 따라, 아프리카에 국적을 둔 기업은 EU시장 진출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을 이들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회생산기지의 역할을 두고 산업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수산물 내수시장을 겨냥한 식량공급과 함께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i) 한·아프리카 수산업 부문과의 수직적 분업 구조 확보, ii) 민간경제협력 기반의 마련 등의 세부 추진 전략이 그것이다.

3. 단계적 추진 전략

앞서 설명한 수산협력사업의 추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별로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한·아프리카 공동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협력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1단계(2012~2013년)에서는 각 세부 추진 사업별로 아프리카 특정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본 사업에 앞서 추진

해야 한다. 예컨대 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 및 소득창출형 사업을 유형화하고 그중 일부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에 그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한다. 그리고 2단계부터는 각 지역별 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후 3단계에서는 유형별 해당 사업을 궤도에 올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1단계 : 제도 및 지원체계의 정비, 시범사업의 추진
- 2단계 : 아프리카 지역별 본 사업의 추진 및 보완
- 3단계 : 본 사업의 계속 추진 및 활성화

다음은 각 추진 목표별·세부 사업별·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표 3-1 | 수산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 전략

비전	목표	세부사업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2015)	3단계 (2016~)
한·아프리카 공동발전 기반 구축	빈곤 해소 등 MDGS 달성	고용 및 소득 창출형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발굴 및 확대 추진	고용 및 소득 창 출형 수산협력사 업 유형화 및 시 범사업 추진	유형별 사업발굴 및 확대	유형별 본 사업 활성화
		한·아프리카 수산분야 협력 증진 지원 기반 구축	수산분야 한·아 프리카 수산협력 기구 발족 (KORAFF)	전 아프리카 국 가로 확대	활동 영역 및 역할 활성화
		수산분야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수산협력 관련 전 담기구 설치 (국제수산협력센터)	국내 관련 부처, 기 관간 협력 강화	역할 활성화 (계속)
	해외 수산 자원의 개발 및 확보	해외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어업자원 조사 및 관리 체계 현대화 지원	지역별 자원 조 사·관리시스템 시범 추진	본 사업 추진	(계속)
		자원연계형 산업 개발 참여	전력, 통신, 도로, 어항 등 연계사 업 시범추진	본 사업 추진	(계속)
		해외수산자원 개발 지원체계 구축	제도적 보완 (해외수산자원 개발법 제개정)	-	-
산업 협력	한·아프리카 수산업 부문의 수직적 분업 구조의 확보	시범사업 추진	지역별 본 사업 추진	(계속)	
	민간경제협력 기반의 마련 등의 세부추진 전략	해외수산펀드도입	펀드조달 운영 활성화	(계속)	

4. 추진 방법

앞에서 언급한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추진 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가 갖는 수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산협력과 관련하여 54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산업 혹은 수산분야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 국가를 선별해 낼 수 있는지, 동시에 그러한 국가들과의 수산협력을 어떠한 분야로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선정된 국가와 해당 수산협력 분야를 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 여기서 추진 체계는 다음에 고려하기로 한다.

1) 지원대상 국가의 선정

(1) 공적개발협력 분야와 민간경제협력 분야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을 추진할 경우에 지원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OECD/DAC가 선정한 수원대상국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각 국가별로 원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자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들을 OECD/DAC의 선정국 내에서 선별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우리의 정책에 맞는 국가로 수원국을 선별하는데, 이를 ‘중점협력국’ 및 ‘일반협력국’으로 매년 선정하고 있다.

OECD/DAC의 지정 수원국 중에서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사하라 이북의 5개국과 사하라이남 50개국이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원국으로 선정되어 있다. KOICA는 이들 지원대상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관계 빈곤수준, 향후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국가 중 18개 국가를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이에 보다 심층적인 지원을 위해

중점협력국가 8개국⁵⁴⁾을 선정하여 향후 2008년 대비 2012년 ODA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릴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선정 기준이 우리나라 수산분야가 협력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국가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산분야의 협력은 국가 차원의 협력 전략에서 한 단계 심층적으로 ‘수산’이라는 분야로 좁혀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은 우리 수산분야의 발전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표 3-2 】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원양선사 진출현황(2008)

단위: 척, 천 달러

국가	어업형태	2008년		KOICA 협력대상
		입어척수	입어료	
남아공	다랑어 연승	2	124	○
적도기니	트롤	13	925	×
시에라리온	트롤	9	780	×
	모선식 외줄	2	240	
앙골라	다랑어 연승	4	175	○
	트롤	6	900	
기니 비사우	트롤	10	1,619	×
	모선식 외줄	4	620	
소말리아	트롤	7	769	×
가봉	모선식 외줄	2	200	×
모잠비크	다랑어 연승	8	84	○
마다가스카르	다랑어 연승	13	408	×
탄자니아	다랑어 연승	5	180	○
합계	3가지 형태	85	7,024	4개국

주: 한국에 원양선사 본사를 두고 허가 받은 척수만 고려, 현지합작이지만 지분이 50% 미만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은 제외

자료: 원양산업협회, 내부자료

54) 대외비.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대 아프리카 협력은 공적인 분야보다는 민간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미 1964년에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를 원양기지로 하여 아프리카 서부연안(대서양)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원양 진출은 과거의 아프리카 서부연안을 비롯하여 동부 및 남부까지 진출을 확대한 상태이다. 총진출어선은 85척으로 연간 약 700만 달러 이상의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을 하고 있으며, 진출국은 10개국이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공적개발협력 분야와 민간의 경제협력 분야가 상호 합치가 되지 않는 문제이며, 여기서 공적개발협력은 국가 협력 목표뿐만 아니라 수산분야의 정책 목표도 포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전체의 목표가 수산분야의 목표와 반드시 합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수산분야 협력(혹은 진출)은 원양 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목표와 합치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우리 수산분야의 해외협력은 잡는 어업 외에 기르는 어업, 수산물 유통, 수산가공업, 어항, 지역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수산분야와 관련하여 미개발된 국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며, 이들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의 민간 부분이 진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리고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은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수 초청 중심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사업이 미약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향후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대 아프리카 ODA 규모를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이고 사업 규모도 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 사업은 아프리카 현지에 양식장, 위판장, 가공공장 등을 직접 설비하여 그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 대상국의 수산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들 국가가 과연 스스로 경험이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 분야의 참여와 투자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화가 추진되어 해당 수원국에 관련 사업이 자리 잡도록 하는 방법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OECD/DAC의 수원국 지표, KOICA의 협력대상국,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반 경제 현황, 수산업 실태 등을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 수산분야의 민간 진출 및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협력사업의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공공 협력 및 민간 협력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진출하는 것이 국가 전체나 수산분야로서나 효율적이며, 집중적인 협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국가의 수산업 실태, 우리나라 수산분야와의 관계(어업협정, 우리 원양선사 진출 및 진출 계획 등)를 고려하여 대상국을 제시하면, 아프리카 21개국이 포함된다.⁵⁵⁾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이 진출한 국가가 21개국 중 3개국에 지나지 않고 있다.

55) KOICA에서는 아프리카 18개국과의 협력을 한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조직의 업무 분담에는 20개국(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르완다, 우간다, 이집트, 수단,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카메룬, 앙골라, 나이지리아, 튀니지, DR콩고)을 포함하고 있다.

| 표 3-3 | KOICA의 아프리카 협력 국가의 우리 수산분야 진출

국가명	한국어선 입어척수 (척)	국별 수산업 생산		관련 협정		한국 원양사 진출
		생산량 (톤)	잡는 어업 비중(%)	어업 협정	투자보장 협정	
DR콩고	-	238,978	98.8	-	-	-
가나	-	355,425	98.6	-	-	-
나이지리아	-	684,575	79.1	-	1998년	-
남아공	3	682,960	99.2	-	1995년	진출
르완다	-	9,438	95.9	-	-	-
모로코	-	894,456	99.8	-	1999년	-
모잠비크	8	93,177	99	-	-	진출
세네갈	1	421,517	99.9	-	1984년	진출
수단	-	67,508	97	-	-	-
알제리	-	141,615	98	-	1999년	-
앙골라	6	312,440	100	-	-	진출
에티오피아	-	16,770	100	-	-	-
우간다	-	502,250	89.6	-	-	-
이집트	-	1,067,631	35	-	1996년	-
지부티	-	450	100	-	-	-
짐바브웨	-	12,950	18.9	-	-	-
카메룬	-	138,952	99.8	-	-	-
케냐	-	136,203	96.9	-	-	-
코트디부아르	-	59,290	97.8	-	-	-
탄자니아	6	329,711	99.9	-	-	-
튀니지	-	103,595	96.8	-	1975년	-

주: 해적에 의한 우리 원양어선의 도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자료: 홍현표 · 마창모, 2010; FAO Fishstat Plus; 원양산업협회,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
자료

(2) 수산분야 협력대상국가의 선정

이상과 같이 수산분야를 대상으로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공공 협력대상국과 민간 협력대상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 협력대상국만을 수산분야의 협력국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앞으로 크게 확대될 협력사업에서 지속적 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의 부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민간 협력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수산협력이 국가 전체에 가져다주는 공헌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표 3-4 | 대 아프리카 수산분야 잠재적 협력대상국

구분		국가	국가수
KOICA 협력대상국(A)		DR콩고,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르완다, 모로코,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튀지니	21
수산분야 기 진출국(B)		가봉, 기니비사우,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앙골라, 적도기니, 탄자니아	10
수산	잠재적 협력국(A∪B)	DR콩고, 가봉, 가나,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남아공,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적도기니,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튀니지	27
	중점협력국(A∩B)	남아공, 모잠비크, 앙골라, 탄자니아	4

주: 소말리아는 해적 침몰 등 위험성이 높아서 제외함

이에 수산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 데는 포괄적인 입장을 취해서 공공 및 민간의 차원의 사업을 통합⁵⁶⁾하여 대상국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56) 소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 방식’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다.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의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KOICA의 협력대상국, 우리 수산업계의 대 아프리카 진출 현황 및 가능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잠재적인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대상국으로서 26개국을 선정하였다. 단, 소말리아는 해적의 빈번한 출몰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2) 협력 가능 분야⁵⁷⁾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 해소 등 MDGs 달성, 수산자원의 개발 및 확보, 산업협력의 3가지의 세부 목표에 어떠한 성과를 줄 것인가를 고려하여 발굴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수산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구체화된 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기준을 고려하여 수산협력의 가능한 분야를 추려 보면,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1) 수산자원 관리 협력형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강화하면서 2000대 중반부터는 300~350만 톤의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자원의 회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바다목장화 정책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수산자원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주요 어종에 대한 꾸준한 자원량 조사를 시행에 오면서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단,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에서도 연안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FAO나 선

57) 홍현표 외(KMI, 2010)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진 수산국으로부터 수산자원관리의 제도 혹은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전히 많으며, 설사 그러한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노하우는 중요한 협력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자원관리 협력은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협력 사업 중에서 어업생산 협력형과 어촌지역개발협력형의 사업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의 세부 목표 중에서 ‘수산자원의 개발 및 확보’와 ‘빈곤 해소 등 MDGs’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산자원의 개발 및 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협력대상국의 수산자원과 자원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어장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협력사업은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단, 수산자원 관리 협력은 그 협력 자체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다른 협력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효과가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수산자원 관리형 사업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자원 조사사업, 자원 조성사업, 자원 관리 정책 도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원 조사사업은 협력상대국의 어종별 자원량을 조사 측정하여 MSY 수준 등을 분석하는 것을 주로 한다. 자원조성 사업은 자원량 측정사업을 통해 자원이 감소하거나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을 늘리는 사업으로서 바다목장화(인공어촌, 바다 숲 조성 등 다양한 자원 관리 기법 포함) 사업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 관리 정책 도입 사업은 TAC 등 우리나라 자원 관리 정책을 협력상대국에 도입하는 것이다.

| 표 3-5 | 수산자원 관리 협력형 사업의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자원 조사 사업	어종별 자원량 조사 및 측정	MSY 수준 분석
자원 조성 사업	바다목장화 사업, 인공어초, 바다 숲 사업 등	-
자원 관리 정책	TAC 등 관리 기법의 도입	-

자료: 홍현표·마창모(2010)을 재구성

(2) 어업 생산 협력형

어업생산 협력형은 어업관리 협력형과 양식어업 협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어업관리 협력형

우리나라의 어업관리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수산분야의 변화에 맞게 정책적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어업구조조정, 어업 관리, 어장 관리, 어선 관리 등이다. 아프리카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어업 관리에 제도는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그것이 명확하지 못하고, 현실에 적용이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의 어업 관리 모델을 적용한다면, 수산자원을 개발 및 확보와 빈곤 해소 등 MDGs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수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정 어업 관리를 통해 어업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수산분야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어업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의 노하우가 아프리카 수산분야에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어업 관리 협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업 관리, 어장 관리,

어업구조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어업 관리에는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 체계, 어업 재해 관리 및 해난 사고 대응 체계, 기후 변화 대응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산업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유치한 어구어법, 열악한 노동환경, 안전의식의 결여 등에 의해 어업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예를 들어 DR콩고와 콩고 공화국의 국경을 긋는 콩고 강 유역에서는 급류에서 위험한 조업을 유치한 어구어법을 통해 오래전부터 지속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의 사망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메룬에서는 불법어업 단속선이 단 2척에 불과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어장 관리에는 어장환경 실태 조사, 어장 관리 및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는 근해에서의 어업을 행하는 상업적 어선이나 연안의 어업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선행적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어업구조조정에는 간척사업, 어업권(면허, 허가, 신고 등) 제도, 어선 선진화 및 현대화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직 수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 보면, 새로운 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안어업에 집중된 어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연안어선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될 어업분야에 대한 어업권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어선은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

| 표 3-6 | 어업 관리 협력형 사업의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어업 관리	-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 체계 - 어업재해 관리 및 해난사고 예방 -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의 경우 우리의 연구성과 제고
어장 관리	- 어장환경 실태 조사 - 어장 정화 등 어장 관리사업	어장 휴식년제
어업구조 조정	- 감척사업, 어업권 제도 정비 - 어선 선진화 및 현대화	국내 경험 - 한일어업협정

자료: 상계서

② 양식어업 협력형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양식분야이다. 현재에도 세네갈, 튀니지, 알제리에서는 우리나라와 양식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향후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생산 공급은 어선어업에서 양식분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아프리카의 입장에서는 양식 어종의 선별이 가능하여 내수 및 수출 상품으로의 선택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협력 수요에 대해 우리나라의 양식 수준은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양식의 역사는 1960~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면서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원양 및 연근해 생산량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 양식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서 일부 어종(넙치, 전복 등)에 대한 양식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고, 천해양식에 집중되던 것도 외해양식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양식어업 분야가 아프리카와 협력을 하게 된다면, 특히 세부 목표와 관련하여 빈곤 해소, MDGs와 수산자원 개발/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식어업 협력에는 양식어장 관리, 양식기술 개발, 외해양식, 식품안전성 등의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양식어장 관리는 육상이 아닌 수면(해수, 담수)에서 양식을 할 경우에 대상 수역에 대한 정비 및 휴식년제 도입과 관련된다.

둘째, 양식기술 개발은 양식종묘 개발, 양성 기술 등을 포함한다.

셋째, 외해양식은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넷째, 식품안전성은 양식과 관련하여 질병 체제 구축 및 약제 관리와 관계한다.

이러한 분야가 양식어업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데, 양식어업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첫째, 양식한 수산물의 상업화 및 시장화 문제이다. 양식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이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주요 원조국들이 수행해 왔지만, 일반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양식기술과 시장성의 괴리였다. 즉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경영 관리의 부재가 양식어업의 협력 지속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따라서 양식어업 협력에 있어서는 대상 어종에 대한 시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앞의 내용에 덧붙여 관리 주체의 문제이다. 생산한 양식 수산물의 상업화와 시장화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주체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수원국의 정부, 원조국의 기술 전수 기관은 실제 양식 수산물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양식 수산물의 상업화를 통해 협력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양식어업의 관련 사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이다. 양식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양식장, 양식어업인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이다. 관련된 사료의 생산 혹은 공급은 제대로 되는지, 관련 설비(발전소 등)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식어업 협력은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사항이 고려되지 않을 시에는 이전의 다른 원조국들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표 3-7 | 양식어업 협력형 사업의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양식어장 관리	양식어장 정비와 관련한 내용	휴식년제 등
양식기술 개발	양식 종묘 개발, 친어 관리, 양성 기술 등	현지 토종어 대상
외해양식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의 육성	다랑어 등
식품안전성	양식수산물의 질병 관리 체계 구축	항생제 등
상업화 협력	양식어업 협력의 전제조건, 판매와 유통	시장성 확보
연관 산업협력	사료 산업, 종묘 산업 등	국내 기업과 연계

자료: 상계서

(3) 수산인프라 협력형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GDP 공헌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산분야의 인프라는 더욱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산인프라 협력사업은 전체적으로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협력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인프라 협력형 사업에는 어항 개발협력형과 수산물 유통·물류 협력형이 포함된다.

아프리카의 수산업 생산을 늘리는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이 어항이다. 특히, 생산량의 증대는 어항의 증설이 전제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어항들은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 어선의 입·출항 지연은 물론 어획한 수산물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연안어선들은 어항 없이 간단한 선착장이나 해변에서 양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어항을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으로 구분하여 다

양한 기능을 가진 어항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아프리카의 어항 협력에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안 소규모 어업에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표 3-8 】 수산인프라 협력형 사업의 내용

구 분	내용	비고
어항 개발형	어항 신설 및 개선, 친수공간의 개발 - 다양한 어항 기능의 접목	아프리카 원양기지
수산물 유통·물류	어항 배후부지 활용한 산지 유통 시설 - 냉동냉장창고, 물양장, 산지 위판 시설 등 소비자 유통 원활화를 위한 유통·물류 시설 - 냉동냉장창고, 소비자 도매시장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

자료: 상계서

아프리카의 수산물 유통은 수산분야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분야이다.⁵⁸⁾ 특히, 수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물류기반 시설이 가장 열악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물 손실과 부가가치 하락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부족한 식량자원을 더욱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시설이 냉동냉장창고이다. 산지와 소비지에 충분한 냉동냉장창고 시설이 없어 어획물의 장기 보관이 어렵고, 시설 부족에 의해 손실되는 수산물도 많다. 뿐만 아니라 산지 위판장과 같은 시장 시설의 부재는 수산물 거래 질서를 위협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물류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항 배후부지를 이용한 수산물 유통 관련 시설을 도입하고, 소비지에도 이러한 유통 관련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58) 도로 등의 일반 물류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수산분야에 집중하였다.

(4) 수산가공 협력형

수산가공업은 2차 산업(제조업)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기업에 의해서 영위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산가공 협력형은 민간의 참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질 분야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수산가공 분야가 반드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즉 수산물을 생산한 어업인이 유통을 위해 상품화 과정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가공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기업에 의해 수산가공업이 이루어지고도 있다. 즉 아프리카에서는 어업인의 가내수공업과 기업의 수산가공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지만, 발전 단계상 이보다는 앞서 있다. 일반 기업의 수산가공업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산지공동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⁵⁹⁾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가공업의 기술 노하우는 아프리카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기업의 대 아프리카 사업 진출에도 수산가공업 분야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산가공 협력은 앞서 선정한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의 세부 목표 중 산업협력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상당수의 국가들은 EU나 미국의 관세특혜국가로서 이들 아프리카 국가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무관세로 EU나 미국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윤이 우리나라 수산기업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우회생산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수산가공 협력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59) 제주특별자치도의 4개 수협은 각각의 가공물류센터를 가지고 어업인이 직접 가공을 하고 있으며, 경북 영덕의 강구에서도 오징어 할복 공장을 어업인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아프리카의 소규모 영세 어업인들의 가내수공업 성장 협력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훈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내수공업과 관련된 가공 설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의 어업공동체에서 가공업을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가공공장을 설비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아프리카와 한국의 담당 기관의 사업만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민간 수산기업의 진출과 관련한 다른 협력사업과의 연계 추진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한국의 수산협력에서 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배후부지 등에 수산가공업의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미 슬로몬 제도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에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 표 3-9 】 수산가공 협력형 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가내수공업 협력	어업 공동체에 대한 공동가공시설 설비, 가내수공업 관련 가공 기기 공급	부가가치 증대
민관 공동투자 사업	어항 배후 부지에 대한 민간 참여 유도, 수산가공단지 조성 + 민간 참여	우회생산기지

자료: 상계서

(5) 어촌지역 개발협력형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연안이나 내수역에서 어업과 관련한 촌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정책은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곳곳에 산재한 이들 어촌 혹은 어업 공동체들은 만성적인 가난, 실업, 빈곤 등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어업을 직업으로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 역시 쉽지 않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균형 있

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개발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에 있어서 어촌지역 개발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어촌지역 개발에 대해 어촌종합 개발사업을 다년간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해 왔다. 이러한 사업은 어촌관광, 어촌복지, 어촌종합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촌지역 개발사업이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사업으로서 추진된다면, 특히 아프리카 어촌지역의 빈곤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10 】 어촌지역 개발협력형 사업의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어촌종합 개발	산업 및 생활 편의 시설 간 융복합형 공간 조성	지역 균형 발전
어촌관광 개발	어촌체험 마을, 어촌관광단지	유럽 관광객
어촌 복지	병원, 학교 등 복지 관련 시설 복합	일반사업과 연계

자료: 상계서

(6) 수산정책 개발협력형

수산정책 개발은 협력상대국의 수산분야 정책을 개발하는 분야로서 이전 협력사업과는 직접적인 협력대상이 현지국의 정부라는 차이가 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수산분야에 대한 정책 및 관할부처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정력의 약화는 아프리카 수산분야의 거버넌스 약화로 이어져 수산분야 성장의 애로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수산행정에서 있어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이 행정력의 부재를 비롯하여 수산행정 인적 자원의 비전문성 등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수산행정은 다수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산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국책 연구소(KMI, NFRDI 등)와의 협력 등으로 전문인력 확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수산정책의 노하우를 아프리카와의 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면, 수산정책 개발협력형도 중요한 협력사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11 | 수산정책 개발협력형 사업의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인력·기술 개발	- R&D 개발: 수산기술 전수 및 신기술 개발 - 인력 육성: 어선원 교육 및 훈련, 양식기술 이전 및 보급, 수산 관련 교육 기관 양성	연수초청, 전문가 현지 파견
공동체 조직 구성	어업생산자의 공동체 조직화(수협, 어촌계 등)	자율어업
수산금융	재해 보험 및 신용 관리 등	어업생산형과 연계
어업협력·협정	공동어장 관리, 어업협정 및 체계 구축	국가 간 협정 도모
정책 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협력	국내 관련 정책 적용
수급 정보 공급	수산업 관측사업 등 협력	
컨설팅	전문인력의 파견 등	

자료: 상계서

이러한 수산정책 개발협력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파급효과는 다른 협력사업에 비해 매우 광범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협력사업에는 인력 및 기술 개발, 공동체 조직, 수산금융, 어업협력 및 협정, 정책 개발, 수산물 수급 정보 제공, 수산분야 컨설팅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1) 발굴의 한계

우리나라의 협력사업 발굴을 ODA 기준으로 설명하면, 원칙은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해당 기관이 평가를 한다. 수산분야의 물자사업 등은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수산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수원국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 발굴이 시작된다. 즉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에서 공공 협력(ODA)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ODA를 추진하고 있는 KOICA의 사업 발굴까지의 과정은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KOICA가 원조사업 신청을 해외의 우리나라 대사관 등을 통해 원조 대상국에 공지한다.

2단계는 공지를 받은 수원국은 각 분야별 담당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모집하여 선정한다.

3단계는 선정한 사업을 수원국이 우리나라 관계 부처(해당국 우리 대사관, 외교부, KOICA 등)에 공모한다.

4단계는 접수된 사업들을 KOICA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러한 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수산분야의 ODA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에서는 자국의 수산분야에서 필요한 협력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국의 수산분야 실태에 적합한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의 수산분야 행정력이 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프리카 내에서 ODA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산분야가 원

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⁶⁰⁾ 관계 행정인력이 한국의 공공원조사업과 신청 과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상위 부처에서 수산분야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제 아프리카의 국가가 신청한 수산협력사업과 그 국가의 수산업계나 전문가가 평가하는 수산협력사업에는 괴리가 있었다. 즉 해당국의 산·학·연에서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과 관련 행정부처에서 제시한 협력사업이 달랐다는 것이다.

(2) 수산협력사업의 발굴 방안

이미 앞에서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상 국가와 수산분야 협력가능사업을 선정하였다. 동시에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발굴하기에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문제는 바로 수산협력의 발굴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산협력 사업들이 다수 발굴되어야 이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통해 협력사업이 현실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산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앞에서 선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산분야의 실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 아프리카 수산분야 협력가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한다.

60) KMI는 2009년부터 10여 개국의 아프리카 수산분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앞의 두 내용을 기반으로 대상 국가들의 산·관·학·연 수산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협력가능사업을 도출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결과물을 우리 수산협력사업의 절차에 맞도록 과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앞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ODA사업 제안 절차 중 2단계에 해당 사업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진 방법과 과정은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 아프리카 ODA 원조는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2배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대 아프리카와의 협력사업을 늘려야 하며,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단계에서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은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 아프리카 개별 수산협력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즉 발굴 과정에서부터 현지에 필요한 사업이 발굴되어 제안되기 때문에 선정을 통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다면 개별 수산협력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곧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단, 이러한 합리적인 사업 수요 발굴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추진 체계에서 다루도록 한다.

5. 효율적 협력 체계의 구축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수산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산협력사업의 발굴 및 선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3-12 |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협력체계 현황

구분	사업 시행자(수원처)	내용
연수생 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 수산인력개발원 • (사)해외어업협력센터 • 한국어업기술훈련소 • 부경대학교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국립기술표준연구소 	어로, 양식, 식품가공 등의 분야에 연수생 초청 (약 3주간)
전문가 파견/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양연구소 • 청년개발원 	해외봉사단 파견
세미나 및 심포지엄	• N. A. ¹⁾	수산분야 사례 없음
물품 지원	• 수원국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기술 이전	• 수원국 정부	KOICA 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업 어촌개발		KOICA, EDCF
민간 분야	• 개별 기업 혹은 민간	관련 사업 진출

주: 1) KMI에서는 KORAFF를 추진하여 관련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표에서는 제외함
 자료: 상계서

지금까지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에서 민간 협력을 제외한 공공 협력은 KOICA의 예산으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체계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별도로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즉 KOICA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별도의 목표로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KOICA는 국가 전체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단지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발굴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

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추진 체계는 현재의 추진 체계에는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체계 역시 이원화되어 있으며 민간을 포함하면 더욱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산협력사업의 합리화를 위한 수요 발굴 체계와 선정 체계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1) 수산협력 수요 발굴 체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다 합리적인 수산협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선정한 27개 아프리카 국가의 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됨과 동시에 해당국의 산·관·학·연이 필요로 하는 수산협력사업이 발굴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수산협력의 체계에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발굴 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의 수산협력 신청에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프리카가 선정국과 우리나라의 수산협력 선정 주체(KOICA, 농림수산식품부 등) 간을 이어주는 수요 발굴 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러한 수요에 대해서 이미 그 필요성을 판단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010년 12월에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ea·Africa Fisheries Forum: KORAFF)을 창립하였다.⁶¹⁾ KORAFF는 민간 차원의 단체이기 때문에 대 아프리카와의 공공 협력(원조)사업을 선정하는 기능을 선정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KORAFF는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공공 분야)에서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61) KORAFF의 창립 계기는 2010년 8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사전적으로 열린 KORAFF 심포지엄에서 한·아프리카 수산전문가(산·관·학·연)들의 필요성 제기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첫째,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 선정국에 대한 수산업의 실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KORAFF는 이미 아프리카 15개국 1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수산분야에서 있어서 전문가들(연구자,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산 전문가들도 50여 명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전문적인 연구가 추진될 수 있다.⁶²⁾ 한국과 아프리카의 수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KORAFF 회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동 보고서에도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다수 국가들의 수산업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 선정국에 필요한 수산협력사업을 해당국에 제안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KORAFF는 2010년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아프리카 3개국의 수산협력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⁶³⁾ 이 중에서 앙골라 사업은 현재 KOICA에 제안되어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이다.

셋째,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즉 KORAFF의 회원 중에서는 공공 분야 외에도 양 지역의 민간 부문(기업, 개인 등)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에서 한국 측 민간이 진입하려는 분야에 대한 매칭 등이 가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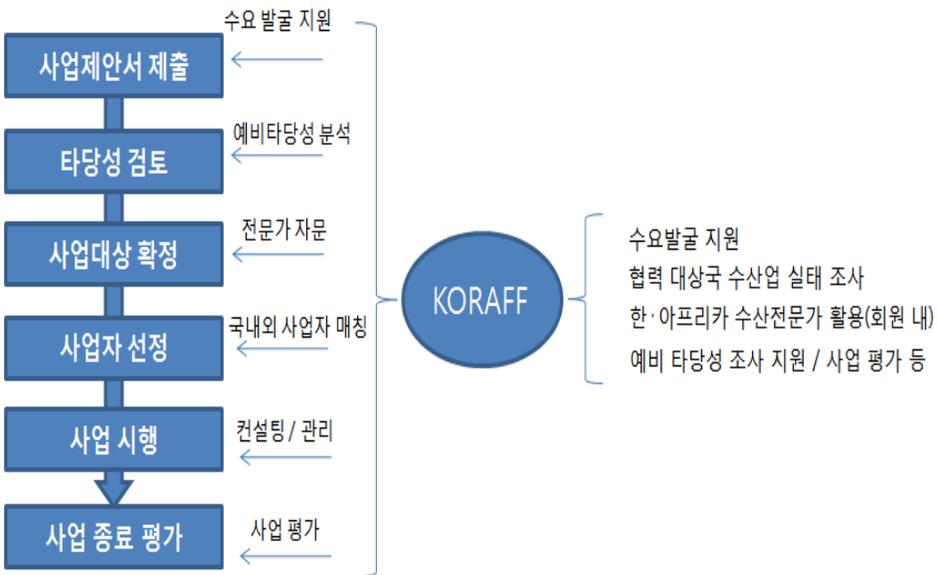
넷째,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의 공공 분야(ODA)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KORAFF는 단순히 대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수요 발굴뿐만 아니라 사업의 현실화 과정에서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KORAFF가 국내 유일의 수산분야 사회과학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MI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분야의 연구자들을 활용

62) 2011년 6월 현재.

63) 가나 수산업의 실태와 수산협력사업, 앙골라 수산업의 실태와 수산협력사업, 남아공 수산업의 실태와 수산협력사업 등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해당국의 수산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OICA나 농림수산식품부 등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사업의 주체기관들이 KORAFF를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 수요 발굴 체계를 위해 활용한다면, 기존의 수요 발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 ODA 사업 과정과 KORAFF의 지원 기능

단, 2010년 현재 KORAFF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KORAFF의 운영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KORAFF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연간 5억 원 규모가 예상되며, 세부 사업으로는 KORAFF 운영사업(1.6억 원), 국제 네트워크 유지 및 심포지엄 개최(1.2억 원), 국제공동연구사업(1.5억 원), 기타(0.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13 | KORAFF의 중·장기 운영을 위한 연간 추정 예산

항목	세부 항목명	예산 규모(억 원)
KORAFF 운영사업	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여비, 연구정보활동비, 회의비 등	1.6
국제 네트워크/심포지엄	심포지엄 개최비, 네트워크 유지비	1.2
국제공동연구사업	외부 연구 청탁(아프리카), 전문가 활용, 여비, 인쇄비 등	1.5
기타	KORAFF 정보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등	0.7
합계		5.0

2) 수산협력 선정, 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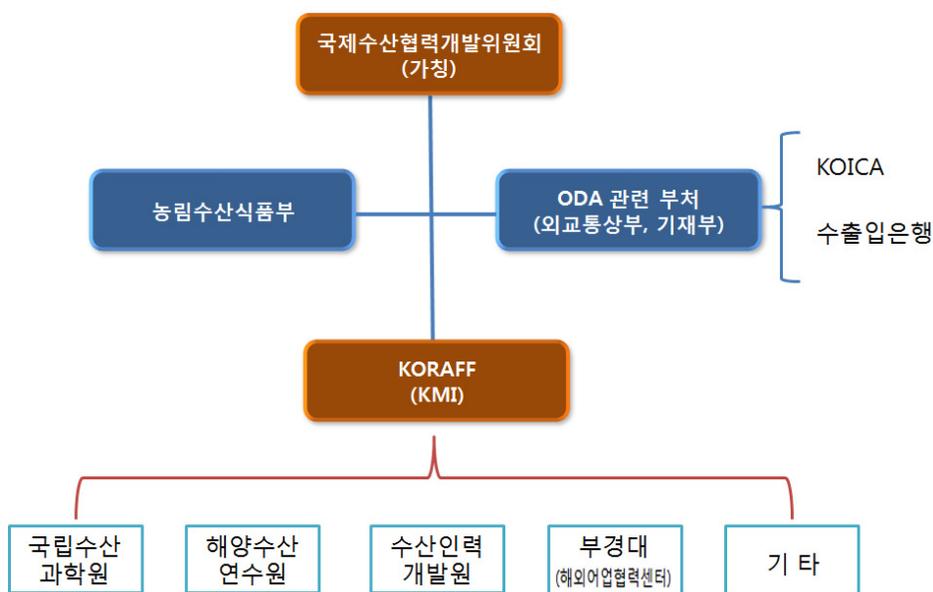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산협력(주로 ODA)은 KOICA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KOICA,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관들을 주체로 한 수산협력 선정 체계에서 나타나는 한계로는 수산분야의 전문성 부재(농림수산식품부 제외)와 실제 예산의 분산 운영에 따른 사업 중복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에서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정 주체의 전문성 제고와 사업 중복성 회피를 포함하는 추진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수산분야에 대한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여 ‘해외어업협력재단’을 구축하여 수산분야의 대외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⁶⁴⁾ 즉 일본은 수산분야의 해외협력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자국의

64) 부록 3을 참고.

높은 수산협력 노하우를 해외의 다른 원조국과의 차별성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해외수산자원 확보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다랑어 자원과 관련한 국제기구들로부터의 쿼터 확보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 전계서

〈그림 3-3 | 아프리카와의 협력사업을 고려한 수산 ODA 추진 체계

일본과 같이 수산분야의 대외협력 ODA 예산 등을 ‘해외어업협력재단’에 일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임을 감안한다면, ‘국제수산협력개발위원회(가칭)’⁶⁵⁾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유무상 지원부처인 외교통상부, KOICA,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부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산분야의 ODA사업의 방향,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 사업 추진 가이

65) 이는 이미 홍현표·마창모(2010)에서 제안된 바 있다.

드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비록 KOICA, 수출입은행, 농림수산식품부가 해당 예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사업 간 중복성을 피하고 수산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이 체계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과 관련한 사업 수요 발굴 지원, 정책 방향 검토,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시행자 간 업무 조정, 시행 결과 평가 등과 같은 지원 업무는 KMI에서 운영하는 KORAFF를 활용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제 4 장 수산가공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

제4장에서는 수산가공업과 관련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수산가공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력보다는 민간의 협력이 우선하는데, 그것은 수산가공업이라는 것이 국가 차원의 인프라 및 공공사업의 목적보다는 민간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서는 최근 가나(Ghana)의 다랑어 통조림 가공과 관련한 민간 협력사업을 개괄한다.

1. 협력대상국의 수산분야 현황과 특성

1) 가나의 일반 경제지표

가나는 아프리카 기니 만 연안에 인접한 국가로서 국가 면적과 EEZ 면적이 거의 비슷한 국가다. 1인당 GDP는 2,500달러(구매력 기준)로 세계 180위 정도로 소득이 매우 낮다.

| 표 4-1 | 가나의 일반 경제지표(2009)

항목	내용	비고
국가 면적(천km ²)	238.5	내수면 비율: 3.5%
해안선 길이(km)	539	EEZ: 200해리 선포국
EEZ 면적(천km ²)	235	
인구(백만 명)	24.8	2011년 7월 기준
GDP(억 달러/연)	310	2010년(명목)
1인당 GDP(달러/연)	2,500	구매력 기준(세계 180위)

자료: CIA, *World Fact Book*; FAO 자료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가나의 석유 보존량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시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역시 현재 가나 제2의 도시인 테마의 어항을 기점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단, 가나는 합작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 자본을 50%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나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합작기업은 우리 원양산업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2) 수산분야의 현황

가나는 2007년을 기준으로 약 32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44만 톤을 수입한 반면, 수산물 수출은 약 4만 톤의 실적을 올렸다. 따라서 재고량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가나의 국내 수산물 공급량은 약 72만 톤에 달했다. 이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약 29.59kg/인/연이다.

즉 DR 콩고는 수산물 순수입국임을 알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평균인 16.7kg/인/연보다 1.8배 높다. 어업별로 보면, 전체 국내 생산량 중에서 74.2%에 달하는 약 24만 톤을 바다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8만 톤(25.8%)이 내수면에서 생산되고 있다. 가나의 국내로 공급되는 수산물 중에서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93.4%로서 식용 비중이 매우 높다.

【 표 4-2 】 가나의 수산물 수급(2007)

단위: 천 톤, kg/인/연

구분	생산	수입	수출	국내공급			1인당 수산물 소비
				합계	식용	비식용	
합계	322	438	36	724	676	48	29.59
내수면	83	-	-	83	83	-	3.60
해면	239	438	36	641	593	48	25.99

자료 :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이러한 가나의 수산물 생산, 교역, 이용 배분, 소비 등을 간략하게 살펴본 결과, 가나의 수산물 생산 규모는 가나 국민의 수산물 수요 중에서 40%

만을 충당하고, 나머지 6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용의 비중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나의 수산물 수급은 수입 의존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식량안보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 표 4-3 | 가나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동향

단위: kg/인/연, %

연도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1997년 대비 비중
1997	32.97	100.0
1998	31.38	95.2
1999	32.11	97.4
2000	28.56	86.6
2001	27.31	82.8
2002	26.06	79.0
2003	21.42	65.0
2004	29.10	88.3
2005	27.58	83.7
2006	28.60	86.7
2007	29.56	89.7

자료 :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가나의 수산물 소비 동향을 보면, 2007년에는 29.56kg/인이었다. 이는 1997년의 약 9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10년 전보다 수산물 소비량은 줄었지만, 소비량이 가장 적었던 2003년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 수산업의 구조

(1) 수산물 생산

① 어업별 생산

가나의 2009년 수산물 생산량은 328,969톤이었다. 이는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매년 4.0%씩 줄어든 결과이다. 생산량 감소의 주된 요인은 잡는 어업의 생산량이 1999년에 492,776톤에서 2009년에 321,815톤으로 매년 4.2%씩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르는 어업은 1999년의 2,900톤에서 매년 9.11%씩 성장하여 2009년에는 7,154톤을 기록했다.

【 표 4-4 】 가나의 연도별 수산물 생산 주어

단위: 톤, %

연도	합계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1999	495,676	100.0	492,776	99.4	2,900	0.6
2000	457,070	100.0	452,070	98.9	5,000	1.1
2001	453,180	100.0	447,180	98.7	6,000	1.3
2002	377,242	100.0	371,242	98.4	6,000	1.6
2003	391,708	100.0	390,770	99.8	938	0.2
2004	400,338	100.0	399,388	99.8	950	0.2
2005	393,020	100.0	391,866	99.7	1,154	0.3
2006	377,357	100.0	375,087	99.4	2,270	0.6
2007	334,306	100.0	330,486	98.9	3,820	1.1
2008	365,425	100.0	359,831	98.5	5,594	1.5
2009	328,969	100.0	321,815	97.8	7,154	2.2
연평균 증감률(%)	-4.0	-	-4.2	-	9.4	-

자료: FAO, Fishstat Plus

즉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이유

는 어선어업 등에 의한 남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나도 마찬가지 경우이며, 가나의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기르는 어업의 생산량 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품종별 생산

가나의 수산물 생산을 2009년 잡는 어업을 기준으로 해서 품종별로 보면, FAO의 통계 분류 기준상 약 77개의 어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가나는 기르는 어업이 발달하지 않고 잡는 어업(전체 비중 2009년도 97.8%)의 비중이 대부분이므로 잡는 어업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 표 4-5 | DR 콩고의 어종별 생산량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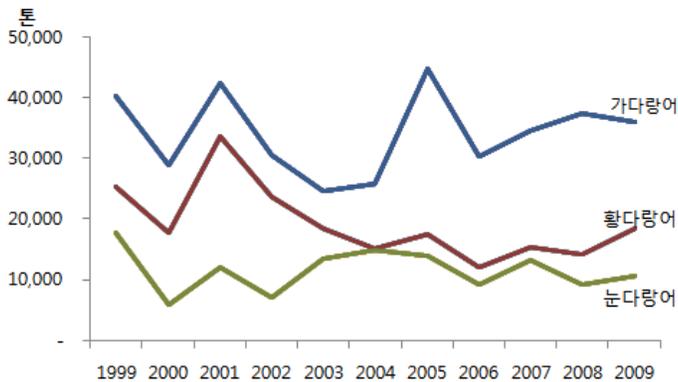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연평균증감률	비중
내수면 어류	74,500	75,000	88,700	1.8	27.6
다랑어류	83,248	55,681	64,973	-2.4	20.2
유럽 안초비	32,107	52,629	54,408	5.4	16.9
정어리류	69,275	109,448	25,748	-9.4	8.0
능성어	12,724	26,456	17,436	3.2	5.4
기타 해면어류	115,933	4,542	6,390	-25.2	2.0
Bongashad	766	303	5,468	21.7	1.7
상어류(상어, 가오리 등)	3,998	1,170	5,403	3.1	1.7
준치	3,262	5,128	4,819	4.0	1.5
돔류	3,986	1,121	4,527	1.3	1.4
기타	92,977	67,910	43,943	-7.2	13.7
합계	492,776	399,388	321,815	-4.2	100.0

주: 잡는 어업 기준

자료: 상계서

가나의 어종별 생산량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인 평균과 상대적으로 내수면 어업의 생산량이 27.6% 이상으로 생산량이 많다는 점, 둘째, 상위 10대 어종에 전체 잡는 어업 생산량의 85% 이상 집

중되어 있다는 점, 셋째, 해면 어류 중에서는 다랑어류에 대한 생산 집중도가 20.2%라는 점, 넷째, 이 외에도 안초비, 정어비 등 주로 부어류의 생산량이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다랑어 조업은 우리나라의 자본이 다수 참가하고 있으며, 가다랑어를 중심으로 다랑어 통조림의 원료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 상계서

【그림 4-1】 가나의 다랑어류 생산 추이

(2) 해면 어업의 실태

가나의 해면 어업은 총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어업이다. 가나의 해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주요 수산자원을 보면, 정어리, 전갱이, 안초비 등과 같은 소형 부어류, 대형 부어류인 다랑어류가 대표적인 어종이다. 이외에 능성어 등과 같은 저서어도 있지만, 종류가 다양한 대신에 어종별 어획량은 비중이 낮다.

가나 어업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생계형 영세어업, 준산업적 연안어업, 산업적 어업으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

생계형 영세어업은 주로 연안에 인접한 해면에서 카누와 같은 원시적인 어업을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나의 전국적으로 2만여 척의 카누가 어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수치는 1997년 가나의 센서스 조사에서 나타난 8,610척보다 2배 이상 많다.

준산업적 어업(연안 어업)은 주로 8~37m의 목선을 주로 이용하며, 최대 400마력의 엔진을 착용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준산업적 어선들은 트롤이나 건착망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산업적 어업은 대형어선으로 강선이며, 외국인 어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업 방식으로는 트롤(주로 외국인 어선), 새우잡이, 다랑어 낚시, 건착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인 투자 기업들은 주로 가다랑어를 대상으로 한 낚시와 건착망 조업을 하고 있다.

(3) 내수면 어업의 실태

가나의 대표적인 내수면 어업의 장소는 볼타(Volta) 호수로 약 140개 어종이 어획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량을 비중별로 보면, 틸라피아가 38.1%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Chrysichtys* sp(34.4%), *synodrantis* sp (11.4%), *Labes*(3.4%), *Mormyrids*(2.0%) 등이 차지하고 있다. 틸라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들은 고유토착어종이다.

1990년대 말에 수행된 이 호수의 어업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이 호수에서만 소형 선외기가 24,035척에 달했고, 이 중에서 30%에 달하는 약 7,200척이 동력어선(900척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선내기)이었다. 이러한 어선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은 이 호수에 설비된 32개의 물양장에서 양륙하고 있다. 이들 물양장 중에서는 시장의 역할을 하는 물양장도 존재하고 있다. 어획량은 1990년대 말 최대 약 4만 톤까지 생산하면서 가나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6%까지 차지하기도 했다.

66) KORAFF, 「2010 KORAFF 창립기념 심포지엄 발표집」, KMI, 2010; KORAFF, 「2011 KORAFF Angola Symposium 발표집」, KMI, 2011.

(4) 기르는 어업의 실태

가나의 기르는 어업 생산량 비중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지만, 10여 년에 걸쳐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주요 대상어종은 틸라피아이며, 최근에는 새우도 생산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나의 기르는 어업은 적어도 10개 지역(아크라, 아산티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5)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앞에서 가나의 수산물 수급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가나의 수산물은 국내 공급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과거의 연구실적과 최근의 수산물 식품 수급표에서 보듯이 가나의 수산물 수요는 70~80만 톤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나의 1인당 수산물 소비는 2009년에 29.59kg에 달했으며, 이 정도의 수산물을 소비하기 위해 가나의 세대당 지출에서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나에서는 수산물을 단백질 공급원천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나인들의 단백질 공급 비중의 60% 정도를 수산물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나의 높은 수산물 소비 형태는 수산물을 신선이나 냉동의 방법으로 원어 그대로 소비하는 것 외에 건조, 훈제, 염장, 건염장, 통조림, 필렛 등 다양하게 이어졌다.

가나에서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주요 생산어종인 다랑어의 어획을 위해 미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어종별로 이용 형태를 보면, 소형 부어류는 주로 훈제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반면에 저서어종은 신선 혹은 냉동의 원어 상태로 판매되며, 산지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다. 선어류는 특히 해당 어종의 성어기에 주로 산지에서 판매되며, 냉동 및 훈제는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가나인들이 즐겨 소비하는 수산물은 부어류 중에서도 정어리, 전갱이

등의 소형 부어류인데 그 이유는 다른 수산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돔, 스내퍼, 새우, 바닷가재, 갑오징어 등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산물에 포함된다.

수산가공업과 관련해서 가나는 다랑어 통조림의 원료인 가다랑어가 낚시와 건착망으로 상당량이 어획되고 있다. 주로 제2의 도시인 테마에 있는 어항에 양륙되며, 이 배후부지에는 3개의 가다랑어 통조림 공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지 자본 회사 1개와 외국인 자본 회사 1개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운영자의 부재로 가동이 멈추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주요 수산식품기업들이 이 가공공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 경제 기여도

가나에서 수산업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전체 GDP의 약 3%가 수산업을 통해 창출되고 있는데, 이는 수산업에서도 어업에 국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은 앞에서 보았듯이 2만 척 이상의 카누를 보유하고 있어 고용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3년 조사에 따르면, 해면의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 종사자는 150,0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 어업종사자들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가나 인구의 150~200만 명이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산업을 단순히 어업이 아닌 수산가공업, 수산물 유통까지 확대해서 보면, 약 50만 명이 수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표 4-6 | 가나 수산업의 경제 기여도

단위: 천 톤, kg/인/연

항목		내용	비고
GDP 대비		3%	2002년
총부가가치(어업)		251,209천 달러	2002년
고용	직접(어업)	210,400명	2002년
	간접(가공/유통 등)	315,600명	2002년

자료: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5) 시사점

가나의 수산업은 최대 70~80만 톤의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30~40만 톤에 그치고 있어 국가의 수산물 수급 균형을 위해 40~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중에서 다랑어류(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가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다랑어류와 관련한 상품 교역이 활발하다. 동시에 가나는 생계형 영세어업, 준산업적 어업, 산업적 어업 등이 골고루 발달한 나라이다. 특히, 카누를 주요 어선으로 하는 연안의 생계형 영세어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업이 갖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나의 수산업에는 다음과 같은 발전 가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식량안보의 문제이다. 수산물의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급 구조는 국제 수산물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가나의 수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1인당 국민소득이 2,777달러 정도로 구매력이 작은 가나에서 수산물 가격의 변동은 국민의 소비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며, 기아와 빈곤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르는 어업의 생산 비중이 너무 작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식량안보와 직결되면서 그 해결 실마리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와 통계가 강화되면서 잡는 어업의 생산량은 지역적으로는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서 가나의 높은 잡는 어업 비중은 가나의 수산물 수요를 식량안보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르는 어업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다랑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테마 항 배후부지의 다랑어 통조림 공장의 가동률을 올려야 한다.

넷째, 제2의 도시인 테마 시에 있는 어항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나는 연안의 생계형 영세어업(카누), 준산업적 어업, 상업적 어업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테마 어항은 가나 최대의 어항 중의 하나인데, 이들 어업별 어선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어획한 수산물의 빠른 양륙을 통해 수산물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가나의 높은 수산물 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테마 항에서는 넘쳐나는 어선들에 의해 어획한 수산물의 품질 저하, 폐기 처분 등의 수산물의 손실률(감모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서는 주요 어항인 테마 항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협력사업의 내용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산가공업은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나의 경우 다랑어류의 생산량 비중이 높으며, 특히 다랑어

통조림의 원료가 되는 가다랑어의 생산량이 많다는 점에서 테마 항을 중심으로 3개의 다랑어 통조림 공장이 입지하고 있다. 현재 2곳이 가동 중인데, 각각 현지 자본과 외국 자본이다.



【그림 4-2】 가나의 테마 항 및 배후부지

2) 협력사업의 개요

최근에 한국의 수산식품기업이 가나의 다랑어 통조림 공장 인수사업에 뛰어들었다. 동 사업명은 “GAFCO SITE’S NEWCO-Tema Ghana”이며, 사업의 범위는 다랑어 통조림 공장, 어분 공장, 냉동냉장창고, 다랑어(눈다랑어, 황다랑어 대상) 핏감용 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사업 목표는 현재 현지에서 다랑어 건착망 수 척을 운영하는 기존의 기업이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여 수직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 과정은 다랑어 어획 → 냉동 보관 → 다랑어 유통 가공(핏감 등) → 통조림 가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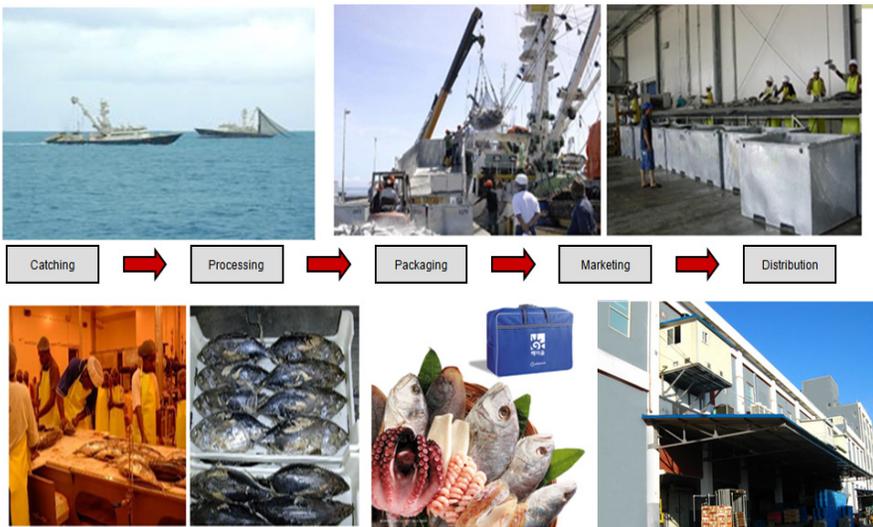
과정을 통해 횡감용 로인과 다랑어 통조림을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지 않고 있던 테마 항 배후부지의 다랑어 통조림 가공공장을 인수하고 새로운 아프리카의 브랜드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3) 세부 추진 방안

(1) 사업 내용

동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순수한 민간끼리 인수·합병을 하는 것이 아닌 민간기업(한국 자본)과 가나 정부의 사업이다. 따라서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자본의 기업은 입찰에 뛰어들어야 한다.

우선 앞에서 설명한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 테마 항의 통조림 가공공장을 인수해야 하며, 이 공장은 연간 57,000톤의 다랑어 통조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어분과 관련해서는 연간 4,500톤을



자료: 사업체 조사

| 그림 4-3 | 동 사업의 사업 과정

생산할 수 있는 어분공장을 운영해야 하며, 이 공장은 다랑어 통조림 가공의 부산물, 혼획에 의해 어획된 소형 부어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다랑어 횡감용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냉동냉장창고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횡감용 사업 외에 생산된 수산가공품(다랑어 통조림, 어분 등)을 보관하는 데도 필요한 설비이기도 하다.

(2) 기대효과

이 사업을 통해 한국 자본의 기업과 가나에게 돌아가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자본의 기업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익 창출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내용을 생략한다. 따라서 가나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마 항을 중심으로 한 ‘Team Food Complex Park’가 조성될 수 있다. 기존의 테마 항과 그 배후부지는 적절한 사업 운영자를 만나지 못해 어획한 수산물의 양륙에만 급급했다. 일부 가다랑어 자원에 대한 통조림 공장이 운영되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협력에 의해서 다랑어 자원에 대한 통조림 외에 횡감용 상품, 어분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테마 항의 배후부지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를 통해 다랑어를 중심으로 한 식품 생산기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

둘째, 수출 확대를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가나의 테마 항에 입지하고 있는 다랑어 통조림 가공공장들은 가나의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입지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다랑어 통조림 시장을 목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나는 수출에 의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셋째, 가나는 국가 경쟁력과 국격을 높일 수 있다. 동 다랑어 통조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한국 자본과 가나 현지 자본이 결합된 PANOFI

이다. 가나의 외자투자법에 의해 외국 자본이 가나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50% 미만에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동 기업은 가나의 기업이 된다. 따라서 다랑어 통조림의 수출에 의해 얻어지는 직접적인 이익 외에 가나의 다랑어 통조림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물론 이에 따른 국격 제고도 가능할 수 있다.

넷째, 단기적으로 지역의 고용 창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현재 운영이 멈추어 있는 동 가공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운영과 동시에 약 2,5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순히 가공공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일자리이며, 이에 따른 간접 고용은 어업, 유통을 포함해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단순 어업 중심의 가나 수산업이 어업, 유통, 물류, 가공, 교역 등을 포함하는 수직적 통합을 통해 산업적 역량이 제고될 것이다.

여섯째, 지역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처로서 소득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 즉 기존의 판매처에 더해서 새로운 판매처의 등장은 가나 테마 항 인근의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안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 문제점

가나의 민간 협력인 다랑어 통조림 사업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료 공급의 물류 문제이다. 테마 항의 배후부지에 다랑어 통조림 가공공장 등이 입지한 이유는 가나 연근해의 가다랑어 자원과 테마 항이라는 두 가지 배경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초로 테마 항이 설계될 당시에 비해 현재 테마 항에 입항하는 어선 수, 양륙량은 크게 늘었다. 따라서 가다랑어를 주로 어획하는 건착망 어선과 가다랑어 채낀기가

어획 후 양륙 시에 적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배후부지에 입지한 기존의 2개의 다랑어 통조림 공장에 동 사업의 가다랑어 통조림 가공공장이 운영될 경우에는 테마 항의 가다랑어 양륙에 적체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료의 품질이 저하되고, 물류와 관련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테마 항의 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테마 항은 생계형 영세어업의 어선들이 심하게 적체되면서 그 적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테마 항은 연안 어선과 근해 어선 입항 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다랑어 양륙이 주로 이루어지는 근해 어선 입항 지역에도 중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적체 현상은 어항의 오염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염이 심해질 경우에는 어항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어항 모라토리엄이 발생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향후 대두되게 된다면 다랑어 통조림 가공공장의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착망 그물



가다랑어 양륙전 선상



양륙한 가다랑어

자료: 현장 조사

【그림 4-4】 가나의 테마항 양륙 모습

셋째, 가나 정부의 수산물 수출 신고 제도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의 문제⁶⁷⁾이다. 가나는 현재 수산물의 수출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에 신고를 해

67)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4를 참조 바람.

야 하며, 신고 받은 관련 당국은 이에 대해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테마 향의 3개의 통조림 가공공장 중 자국 자본이 100% 참여한 공장에 대해 관행적으로 우선해 주고 있다.⁶⁸⁾ 따라서 한국이나 제3국 자본이 참여한 나머지 3개의 가공공장이나 원료를 공급하는 어선어업자들⁶⁹⁾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가나 정부의 관행적인 행정상의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가나 정부와의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필요가 있다.

4. 추진 방안

현재 민간 차원에서 가나의 테마 향 배후부지를 배경으로 가다랑어 통조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가공업이라는 것은 어업, 유통, 가공 등이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테마 향의 원료공급지로서의 기능이 향후 도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가나 정부의 자국 자본 보호라는 관행적 행태는 한국 자본이 참여한 사업에 대한 불공평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관련한 연계 사업으로서 한국과 가나의 정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수산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테마 향의 원료 공급기지로서의 장기적인 기능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관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테마 향의 리모델링 사업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다.

테마 향의 문제점은 늘어나는 수산가공업 수요에 대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8) 이는 현지 조사에 의한 것임.

69) 어선어업에도 10개 이내의 한국 자본이 참여하고 있음.

다음과 같이 테마 항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첫째, 테마 항 근해 어선 양륙 부두의 확장이다. 현재 적체되는 근해 어선들의 신속한 입출항을 위해선 테마 항 부지 중에서 근해 어선의 양륙 부두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가나 테마 항의 입출항 어선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와 양륙량을 추정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륙 시설의 확충이다. 앞에서 양륙 부두의 확장에 따라서 어선의 신속한 입출항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양륙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연안 어선에 대한 충분한 어선 정박지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현재 테마 항은 근해 어선과 연안 어선의 입출항 부두가 인접해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연안 어선이 입출항하는 부두는 현재 연안 어선의 수요가 넘쳐나 어항의 오염까지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단순히 근해 어선 부두만을 확장하는 데 정부 간 협력을 한다면, 실제 가나의 관련 당국에게 있어서 행정적 효과는 일부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나 정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안 어선의 입항 부두에 대한 리모델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 5 장 어업생산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

제5장에서는 수산분야의 지역개발을 통해 아프리카 수산분야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3장의 대 아프리카 수산협력의 추진 전략을 근간으로 하여 수산분야의 대 아프리카 어업생산 협력사업 중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C)의 사례를 검토한다.

1. 협력대상국의 수산분야 현황과 특성

1) DRC의 일반 경제지표

인구 약 7,000만 명의 DRC는 1인당 GDP가 300달러로 최빈국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ODA 원조대상국으로 KOICA의 중점전략지원국에 포함되어 있다.

| 표 5-1 | DRC의 일반 경제지표(2009)

항목	내용	비고
국가 면적(천km ²)	2,345	내수면 약 86천km ² , 3.5% 차지
해안선 길이(km)	37	
EEZ 면적(km ²)	1,150	
인구(백만 명)	67.7	2006년 기준
GDP(억 달러/연)	236	구매력 기준, 세계 117위
1인당 GDP(달러/연)	300	

자료: DRC 수산부처 자료 제공 ; CIA, *World Fact Book* ; FAO 자료

2) 수산분야의 현황

DRC는 2007년을 기준으로 약 24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10만 톤을 수입한 반면, 수산물 수출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내 수산물 공급량은 약 34만 톤에 달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DRC의 수산물 공급에서 국산 수산물은 97.5%가 내수면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수입 수산물은 100% 해산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산 수산물이든 수입 수산물이든 모두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약 5.5kg/인/연이다. 즉 DRC는 수산물 순수입국임을 알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평균인 16.7kg/인/연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국산 수산물(내수면)은 3.7kg/인/연으로 전체 수산물 소비량의 67.3%를 차지하고, 나머지 1.8kg/인/연(32.7%)은 수입 수산물(해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표 5-2 | DRC의 수산물 수급(2007)

단위: 천 톤, kg/인/연

구분	생산	수입	수출	국내공급			1인당 수산물 소비	
				합계	식용	비식용		
수산물	합계	239	103	0 ¹⁾	342	342	0	5.5
	내수면	233	0	0	233	233	-	3.7
	해수면	6	103	0	109	-	0	1.8

주: 1) '0'은 500톤 이하를 의미함

자료: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한편, DRC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의 동향을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4.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인 해는 1998년으로 이에 비해서는 24.0%p가 줄어든 셈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DRC의 수산물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DRC 국민의 수산물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이다. 왜냐하면, FAO의 수산물 소비 통계는 엄격히 구분해서 국내 공급량을 인구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 수요가 많더라도 공급이나 국제 수산물 가격의 변화(자원 감소, 낮은 소득에 따라 국제 수산물 가격으로의 접근 한계성 등) 등에 따라서 FAO의 수산물 소비량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5-3 | DRC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이(연간)

단위: kg/인/년, %

연도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1997년 대비 비중
1997	5.75	100.0
1998	6.85	119.1
1999	6.24	108.5
2000	6.31	109.7
2001	6.13	106.6
2002	6.04	105.0
2003	5.76	100.2
2004	5.72	99.5
2005	5.58	97.0
2006	5.52	96.0
2007	5.47	95.1

자료: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3) 수산업의 구조

(1) 수산물 생산

① 어업별 생산

DRC의 2009년 수산물 생산량은 238,970톤이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매년 0.4%씩 줄어든 결과이다. 생산량 감소의 주된 요인은 잡는 어업의 생산량이 2000년에 245,786톤에서 2009년에 236,000톤으로 매년 0.5%씩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르는 어업은 2000년의 2,076톤에서 매년 4.1%씩 성장하여 2009년에는 2,970톤을 기록했다.

DRC의 수산물 생산 추이를 통해 DRC는 98% 이상 잡는 어업에 치중해

있으며, 기르는 어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기르는 어업에 대한 기술적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 | DRC의 연도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톤, %

연도	합계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2000	247,862	100.0	245,786	99.2	2,076	0.8
2001	235,177	100.0	232,433	98.8	2,744	1.2
2002	241,965	100.0	239,000	98.8	2,965	1.2
2003	238,730	100.0	235,765	98.8	2,965	1.2
2004	240,337	100.0	237,372	98.8	2,965	1.2
2005	239,605	100.0	236,640	98.8	2,965	1.2
2006	239,558	100.0	236,588	98.8	2,970	1.2
2007	238,970	100.0	236,000	98.8	2,970	1.2
2008	238,970	100.0	236,000	98.8	2,970	1.2
2009	238,970	100.0	236,000	98.8	2,970	1.2
연평균 증감율(%)	-0.4	-	-0.5	-	4.1	-

자료: FAO, Fishstat Plus

DRC의 양식어업은 식민지 시절에 식량 연구소를 통해 중요 양식 단지들을 개량하기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정도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대다수의 양식장이 관리 소홀에 의해 쇠퇴하면서 양식어업 활동은 급격하게 퇴보하였다. 양식어업이 다시 중요성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며,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과 더불어 1980년대 말에는 틸라피아를 중심으로 약 700톤/연을 생산하였고, 20여 년간 4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DRC의 수산 관련 부처는 국토에 넓게 퍼져 있는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양식어업이 성장할 수 있다면 광대한 영토에 산재한 소외 지역에 대한 수산물 공급 취약성 및 단백질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② 품종별 생산

DRC의 수산물 생산을 2009년 잡는 어업을 기준으로 해서 품종별로 보면,⁷⁰⁾ 내수면 어류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97.5%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 생산이 내수면 어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DRC의 해안선 길이가 37km로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EEZ의 면적도 1,150km²로 한정되어 해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산물의 생산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표 5-5 | DRC의 어종별 생산량

단위: 톤, %

구분	생산량(톤)	비중(%)
내수면어류	230,000	97.5
상어류	2,760	1.2
정어리류	1,200	0.5
전갱이류	660	0.3
기타해수어류	600	0.3
큰눈벤자리	270	0.1
민어류	270	0.1
붕장어류	120	0.1
참서대	120	0.1
합계	236,000	100.0

자료: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반면, DRC의 수면적은 77,810km²로서 이 중에서 해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8.5%가 내수면 면적이다. 따라서 DRC가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은 바다보다는 내륙의 호수 및 하천과 같은

70) FAO Fishstat Plus의 DRC 통계에 따르면, 기르는 어업의 품종은 내수면 어류로만 나와 있어 잡는 어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DRC의 경우, 잡는 어업의 생산량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므로 기르는 어업의 어종을 포함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내수면에 적합하고, 수산물의 생산량도 이에 따라 배분되어 생산되고 있다.

(2) 해면 어업의 실태

DRC는 좁은 해안선에 의한 한정된 EEZ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면 어업은 매우 좁은 어장을 가지고 있어 어획량 역시 매우 미미하다.

DRC의 상업적 해면 어업은 1950년대 콩고해양수산회사(Pêcherie Maritime du Congo: PEMARCO)로부터 시작되어 첫 해 어획량이 70,000톤에 달했다. 이후 1958년에는 어선 및 어구어법 등의 현대화를 통해 어획량은 140,000톤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단, 인접국인 앙골라와의 수산 우대 협정 때문에 동 기업의 어선이 영해 밖에서 조업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어획량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 기업은 어선을 12척까지 늘리고 육상에 어업기지를 건설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1967년에 어획량은 15,000톤에 그치고 만다. 이후 1978년 DRC의 자이르화(국유화) 정책에 따라 앙골라와 나미비아 등과의 합의를 통해 동 기업은 조업을 중단하였다. 결국 DRC의 해면 어업은 1980년대 상업적 어업의 쇠락에 따라서 연안에서 생계형 영세어업인에 의한 어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DRC에서 해면 어업이 성장을 시작한 것은 2002년에 콩고수산 회사(Société Congolaise des Pêches: SOCOPE)가 대통령령(No. 030/200)에 의해 설립⁷¹⁾되고 이전의 PEMARCO를 대체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 기업은 단순히 해면 어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수면 어업을 중심으로 DRC 수산업의 단기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아직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는 DRC의 정치적 의지의 결여(이는 상당 부분 앙골라와 나미비아와의 어업 우대 협정에 의한 것임), 민간 투자자의 동기 부여 부족, 수산 실무자의 기술 정보 부족, 수산분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

71) DRC 정부는 소수 주주(주식 소유 20%), 나머지는 국내 민간 자본과 외국 자본.

용 불신 등 때문이다.

(3) 내수면 수산업 실태

① 생계형 영세어업

DRC의 생계형 영세어업은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실제, DRC 수산물의 연간 생산량 중에서 약 97%가 이 생계형 영세어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09년의 수산물 생산량과 DRC 수산물의 평균 산지 가격인 1.5달러/kg를 기준으로 생계형 영세어업의 경제 규모는 $228,920,000\text{kg} \times 1.5\text{달러/kg} = 3\text{억}4,338\text{만 달러}$ 의 가치에 이른다. 이는 앙골라 GDP의 약 1.5% 수준으로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비중인 0.2~0.5%와 견주어 경제적 공헌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AO의 Food Balance에 따르면, 생계형 영세어업의 생산량에 의한 228,920톤은 2009년 DRC의 전체 단백질 공급량의 1/3에 달한다.

DRC의 생계형 영세어업의 어업인들은 공동체 단위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들의 개별 생산량은 연간 1.57톤으로 생산성이 높지 못하다. 그러한 이유는 낙후된 수산 기술(어구어법), 부족한 국가 재정을 들 수 있다. DRC 정부가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이유는 DRC 국토의 물리적·자연적 현상 등으로부터도 기인한다.

| 표 5-6 | 주요 생계형 영세어업의 분산지역(호수)-서부

호수명	특징	비고
툼바 (Tum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얇은 수심 - 면적: 765km²(부산보다 약간 넓음) - 어종: 114종 - 잠재어획량: 2,000~3,500톤/연 	최근 어획 관련 자료 없음, 부산(760km ²)
마이 은돔베 (Mai Ndon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 산림 지대 분지 지대, 얇은 수심 - 면적: N. A. - 어업인: 약 4,600명 - 어획량: 1,000톤/연 	침수 늪지와 호수면 연결

표 5-6 | 주요 생계형 영세어업의 분산지역(호수)-서부(계속)

호수명	특징	비고
풀 말레보 (Pool Maleb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 호수 - 면적: 550km²(대전보다 약간 넓음) - 어종: 약 165종 - 어업인: 약 5,000명 - 생산량: 약 3,500톤 	1980년대 수산부 조사, 대전(539km ²)
키부 (Kiv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국과 공유(DRC 58%) - 면적: 2,370km²(서울의 4배) - 어종: 고유종 서식, 심해 어종 서식 - 어업인: 약 6,563명 - 생산량: 약 6,500톤(심해 어종만) 	
에두아르드 (Edou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국 공유(DRC 71%) - 면적: 2,300km²(서울의 3.8배) - 어종: 틸라피아, 메기 등 - 어업인: 카누선 1,41척 - 생산량: 연간 11,400톤 	최근 통계 자료 미비, 대표적인 불법어업지역(산란시기, 그물코, 남획 등)

자료: DRC 수산부 자료(출장 자료)

생계형 영세어업은 DRC 국토에 산재해 있는 호수들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도입이 어렵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금어기·산란기 무시, 불법그물 사용 등과 같은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다.

② 상업적 어업⁷²⁾

DRC의 상업적 어업도 주로 내수면 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키부 호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부 호수지역에서 고루 발전해 왔다. DRC의 상업적 어업은 1940년대 그리스 소속의 어업회사들이 들어오면서 탕가니카(Tanganyika) 호수와 알베르(Albert) 호수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1970년대에 연간 30,000톤을 생산하기도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2) 상업적 어업에 준하는 어업임.

첫째, 탕가니카 호수는 호수 면적이 32,900km²로서 우리나라의 1/3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호수며, 수심은 평균 570m로 바이칼 호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심이 깊은 호수이다. 거대한 호수 면적에 따라서 DRC는 인접국과 동 호수를 공유하고 있는데, DRC의 소유 면적은 약 45%에 달한다. 탕가니카 호수에서는 과거에 많은 수산기업들이 진입하면서 현대화된 어구어법이 도입된 바가 있다. 이러한 현대적인 기술은 동 호수의 주요 상업적 어종으로서 6종의 심해 어종(상업적 어획의 5%), 2종의 담수 정어리(상업적 어획의 65%), 최대 포식자인 LATE(토속종, 상업적 어획의 30%)를 개발하여 이용해 왔었다.

1995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어획량은 16.5~20만 톤에 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약 절반이 DRC의 어업인에게 돌아갔었다. 그러나 인접국의 어업자원 국유화, 정세 불안 등에 의해서 현재는 10여 척의 상업적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톤당 연간 500톤 정도를 생산하여 연간 총 5,000톤을 생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DRC 측의 호안 부두에는 생계형 영세어업인이 약 26,300명에 카누어선 10,650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알베르(Albert) 호수는 서울의 8.7배에 달하는 5,270km²의 면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인접국과 공유하여 DRC는 약 46%를 소유하고 있다. 이 호수에서는 상업적 어업의 대상이 되는 3종의 어종을 가지고 있다.

| 표 5-7 | 주요 생계형 영세어업의 분산지역(호수)-동부

호수명	특징	비고
탕가니카 (Tanganyi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국 공유(공고 45%) · 평균 수심: 570m(세계 2위) · 면적: 32,900km²(남한의 1/3) · 어종: 6종(심해), 2종(토종) · 어업인 수: N. A. · 어선 수: 약 10척 · 어획량: 5000톤/연(현재) 	1995년 조사에 따르면, · 어획량: 20만 톤 · 어업인 수: 약 26,300명 · 어선 수: 약 10,650척(카누)

표 5-7 | 주요 생계형 영세어업의 분산지역(호수)-동부(계속)

호수명	특징	비고
알베르 (Albe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국 공유(DRC 46%) · 면적: 5,270km²(서울의 8.7배) · 어종: 3종(토속어) · 어업인 수: 현재 알 수 없음 · 어선 수: 1척으로 추정(상업적 어선) · 생산량: 알 수 없음 	자이르 ¹⁾ 이전 · 어획량: 12,000톤 · 어업인 수: 약 12,000명 · 기업 수: 13개 · 어선 수: 50척(상업), 3,200척(카누)
모에로/루아풀라 (Moero/Luapu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탕가와 잠비아 광산지대 이웃하여 이들 지역에 수산물 공급 · 면적: 4,650km²(서울의 7.7배) · 어업인 수: 약 5,000명, 4,500척의 카누선 · 잠재어획량: N. A. 	추정치임

주: 1) DRC 이전 국명은 자이르이며, 자이르 시대에 국유화가 추진되었는데, 그 이전 시대를 의미함

자료: DRC 수산부 자료(출장 자료)

DRC 이전 국가인 자이르의 국유화 시대 이전에는 이 호수를 대상으로 13개의 상업적 수산기업과 50여 척의 현대화 어선이 연간 12,000톤을 생산했으나 자이르의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대부분의 수산기업이 조업을 중단했다. 1980년대 말에 높았던 어획량은 외부 원조 프로그램에 맞춘 신규 투자로 인접국인 우간다로 진출한 DRC 수산기업의 성과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대략 3,200여 척의 카누 어선이 DRC 정부에 등록되었었는데, 현재는 상업적 어선 1척만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어업인은 약 12,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셋째, 모에로 루아풀라(Moero/Luapula) 호수는 4,650km²의 면적으로 서울의 7.7배에 달한다. 이 호수는 인근의 카탕가(Katanga)와 잠비아 광산(동광) 지대에 이웃하여 수산물 유통이 차단된 이 지역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 호수를 대상으로 약 4,500척의 카누 어선과 약 5,500명의 어업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수산물 유통

① 수산물 가격

수산물은 DRC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중적인 음식이다. 그러나 DRC의 수산물 수급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DRC의 수산물 유통은 내륙 수면의 고립적인 상황과 파손되거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도로 등 물류망)에 의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산물류의 현실을 반영하여 DRC의 수산물 소매가격은 생산 단가의 약 2배 이상이다.

| 표 5-8 | DRC의 수산물 가격

등급	종류(현지 명칭)	생산가	소매가
1등급	Eurochromis(Mabundu Marechal) 외 다수	3.5	7.0
2등급	Babus lineolatus(Mopongo) 외 다수	2.5	5.0
3등급	Silure(Ngolo, Myanga, Nzombo, Mimbete 등)	2.0	3.5
4등급	기타 어종	1.0	2.0

자료: DRC 수산부 자료(출장 자료)

② 주요 소비지역

DRC의 수산업이 과거에 비해 쇠퇴하면서 각 지역의 수산분야도 퇴보하면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생산한 수산물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생산의 40~45%를 차지하는 콩고 강과 지류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약 40%가 수도인 킨샤사(Kinshasa)로 유통되어 소비된다. 산지인 반둔두(Bandundu) 지방은 콩고 강과 지류 생산량의 25%를 생산하지만, 국내총생산의 4.7%만을 소비하고 있다. 대서양 연안의 생계형 영세어업으로부터 생산된 80%의 수산물은 바콩고(Bas-Congo) 주⁷³⁾에서 소

73) 수도인 킨샤사가 속한 주로 대서양 연안에 인접한 주.

비된다. 동부 지역인 카탕가 지방에서는 카사이(Kasai)와 키부(Kivu) 두 도시에서 탕가니카 호수 생산량의 80%를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유통망의 부족에 의해서 DRC의 수산물 소비량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내수면 어류(담수어)를 주로 생산하는 반둔두 주에서는 1인당 연간 수산물 생산량이 3.6kg으로 DRC 평균인 5.5kg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반해 킨샤사와 바콩고 주에서는 1인당 27.7kg을 소비하고 있어 이는 세계 평균인 16.4kg보다 68.9%나 많은 수치이다. 동부 지역의 대도시인 카탕가 지역에서는 연간 1인당 평균적으로 10.3kg을 소비하고 있어 DRC의 평균 소비량을 웃돌고 있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에는 주로 급속 냉동한 수산물들이며, 이는 DRC 국산 수산물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3~4배 저렴한 중급품 정도의 수산물들이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소형 전갱이의 가격은 0.9달러/kg에 지나지 않는다.

③ 유통망

수산물 유통업자는 DRC의 수산물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산물이 유통되는 동안 적절한 보관장치(냉동냉장창고 등)가 부족한 현실이다. 주요 산지인 키사가니(Kisangani), 뽀바(Bumba), 음반다카(Mbandaka), 반둔두 등에서부터 킨샤사까지 운송하는 데 있어서 권고 사항 따위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재를 위한 행정력이나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대서양 연안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값비싼 냉동화물차를 이용하여 무안다(Muannda)-킨샤사 도로(500km)를 통해 대도시도 수송된다. 탕가니카 호수 및 카마론도(Kamarondo) 침하지대의 수산물은 카사이 지방의 대도시들, 남부 카탕가의 광산도시들에 유통되며, 어로 중심지인 킬레미(Kalemie)를 경유하는 철도를 이용하여 마니에마(Maniema)까지 유통된다.

동부 지방의 다른 호수의 어획물 중에서 20%는 지역에서 소비되고 나

머지 80%가 인근 지역의 대도시에서 소비된다. 알베르 호수의 수산물은 주로 가장 가까운 부니아(Bunia) 시를 거쳐서 콩고 제3의 도시인 키상가니(Kisangani) 시와 북부 키부 시까지 유통된다. 북부 키부는 에두아르드 호수의 수산물을 공급 받는다.

| 표 5-9 | DRC의 수산물 유통망과 유통수단

생산지	운송수단	소비지
대서양 연안	트럭 및 항공	Matadi, Kinshasa, Kasai (Kinshasa 경유)
Bandundu 지역	선박	Kinshasa
Mbandaka	선박, 항공	Kinshasa
Bunba, Lisala와 Kisangani	선박	Kisangani, Kinshasa
Kamalondo(침하지대)	트럭	Lubumbashi
Katanga 인공호수	기차	Kasai, Maniema
Kalemie, Uriva(탕가니카)	기차, 트럭	Lubumbashi, Kasai, Maniema
Vitshumbi(Edouard)	트럭, 선박	Bukabu, Goma
Kasenyi(알버트)	트럭, 항공	Bunia, Kisangani, Goma

자료: DRC 수산부 자료(출장 자료)

DRC의 넘치는 수자원과 이를 근간으로 한 수산물 생산 잠재성을 고려한다면, 대국민 단백질 공급원인 내수면 어류(담수어)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 계층의 국민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소비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수면 어류의 공급을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이 상품에 대한 일반 가정의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고가의 사치품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내수면 어류에 대한 수요는 잠재적으로 충분히 있고, 이를 전통적으로 소비해 온 식습관은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며, 이를 저렴한 수입 수산물(전갱이 등)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 수산물은 거의 킨샤사와 바콩고 주에서 거의 80%(염장 건어물은 60%)를 소비한다. 동부 지역인 카탕가에서는 수입 수산물의 약 15~18%만

을 소비한다. 나머지 약 2~5%는 카사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DRC의 서부 해안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이다.

이외에 DRC의 동부 지역에 인접한 탄자니아 등으로부터도 동부 지역 거대 호수의 수산물이 DRC로 수입되고는 있지만, 그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들 수입 수산물은 주로 틸라피아를 비롯한 담수 정어리류 등이다.

4)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

DRC의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DRC 수산업 발전의 자산이기도 하다. 하나는 다양한 수면적을 배경으로 한 생산 잠재력이다. 둘은 과거의 전통적인 수산업에 대한 전문성이며, 이는 곧 DRC의 수산업 발전과 함께 어업인의 강력한 수입 확대 동기로 이어질 것이다. 셋은 연간 약 500,000톤에 달하는 국내 수산물 수요이다.

(1) 잠재적 생산량 70만 톤

2000년 6월에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SABUNI(벨기에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DRC의 수산물 생산 잠재력은 MSY 수준에서 707,000톤에 이른다. 당시 DRC의 수산물 생산량이 약 20만 톤 전후였다는 것을 감안하며, 약 50만 톤 이상의 생산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조사·분석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DRC의 수산물 생산 수면을 내수면과 해면으로 구분해서 보면, 내수면의 생산량 개발 정도가 해면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수면은 전체 잠재적 생산량 707,000톤 중에 99.2%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수면의 개발 정도가 66.7%인 데 반해 내수면의 개발 정도는 46.5%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개발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가장 넓은 수면과 수심을 보이는 탕가니카 호수의 개발 정도가 11.5%로서 향후 잠재적 생산량의 약 10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 이외에 키부 호수도 개발 정도가 23.7%에 지나지 않아 동부 지역의 가장 넓은 호수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DRC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증대에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이들 내수면 호수를 중심으로 상업적 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호수를 중심으로 DRC의 수산물 생산량의 비중을 생계형 영세어업과 상업적 어업으로 구분하면, 상업적 어업의 비중은 평균 2.1%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자이르화(국유화) 이전에 이들 지역에서 상업적 어업이 성행했었다는 것은 이들 지역에 상업적 어업을 도입하여 DRC의 수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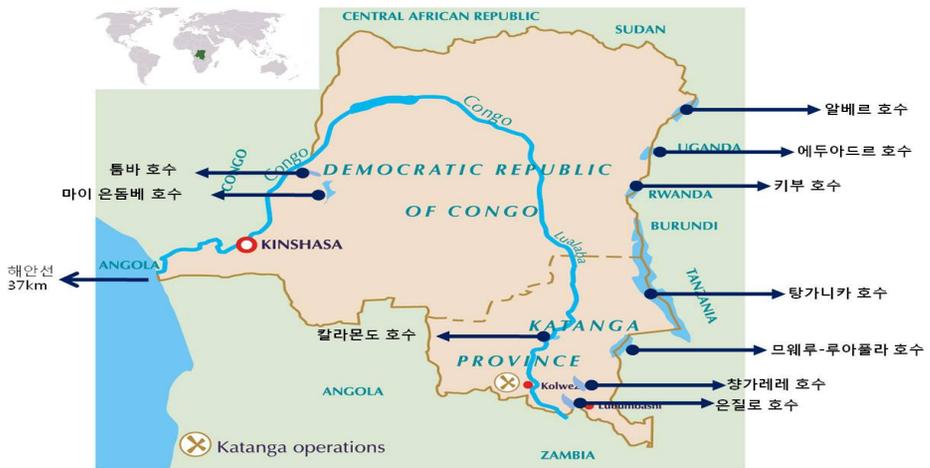
【 표 5-10 】 DRC의 수산물 생산 잠재력과 실제 생산 비교

수면		잠재적 생산량 (톤)	실제 생산량(2000년 전후)					
			생계형 영세어업		상업적 어업		합계	
			톤	%	톤	%	톤	%
내 수 면	거대 호수(동부)						70,500	
	Tanganyika	400,000	44,600	96.9	1,400	3.1	46,000	11.5
	Kivu	19,000	4,500	100.0	-	-	4,500	23.7
	Edouard	20,000	9,000	90.0	1,000	10.0	10,000	45.0
	Albert	13,000	8,800	80.0	1,200	20.0	10,000	76.9
	Katanga 지역호수						30,700	
	Moero-Luapula	12,000	10,000	90.0	1,000	10.0	11,000	91.7
	Tshangalele	4,500	2,000	100.0	-	-	2,000	44.5
	N'zilo	2,500	500	80.0	2,200	20.0	2,700	60.0
	Kamalondo	30,000	15,000	100.0	-	-	15,000	50.0
	하천 지구						97,000	
	콩고 강+지류	137,000	66,500	100.0	-	-	66,500	48.5
	Tumba	8,000	3,800	100.0	-	-	3,800	47.5
Mai Ndombe	55,000	26,700	100.0	-	-	26,700	48.5	
해면	대서양 지구	6,000	3,500	87.5	500	12.5	4,000	66.7
합계		707,000	194,900	97.5	5,100	2.6	201,200	27.6

자료: DRC 현지 수산부로부터 입수

주: SABUNI(2000. 6.)

넷째, 내수면 분야 중에서 거대 혹은 지역 호수를 제외한 콩고 강과 그 지류에서는 생계형 영세어업이 대부분이며, 상업적 어업이 전무한 상태이다. 실제 하천 등에서는 상업적 어업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의 생계형 영세어업의 수준은 매우 유치한 어구와 어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조업 활동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⁷⁴⁾ 생계형 영세어업을 중심으로 어구어법의 개선을 통한 조업 위험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자료: Google 검색(www.google.co.kr); Katanga Operation

| 그림 5-1 | DRC 지도와 호수 위치

(2) 전통적인 내수면 어업 기술과 소득 확대 동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RC의 수산업은 주로 내수면 어업을 통해 성장하고 쇠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과거 1960년대를 중심으로 상업적 어업이 성행하기도 했지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생계형 영세어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생계형 영세어업자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촌계가 수산업

74) 급류에 매달려 어획을 하는 등, 이에 따른 산업재해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협동조합과 같이 지역 어업의 구심점이 되는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어업인들은 대개 같은 종족으로 구성된 가족 단위이며, 임시 거처에 기거하면서 대를 이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⁷⁵⁾

그러나 이들 생계형 영세 어업인들은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어업인 수 이상이다. 이들의 어업은 생산성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는 기술적, 사회경제적, 제도상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낚은 시설과 적절한 어로 장비가 부족하다. 이들은 호수나 하천에서 카누 어선을 사용하며, 유치한 어구어법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둘째, 수산물의 양륙, 보관, 처리, 운송에 필요한 산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 표 5-11 | DRC의 생계형 영세어업의 어구어법

어구어법		내용
카누선(단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나무를 깎아 만든 어선(일부 널판지 동력선) · 비동력선 · 연간 1톤의 이하의 어획능력
어구(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마다 개인 그물 소유(그물코 제한 무의미) · 주로 수작업 그물(예망 중심)
가공 방법	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처리 방법 · 비위생적 조건, 유치한 화덕(가내수공업 형태) · 영양분 약 30% 손실 · 어업인 1인당 평균 375kg 생산(15kg 바구니 25개) · 개선된 훈제기를 보급했으나 어업인 개별 소유로 생산성 낮음
	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 가격이 비싸서 상업 이익이 낮음 · 보편적이지 않음
	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가니카 소형 정어리 대상(일부 지역) ·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이익 높음

자료: DRC 수산부 자료(출장 자료)

75) 일부의 경우에 선상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경제적인 제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인 공동체를 위한 사회 기반 시설과의 괴리이다. 즉 어업인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위한 학교, 의료 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어업인 공동체 형성에 대한 의식 및 리더십의 부재이다.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과 연계된 의식이 개별 어업인 간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합리적인 리더십에서 발휘될 수 있다.

특히, 생계형 영세어업의 공동체 조직 부재는 어구에 대한 감시 부재, 시설 관리 부재로 인한 유통과정에서의 손실 발생,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동기 부재, 어업인들 간 불신 초래, 금융 지원의 차단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제도적인 제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 부처에 비해 수산분야에 대한 명확한 행정 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⁷⁶⁾

둘째, 정치권의 의지 부족과 사회적 무관심이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심해 지역에 분산된 어업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이 낮다.

셋째, 수산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국가 비전 부재이다. 이에 따라서 정책 도입의 목표와 체계적인 예산 투입이 곤란한 형편이다.

이러한 제약들이 DRC 내수면의 생계형 영세어업의 발전을 막고는 있지만, 이들 어업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조업을 하는 지역에 대한 어업 환경(수생동물의 생태, 어기 등)에 대해서는 경험에서 획득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소득 증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부터 이들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 및 어구어법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우리나라의 어촌계나 수산업협동조합과

76) 현장 출장 조사를 통해 DRC 수산국장의 면담 결과임.

같은 공동체 도입, 정치제도적으로 DRC 수산분야 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 확정과 행정력 확보를 통해 DRC 내수면 어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3) 잠재적 수산물 수요 50만 톤

FAO는 수산물 소비에 대해 1인당 권장 소비량을 권고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FAO는 세계 평균으로 수산물을 연간 21kg/인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단,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12kg/인을 권고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FAO의 DRC 수산물 권장 소비량은 약 80만 톤이 된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DRC의 국내 수산물 공급량은 34만 톤으로 약 46만 톤의 수산물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DRC의 국민들은 내수면 어류에 대한 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DRC의 국산 수산물 공급량 부족으로 국산 수산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대 호수를 중심으로 한 내수면 어업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인 DRC의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대 잠재 생산량인 70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고, FAO의 권고에 따라 80만 톤의 수요량을 가정한다면, DRC의 자급률은 8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수산업 성장을 위한 목표

DRC의 수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즉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DRC의 잠재적 생산량은 70만 톤에 달하고, 현재까지

는 24만 톤 정도에 수산물 생산이 멈추어져 있다. 전체적인 총량 기준으로 70만 톤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개별 어종의 남획이 자행될 수 있고, 이는 생태계 교란으로 전체적인 자원량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어종별 자원 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둘째, 수산분야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DRC의 수산업이 쇠퇴한 상태에서 다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DRC의 수산물 생산성을 제고한다면, 동시에 최적의 국가 사회적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업적 어업의 활성화이다. 상업적 어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다. 즉 상업적 어업이 활성화되면 수산자원의 감소가 우려됨과 동시에 생계형 영세어업과의 갈등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해양의 경우에는 상업적 어업과 생계형 영세어업의 어선 규모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안과 근해로 구분하기 쉽지만, 내수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부의 거대 호수들 중에서 탕가니카, 키부 등 과거에 상업적 어업의 성과가 있던 지역에서는 상업적 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중심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부 지역 호수나 하천(콩고 강 유역과 지류)에서는 생계형 영세어업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2. 협력사업의 내용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한국과 DRC의 수산협력을 위해서는 DRC의 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우선된 후에 협력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DRC

의 수산업을 보면, DRC는 주로 내수면 어업에 대한 낮은 생산성을 과거 이상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

따라서 DRC와의 협력 수요는 이들 내수면의 호수를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으로 전개한다.

2) 협력사업의 개요

동 사업은 ‘DRC 내륙 수산업 개발-탕가니카(Tanganyika)호수와 은돔베(Mai-Ndombe)호수-’로서 수혜자는 DRC의 어업인과 소비자들이다. 협력사업의 기한은 처음 5년간을 시작으로 성과 평가에 의해 갱신한다.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54,235,000달러로 추정된다.

DRC는 주요 호수별로 생계형 영세어업과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어업인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극히 제한적인 생산 수단으로 조업을 하면서 연간 어획량은 20만 톤 전후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방식의 지원과 재정의 합리적 이용(신용 대출 등)이 선행된다면, 연간 27만 톤의 수산물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연간 수산물 생산량이 47만 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 증대는 상업적 어업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과 성과의 달성은 DRC 어업인의 소득을 늘려 지역적 생활 안정(고용 포함)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과 DRC 국가의 식량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현대적인 어로 장비의 공급, 어업인 교육, 현대적인 수산물 취급 기술의 보편화, 사회간접자본의 구현을 통한 상업적 어업의 재구성 등이 세부 목표에 포함된다.

3) 세부 추진 방안

(1) 사업 내용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행 방법은 반드시 어로 장비 공급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판매를 책임지는 창구를 설립한다. 이 창구가 자본 출자자(국가, 기관 등)에 대한 상환을 담당한다. 상환 방식은 현물 전매 방식과 출자자 또는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이자율 설정은 생산자와 투자자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대어업인 신용대출은 어획물의 손상 및 손실, 자체 소비분을 계산한 15%를 기준으로 차감하여 어업인에게 대출한다.

대출된 지원금액으로 생계형 영세어업인은 3인 승선의 개량 어선으로 조업이 가능하게 되고, 상업적 어업인은 4인 승선의 어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 계획은 생산한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양륙, 저장, 운송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충당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다.

동 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업은 크게 ‘대어업인 개별 지원사업’, ‘민간 참여사업’, ‘어업 인프라 확충사업’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대어업인 개별 지원사업은 어로 장비의 현대화를 중점으로 개별어업인의 무동력선에 장착형 엔진(선외기)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민간 참여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예망(선망)과 트롤망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여 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물을 제작하는 설비가 투입된다. 이러한 설비는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투자로 유치할 수 있으며, 다른 방안으로서는 지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예망 설비의 경우에는 약 10곳에, 트롤망 설비는 15곳에 설비하여 지속적인 그물 수요에 대응한다.

마지막 사업은 해당지역의 어업 인프라를 확충, 개선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간이 냉동냉장창고의 설립, 발전기 보급, 공동체 활용 건물(어업인 회의, 휴식 등), 어장 관련 설비, 산지 시장 건립 혹은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DRC의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간이 냉동냉장창고⁷⁷⁾는 10개(10곳에 1기씩) 정도, 발전기⁷⁸⁾ 10개(10곳에 1개씩), 공동체 건물⁷⁹⁾ 10개(10곳에 1기씩), 어장 관련 설비 5곳, 산지 시장 설립 5곳을 설비한다.

| 표 5-12 | 동 사업의 사업 규모(DRC 계획)

항목	세부 항목	수량
대어업인 개별 지원사업	어로 장비 현대화	-
	장착형 모터	100개
민간 참여사업	예망 생산 설비	10
	트롤망 생산 설비	15
어업 인프라 확충사업	간이 냉동창고	10개
	발전기	10
	공동체 건물	10
	어장 관련 설비	5
	산지 시장 시설	5

자료: DRC 수산부 자료(출장 자료)

(2) 기대효과

동 사업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수역에서의 수산물 생산량이 약 84%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어업인의 수익을 높이는 가격 구조로 산지의 수산시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77) 산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로서 소비지의 현대적 냉동냉장창고보다는 간이적인 형태.

78) 냉동냉장창고 설립 지역을 중심으로 설비.

79) 어업 관련 공동체 시설로서 공동체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규모(DRC의 수준을 고려).

셋째, 어구어법과 수산물 취급에 대한 기술이 개선될 것이다.

넷째,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산물 품질 저하가 개선될 것이다.

3. 문제점

동 사업의 문제점에는 사업 대상지의 확정, 사업 운영 주체를 들 수 있다.

1) 사업 대상지의 확정 문제

동 사업의 사업 대상지는 마이-은돔베 호수와 탕가니카 호수로 구분되어 있다. 이 두 호수의 거리는 DRC의 북서부(마이-은돔베 호수)와 동부(탕가니카)로 나뉘어져 있어 그 거리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단점이 있다. DRC의 열악한 교통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거리의 문제는 사업 운영자가 두 곳을 관리·운영·감독하기에 어렵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마이-은돔베 호수와 탕가니카 호수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마이-은돔베 호수는 첫째, 콩고 강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호수 외에 콩고 강이라는 하천 개발과도 연계할 수 있다. 즉 DRC는 콩고 강과 그 지류를 교통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DRC의 열악한 육상 물류 환경(도로, 철도 등)으로부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둘째, 동 호수는 킨샤사 등과 같은 DRC 내 거대 소비도시와 비교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지역 소비 외에 지역 외 출하를 도모할 수 있어 수산물 가격에 대응한 어업인의 소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탕가니카 호수는 잠재적 수산물 생산량이 현재의 수산물 생

산량의 약 10배에 달할 정도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탕가니카 호수를 사업 대상지에 포함할 경우에는 첫째, DRC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도인 킨샤사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둘째, 수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지역 외로 출하하는 것이 항공을 제외하고는 교통상의 문제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비록 탕가니카 호수 인근에서 DRC 남부로 이어지는 철도가 계획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DRC의 수산물 소비가 많은 킨샤사 등 서부 지역으로 연계되는 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물류상의 이점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탕가니카 호수를 동 협력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탕가니카 호수의 인접국 혹은 제3국으로의 수출을 고려한 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호수를 이용한 물류 수단의 개발과 항공 물류 수단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사업 운영관리자의 선정 문제

대부분의 수산협력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공동된 것이 바로 사업운영자의 선정 문제이다. 다행히 DRC에는 KOICA의 해외사업소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의 행정적인 관리·감독은 DRC의 KOICA 사업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세부 사업 중에는 민간 참여사업(어구 제작 사업-예망 및 트롤망)이 포함되어 있고, 인프라 사업 중에는 토목 및 건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민간 참여사업에 대해 국내 기업의 참여 혹은 현지나 제3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사업 운영자를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내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지역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설기업이 참여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추진 방안

앞에서 동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이 DRC의 내수면 어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DRC가 제안한 동부 호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그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점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부의 호수를 활용한 내수면 어업의 개발보다는 서부의 호수(마이-은돔베 호수 등)와 하천을 활용한 내수면 어업의 개발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것이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생산물에 대한 지역 내외 소비 및 판매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을 전제로 동부 호수(탕가니카 등)에 대한 내수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또한 탕가니카 호수 등을 포함한 동부 호수의 내수면 어업 개발은 우선적으로 도로, 철도, 용수로 등과 같은 경제적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 사업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서부의 호수와 하천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KOICA의 인적 자원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KOICA 현지 지소에는 내수면 어업 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내수면 어업 개발은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업 훈련, 생산물에 대한 시장 개척,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 자연과학적 어업 관리와 평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사업 기간 동안 현지에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ODA 원조 원칙 중의 하나인 선진국형 원조 방식을 전제로 설명해야 한다.

DRC는 KORAFF 제3차 앙골라 심포지엄에서 내수면 어업 개발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요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공적원조자금의 집행기관인 외교통상부와 KOICA에 DRC가 직접 동 사업의 계획과 ODA 지원을 신청하는 것에서부터 DRC가 제안한 사업을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DRC의 KOICA 지소 및 주DRC 한국대사관이 DRC의 관련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서를 DRC가 한국 측에 제안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의 수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이후에는 DRC의 관련 부처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의지를 한국 측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관련 사업의 관계 부처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관계부처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원조와 공여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높일 수 있으며,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제 6 장 양식개발형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 방안

1. 협력대상국의 수산분야 현황과 특성

1) 수산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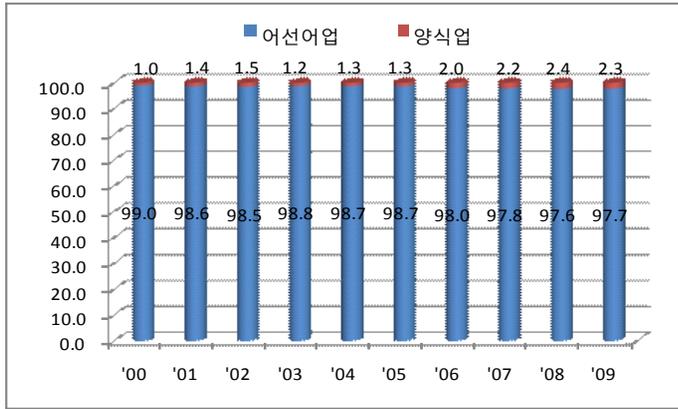
기본적으로 말라위는 연안을 접하지 않은 내륙 국가이지만, 전체 국토의 21%가 내수면일 정도로 수면자원이 풍부하다. 말라위 호수(Lake Malawi)를 비롯해 말롬베(Lake Malombe), 칠와(Lake Chilwa), 치우타(Lake Chiuta) 호수와 말라위 남부 지방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시레 강(Shire River)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 호수는 말라위 내수면 중에서도 그 규모가 가장 크며,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로 탄자니아와 모잠비크도 이 호수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위의 수산물 생산량은 2010년 말 기준으로 9만 6천 톤⁸⁰⁾에 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작다. 특히 양식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 비중은 2% 남짓으로 철저하게 어선어업 의존형의 생산구조를 가지는데다, 말라위의 어선어업은 말라위 호수에 집중되고 있다. 말라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말라위 호수에서의 수산물 생산 비중은 85%에 육박한다. 이외에 칠와 호수(8%)와 시레 강(6%)이 그 뒤를 잇는다.⁸¹⁾

그런데 이처럼 말라위 호수 중심의 어선어업 위주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말라위의 수산물 생산구조는 자원 고갈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

80) 말라위 경제기획개발부, ECONOMIC REPORT, 2011, p. 17.

81) 상계서.



자료: FAO, Fishstat

【그림 6-1】 말라위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비중

한편, 말라위 내수면에는 총 800여 종의 수생 생물종이 존재하지만, 상업적으로 생산 및 이용되는 종은 극히 일부 어종에 국한되어 있다. 주요 생산어종은 틸라피아과인 우시파(Usipa, 학명 *Engraulicypris sardella*), 우타카(Utaka, 학명 *Haplochromis spp.*), 참보(Chambo, 학명 *Oreochromis spp.*) 등이며, 상위 10위 품목이 말라위 수산물 생산량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어종에 생산이 집중됨으로 인해 자원에 대한 어획강도가 높아지면서 자원 고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어종들의 판매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말라위 수산물 시장에 대한 교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양식업은 2000년대 이후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생산 규모는 2,000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말라위의 양식업은 전통적인 소규모 양식어가에 의한 축제식 양식(pond culture)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규모 상업형 양식업은 거의 발달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 소규모 양식장이 1만 개가량으로 급증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양식장이 200m² 이하 규모의 소규모 양식장으로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사료 부족과 육종 등 기술 부족 문제에서 기인

한다. 특히 사료 문제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옥수수나 대두 등 곡물 수급이 어렵고, 수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다만, 말라위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치어(fingering) 확보를 위해 줌바(Zomba), 음주주(Mzuzu) 지역 등 네 곳에 각각 시험적으로 메기 부화장을 건설하였으며, 킬라피아 육종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⁸²⁾

또한 생산어종도 대부분이 킬라피아(93% 이상)이며, 메기(5%), 잉어/무지개 송어/관상어(2%)⁸³⁾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말라위 양식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말라위의 수산물 생산은 어선어업 위주의 생산, 양식업 발전의 부진, 특정 수면에 대한 생산 집중, 특정 어종에 대한 생산 집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수산물 교역

수산물 수출입은 말라위 수산물 수급이라는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말라위의 수산물 수출량은 연평균 2.3%씩 감소하는 데에 반해, 수입량은 9.2%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수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수산물 총공급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2%에서 2009년 5.0%로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2) 상계서, p. 23.

83) 상계서, p. 22.

| 표 6-1 | 말라위의 수산물 수급

단위: 톤, %

구분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총생산량(a)	46,234	50,749	65,484	71,266	71,289	95,724
수출량(c)	33	86	1,170	64	15	12
수입량(b)	430	2,059	3,556	6,247	1,576	2,481
총공급량(d)	46,631	52,722	67,870	77,449	72,850	98,193
공급량 대비 수입량(d/b)	0.9	3.9	5.2	8.1	2.2	2.5

자료: 말라위 경제기획개발부(2011)

말라위의 수산물 수입은 대부분 짐바브웨, 남아공, 탄자니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 인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로서 태국과 중국이 그 대상국이 되고 있다.

수출의 경우에 그 규모가 미미하며, 특히 직수출 형태보다는 재수출(re-export)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국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공 등 인접국 위주이다. 단, 말라위는 세계 주요 관상어 수출국으로서, 유럽, 미주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12톤(11만 3천 달러)의 관상어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수산물 소비

2010년 말 현재 말라위 국민의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은 6.8kg으로서, 세계(17.9kg/1명) 혹은 아프리카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 수준(8.5kg/1명)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⁸⁴⁾

말라위의 수산물 소비 수준이 이처럼 낮은 가장 주된 이유는 수산물

84)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 13~15kg보다도 낮은 수치임.

생산량이 7만 1톤 수준에서 유지되는 데에 반해, 인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수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수산물의 평균 도매가격은 2005년 kg당 98MW(말라위 과차)에서 2009년에는 238MW까지 상승했다가 2010년 201MW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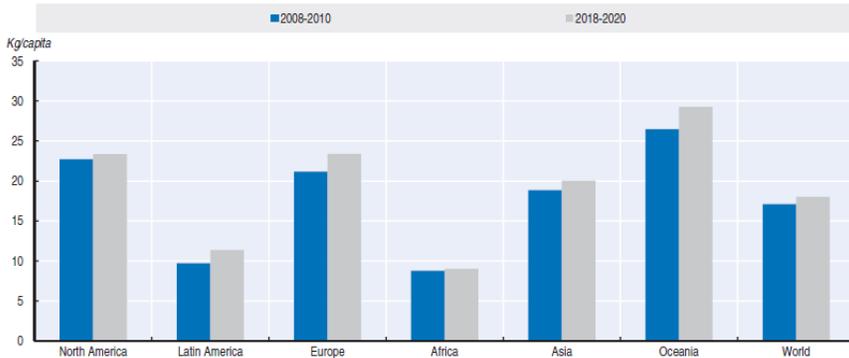
표 6-2 | 말라위의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

단위: 톤, 천명, kg/명

구분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총공급량	46,631	52,722	67,870	77,449	72,850	98,193
총인구	12,037	12,592	12,758	13,630	14,085	14,409
1인당 공급량	3.87	4.19	5.32	5.68	5.17	6.81

주: 2006년 이후 인구 수는 말라위 정부의 추정치임

자료: 말라위 경제기획개발부(2011), 말라위 정부 홈페이지



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10, p. 8

그림 6-2 | 세계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 현황 및 전망(대륙별)

더욱이 말라위 국민들의 소비수요가 가장 높은 어종은 다름 아닌 참보(Chambo)라고 하는 틸라피아 어종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라위의 주요 생산어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어종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생

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01년 말라위 정부는 참보 자원 회복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어종의 시장가격이 급등하면서 말라위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패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수산물 유통 · 가공

말라위의 수산물 가공방식은 햇빛에 말리거나 훈제(예: 참보) 혹은 굽는 방식(우타카)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말라위의 수산물 유통은 그다지 원활하지 못한데, 가장 큰 문제는 신선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말라위의 수산물은 대부분이 건조 혹은 신선품 형태로 유통되는데, 신선품의 가공 및 냉동냉장 시설이 거의 부재하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중부 지역의 살리마(Salima)와 북부 지역의 망고치(Mangochi)에 유일하게 제빙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특히 우기에는 수산물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손실률이 50%에 육박한다. 그 결과,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유통가공 과정에서의 손실은 말라위 수산물 수급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수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도로 체계의 미비, 운송차량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운송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도 말라위 수산물 유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말라위의 수산물은 말라위 호수, 칠와 호수, 시레 강에서 주로 생산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수산물은 말라위의 수도인 릴롱웨(Lilongwe), 말라위 호수 주변 최대 상업지역인 음주주(Mzuzu), 칠와 호수와 시레 강을 위주로 한 남부 지방 최대 도시 블렌타이어(Blantyre)에서 주로 소비된다. 그런데 <그림 6-3>과 같이, 현재 이들 주요 도시와 생산지

역을 잇는 도로망은 살리마-릴롱웨 간 중부 간선도로와 망고치-좀바 (Zomba)-블렌타이어를 연결하는 남부 간선도로가 거의 유일하다. 또한 말라위 호수 내에서의 연안운송 체계도 발달해 있지 못하다.



| 그림 6-3 | 말라위의 주요 수산물 생산지 및 소비지 현황

이외에도 말라위의 수산물 유통가공은 말데코(Maldeco)라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 회사에 의해 거의 장악되어 있다. 이 같은 독점 체제로 인해 말라위 수산물 가격의 변동이나 수급에 편이(bias)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것도 말라위 수산물 유통 체계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협력사업의 내용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결과적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말라위를 대상으로 한 수

산물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한 개발협력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수산업의 위상 문제이다. 즉 말라위 국민(특히 호수 인근지역민)의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자, 국민 전체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산업이 되고 있다. 특히 수산업은 생산활동의 개시 시점에서부터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타의 농축산업에 비해 비교적 짧기 때문에 환금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민의 소득원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산업이 갖는 이점이 있다.

둘째, 최근 말라위의 수산물 생산이 소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산물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수산물은 기타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특징 때문에 국민의 주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물 수급 실패는 국민 보건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말라위에 대한 수산분야 협력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말라위 국내 수산물 공급 증대를 통한 식량 문제 해결과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되,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인접국 및 유럽으로의 수출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 말라위의 물류 체계나 마케팅 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미주 지역보다는 유럽과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말라위 호수에 집중되고 있는 어선어업 중심의 수산물 생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선어업보다는 양식업 위주의 개발협력 추진이 요구된다. 다만, 말라위는 자연환경이 틸라피아 및 기타 열대성 어종의 양식 개발에 매우 적합해 소규모(0.2ha 이하) 양식이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어 생산기술 등의 기술 수준이 낮고 사료 문제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치어 생산기술이나 사료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양식 개발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2) 협력사업의 개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말라위에 대한 농수산 통합형 협력사업을 설정하기로 한다.

| 표 6-3 | 말라위 수산협력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 통합형 대규모 상업형 양식장 개발 프로젝트
사업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i) 말라위 내수 수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식량 문제 기여 ii) 지역민 소득 증대 중장기: 해외 수출을 통한 소득 확대
사업 대상어종 및 대상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보(Chambo)-틸라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틸라피아 양식 방법: 축제식 양식(Pond Culture) - 틸라피아 양식 수준: 반집약식(Semi-Intensive) 옥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급자족형 사료공급 체계(Self-Feed Supply System) 구축
사업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사업(1,30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1: 대규모 상업형 양식장 - 600ha (Large-scale Commercial Fish Farm) - 세부사업 2: 소규모 통합형 양식어가 - 100ha (Small-holder Integrated Fish Farm) - 세부사업 3: 자급자족형 사료공급 농가 - 600ha (Feed Production and Supply)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4: 농·어가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Farm Support Service) - 세부사업 5: 사회적 지원시설 구축 - 세부사업 6: 기술인력 지원

먼저,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말라위의 수산물 내수공급 증대를 통한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수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에 둔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확대를 한다.

둘째, 이 개발협력사업은 수산양식업을 중심으로 하되 옥수수 생산을 추가한 농수산 통합형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 목

적에 부합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셋째,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산양식업이 중심이 되도록 설계하며, 양식 대상어종은 틸라피아 중에서도 참보(Chambo)라는 어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참보는 말라위 토종의 틸라피아 종류로서, 다른 틸라피아 어종에 비해 그 성장속도가 빨라 생산량 증대에 효과적이며, 잡식성으로서 양식사료 조달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참보는 맛이 좋아 말라위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근 남아프리카인의 소비수요도 높은 편이지만, 말라위 호수 인근에만 서식하는 관계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말라위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가능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일대에서 틸라피아 양식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틸라피아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틸라피아는 나일 퍼치(Nile Perch)라는 종으로 참보와는 차이가 있다. 나일 퍼치는 참보에 비해 맛이나 성장률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양식형 사업 개발과 관련해 양식 방법과 양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사업의 경우, 양식 방법은 축제식 양식(Pond Culture)을 양식 수준은 반집약식(Semi-Intensive)을 도입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 말라위의 양식 인프라나 여건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첨단의 양식 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말라위 양식어가들이 채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수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라위 대부분의 소규모 양식어가는 틸라피아 및 기타 어종의 양식에 있어서 축제식 양식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말라위의 전력난과 높은 실업률 등을 고려할 때, 전력소모가 적고 양식장 건설에 따른 고용파급 효과가 높은 축제식 양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식 수준의 경우, 집약식 양식(Intensive Farming)은 적극적 급이(Active Feeding)가 요구되는데, 현재 사료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다 이 경우에 생산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집약식 방법으로 급이 수준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 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수산양식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대상농작물은 옥수수이다. 옥수수는 말라위 일반 국민의 주요 식량원입과 동시에 양식사료의 주 성분이 되고 있다. 특히 말라위 국민의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식용 옥수수를 양어용 사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명분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 자체적으로 옥수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료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사업을 설계하도록 한다.

여섯째,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해 이 사업은 <표 6-4>에 열거한 바와 같이 다음의 여섯 가지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즉 대규모 상업형 수산양식사업, 소규모 통합형 양식어가 구축사업, 자급자족형 사료공급 농가 구축사업, 농·어가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사업, 사회적 지원시설 구축사업, 기술인력 지원사업이 그것이다(구체 내용은 4절 참조).

그리고 이 사업은 1,300ha에 달하는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형 사업 형태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 사업의 추진 대상지역은 말라위 호수로부터 2km 떨어진 은카타 만(Nkhata Bay) 지역의 르웨야 강(Lweya River) 인근의 대규모 지역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체 1,300ha 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이처럼 일정한 한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지역을 마련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어떠한 경제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거주자도 없어 동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알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르웨야 강은 말라위 호수로부터 발원한 대체로 큰 지류로, 이 지역은 말라위의 최대 건기라고 할 수 있는 6월에도 수량이 풍부해 양식장 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6-4 | 말라위 농수산 통합형 협력사업 추진대상지

한편, 은카타 만은 연중 기온이 20℃ 이상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최저 23.2℃에서 최대 28.3℃가량), 이는 열대성 어종인 참보의 성장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말라위 수도 릴롱웨(Lilongwe)와 은카타를 잇는 간선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향후 물류 체계 구축에도 용이하다.

3) 세부 추진 방안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사업의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표 6-4 】 말라위 농수산 통합형 양식장 개발사업 추진 방안

구분	목표	추진내용	생산물(output)	운영주체
<세부사업 1> 대규모 상업형 양식장	• 수산물의 대규모 생산량 증대	• 양식장(560ha) • 종묘 부화장 및 육성장, 냉동냉장 가공시설(40ha)	• 참보 - 치어 890만 미 - 성어 3,200톤	Malawi Aquaculture Company (MAC)
<세부사업 2> 소규모 통합형 양식어가	• 신개념 소규모 양식어가의 모델 제시	• 양식장(25ha) • 옥수수농장(50ha) • 25개 양식어가	• 옥수수 - 600톤(사료용) • 참보 - 200톤	Malawi Aquaculture Service Limited (MAS)
<세부사업 3> 자급지족형 사료공급 농가	• 세부사업 1을 위한 사료제조달 및 양식농어가 식량 공급원 제공	• 사료제공용 옥수수 농장(450ha) • 자급형 옥수수농장(150ha) • 150개 농가	• 옥수수 - 씨눈 1,800톤 - 밀가루 3,600톤(식용)	
<세부사업 4> 농어가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 세부사업 2와 3의 양식농어를 위한 기술판매유통 서비스 제공	• 트랙터, 트럭, 운송차량, 보관시설 및 기계설비 등 • 자금지원	• 용자 및 무상자금 중개 및 관리 서비스 • 농어가 투입물 공급 • 기술 및 판매서비스	해당지역 정부
<세부사업 5> 사회적 지원시설 구축	• 해당 사업지역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 전기, 도로망, 용수, 학교, 병원 건설 등	• 지역민 편의 제공 - 175개 농어가(150 옥수수농가, 25 소규모 양식어가 포함) - 175 관련 고용인 가정 등	
<세부사업 6> 기술인력 지원	• 사업 전반의 기술, 재정, 관리운영을 위한 자문 제공	• 4명의 컨설턴트 상주(프로젝트 책임자, 양식기술, 옥수수생산기술, 재무재정 등)	• 농어가의 생산량 증대 및 효율적 관리 운영 기반 제공	말라위 수산부

각 세부 사업별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대규모 상업형 양식장(Large-scale Commercial Fish Farm) 경우에 총 600ha의 부지에 조성되며, 참보 치어 생산을 위한 부화장과 육성장 등 관련 시설물을 건설해 치어 890만 미를 생산하도록 한다.

또한 축제식 양식장 40개를 건설해 약 3,200톤의 참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1,600톤의 옥수수 씨눈

(maize bran)을 주로 하는 양식사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참보 성어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세부사업 3(자급자족형 사료공급 농가)에서 생산해 제공하는 옥수수를 통해 충당하도록 한다.

이 사업의 경우에 말라위양식회사(MAC)를 설립해 모든 생산과 판매,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을 하도록 한다.

| 표 6-5 | 대규모 상업형 양식장 사업 세부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600ha • 연간 생산물: 참보 (치어) 890만 미, (성어) 3,2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화시설(Hatchery Complex) - 30ha, 연간 890만 미 치어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부화장(main building), 80개 양육수조(rearing tank)(개당 20m×5m), 15개 치어지(nursery pond), reserve ponds 등 • 상업형 양식장 시설(Pond Culture Complex) - 560ha, 연간 3,200톤 참보 성어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식 양식장 400개(개당 1ha=50m×200m) - 400개 양식장은 50개씩 8개 구역으로 구분해 관리운영 - 양식장 내 제발(dike), 수로 및 연결도로 등 • 냉동냉장 보관 및 가공시설(Fish Processing & Refrigeration Complex) - 10ha • 운영주체: MAC

둘째, 소규모 통합형 양식어가(Small-holder Integrated Fish Farm) 구축사업의 경우, 100ha의 면적에 25개 농수산 통합형 소규모 어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1개 어가는 각각 4ha의 부지를 운영하게 되는데, 1ha는 참보 양식장용, 2ha는 자신의 참보 양식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료 공급을 위한 옥수수 생산용으로, 1ha는 주택 건설 및 자급자족용 농작물 생산용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4ha의 부지에서 농수산 생산활용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지원(소요 투입물 구매조달, 생산물 판매, 양식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은 말라위서비스회사(MSC)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표 6-6 】 소규모 통합형 양식어가 구축사업 세부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100ha • 연간 생산물: 참보 (성어) 200톤, 옥수수 6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소규모 통합형 양식어가 • 어가당 공급부지: 4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ha(참보 양식용) - 2ha(사료 공급을 위한 옥수수생산용) - 1ha(주택 및 자급용 작물생산용) • 어가당 연간 생산물: 옥수수 24톤, 참보 8톤, 기타 자급용 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24톤(연간 2모작, 1ha당 1모작 6톤 생산 가능 전제) - 참보 8톤(연간 2회 생산, 1ha당 1회 2톤 생산 전제) - 단, 참보 생산에 필요한 치어는 상술한 부화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함 • 관련 기술 지원: MSC

셋째, 자급자족형 사료공급 농가(Feed Production and Supply)는 전적으로 세부사업 1(대규모 상업형 양식장 공급용)에서 필요로 하는 옥수수를 생산해 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세부 사업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말라위의 양식사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600ha의 면적에 150개 옥수수 생산농가를 조성하고, 각 농가에게는 4ha의 생산부지가 제고된다. 그리고 개별 농가당 24톤의 옥수수를 생산해 일부는 자급자족을 위해, 나머지는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말라위의 열대 기후를 활용한 옥수수 생산 2모작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들 개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옥수수 생산기술 이전, 생산물 유통가공 및 판매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관리운영 등은 역시 MSA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 표 6-7 | 자급자족형 사료공급 농가 구축사업 세부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600ha • 연간 생산물: 옥수수 5,400톤(대규모 상업형 양식장 공급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개 소규모 옥수수 생산농가 • 농가당 공급부지: 4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ha(대규모 상업형 양식장에 대한 사료공급용) - 1ha(자급용) • 농가당 연간 생산물: 옥수수 36톤(사료공급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36톤(연간 2모작, 1ha당 1모작 6톤 생산 가능 전제) • 관련 기술 지원: MSC

넷째, 농·어가 지원 서비스체계 구축(Farm Support Service)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체적인 생산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지원을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말라위서비스회사인 MSC의 설립이다.

이 회사의 주요 기능은 해당 프로젝트 추진 내용에 포함되는 소규모 어가와 농가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원 서비스체계 구축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i) 생산량 증대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 지원, ii) 농어가의 양식과정에서 요구되는 사료와 기타 투입물(input) 공급, iii) 농어가 운영과 관련한 지원, iv) 농어가 양식관련 시설물 및 기계설비 임대 등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원시설 구축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1,300ha에 달하는 부지에 200여 개 농어가와 대규모 틸라피아 양식 및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과 기술 지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부득이 관련 지역민의 대규모 이주를 비롯한 병원, 학교, 상하수도 및 전력공급 시스템, 농어가와 판매시장을 연결하는 도로망 등 사회적 인프라 건설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과 운영은 해당 지역 관청이 담당해 추진하도록 한다.

여섯째, 기술인력 지원사업이다. 말라위의 현재 수산양식 및 옥수수 생산기술은 아직까지 발전해 있지 못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말라위 현지에서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해외 전문가의 고용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다음에서 나열하고 있는 전문가의 기술 지원은 필수적이다. i) 프로젝트 총괄 자문(a Project Advisor), ii) 종묘관련 전문가(a Hatchery Export), iii) 양식 수조 건설전문가(a Fishpond Engineer), iv) 옥수수 농업전문가(an Agriculturist)이다.

| 표 6-8 | 기술인력 지원사업 세부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기술인력: 4명(최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책임자 1명(36개월 현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전문가로서 세부사업 1~4를 총괄하는 기능 수행 • 종묘 관련 전문가 1명(18개월 현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1의 부화시설을 총괄하는 기능 수행 • 양식 수조 건설전문가 1명(18개월 현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1~2와 관련한 참보 양식장 건설을 위한 디자인, 건설 관리감독 기능 수행 • 옥수수 농업전문가 1명(18개월 현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3~4와 관련된 옥수수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기능 수행

3. 문제점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현지인의 참여 의지, 역량, 정부 관련 부처의 의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실상을 보면, 현지인들의 참여 의식과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재 어업 관련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현지인들은 자원에 대한 관리 개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역량 역시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마케팅 활동은 현재로서는 지역적으로 매우 협소하며 원시적인 단계라는 점이다. 즉 국제적인 수산물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수출을 도모한다거나, 아니면 국내 공급을 통해 기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업 대상지에서 대규모의 양식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파생되는 간접 산업과의 연계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양식으로 나타나는 환경오염을 합리적으로 배제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다.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현지인들의 금융적 개념의 부족과 현지 사업자(유통업자 등)들의 유통 금융 기능이 약한 점도 판매를 통한 현지 생산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단순히 양식장만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농장에서 사료로 사용할 농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병렬적 사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원조 및 기술 전수도 사업분화의 병렬적 통합이 필요하다. 즉 수산업과 농업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는 개별 산업에 대한 경험은 풍부해도 개별 산업의 병렬적 통합 구조로 원조를 수행하는 경험은 부족하다.

4. 추진 방안

이러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관련 산업에 대한 인적 교육 훈련이 현지에서 장기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업 관련 연수 프로그램은 이론 및 견학 위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수한 아프리카 관계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추진하

는 데 있어서는 현지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이 이전되도록 교육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혹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공여국 내지는 기관에서 사업 추진과 훈련을 위한 전문가를 동 사업 기간 동안 파견해야 한다.

둘째,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양식업은 단순하게 수산물을 양식하는 것이 아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양식장을 기술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관련 산업(사료산업, 발전기 등)과의 합리적인 연계를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판매와 홍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현지인의 참여는 물론 공여국이나 수혜국의 관련 기업이 관리 차원에서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지의 생계형 영세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생산자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기능이 이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초기 수산업의 금융적 기능을 수산업협동조합이 대행하고 이에 대해 관련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이를 통해 초기적 수산물 유통의 금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다자 원조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병렬적 사업이 함께 원조를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수산업과 농업이 동시에 협력적 사업으로 추진된 바는 없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사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조 기술의 경험으로 우리나라도 전수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자 원조의 방식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통해 원조금액을 경유시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

동 사업이 다자 원조의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통해서 추진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제3의 합리적인 기관의 관리 하에서 해당국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병렬적으로 사업에 포함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제 7 장 결 론

1. 요약 및 정리

동 연구는 한국 수산분야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책 연구는 현황과 분석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는 기승전결로 이어진다. 그러나 동 연구는 한국이 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에서 어떠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실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에 바라는 수산분야의 협력을 검토하였다. 즉 기존의 정책 연구에서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 기본 방향(목표와 전략)을 본론에서 설정하고 이를 아프리카 국가들이 요구하는 수산협력 분야에 이를 대입하여 검토를 하였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수산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수산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아프리카와의 협력 필요성으로서 전개하였다. 구조적인 저개발 요인에 의해 아프리카의 경제는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지만, 최근 아프리카 일부에서 나타나는 자원 기반의 경제 발전에 대해 미국, EU, 중국, 일본의 관심이 과거와는 다르게 경쟁적인 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ODA 원조도 선진국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OECD/DAC에 2009년에 가입한 후발 ODA 공여국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시아에 편중된 ODA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인 개발원조사업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도 늘고 있는 있지만, 기존 선진국들의 대 아프리카 ODA 실패를 거울로 삼아 효율적인 대 아프리카 ODA를 정책적으로 도모해야 할 목표와 전략이 분야별로 수립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아프리카가 지구촌 빈곤의 최전선인 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자원 약탈에 기반을 둔 선진국들의 대 아프리카 ODA나 협력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제 성장 모델과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동질성은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1960~1980년대 수산분야가 빈곤한 우리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산업이었고, 이런 우리의 수산업 노하우는 아프리카의 경제 개발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산분야에서도 한국형 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의 발전된 수산분야 노하우를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MDGs) 달성, 해외수산자원의 개발 및 확보, 산업협력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수산분야를 통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격 제고, 수산자원 확보, 우리 수산분야의 발전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협력의 수요를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선정 및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0년 12월에 한·아프리카 수산포럼을 창립하여 현재까지 제3차에 걸친 심포지엄을 통해 한·아프리카 수산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아프리카의 협력사업 제안 중 주요 사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나에서는 수산가공 민간사업과 관련한 정부 간 협력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의 다량어 통조림 가공공장 사업을 지원해 주는 가나 테마 항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DRC와 관련한 내수면 어업생산 협력사업이 있다. 이는 내수면이 발달한 DRC의 내수면 어업을 지원하여 DRC의 지역 개발과 식량 공급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DRC의 내수면 지역은 주로 동부 밀림에 형성되어 있어 어업분야가 입지하기에 앞서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서부 내수면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말라위와 관련해서는 양식개발형 협력사업으로서 말라위의 발달된 내수면을 활용하여 양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식산업은 단순히 수산물을 양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필요한 사료산업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료 및 식량으로서 활용되는 옥수수 농지를 개간하여 이를 통한 사료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는 양식개발형이지만, 농업과 수산업이 동시에 결합된 사업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협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민간부문의 경제협력과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의 수행을 시험하는 핵심 대상지역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협력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목표로 하는 사업추진 방향 및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리안 컨센서스(Korean Consensus, 가칭)’의 개념을 각 분야별로 심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분야별 협력사업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중장기 전략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아프리카의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인도주의적 접근, 식민지 관리형 및 패권주의형 원조 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한국적 가치가 주효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 아프리카 협력이 국가정책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수

산분야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중요한 이슈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급에 수산분야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실무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중심으로 수산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형태로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독창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국제수산협력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수산분야의 국제협력은 주로 어업연수에 편중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수산업과 관련한 전체 분야의 걸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에 포함된 DRC, 가나, 말라위의 경우에도 어업연수는 요청 사업의 현지화를 위해 필요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의 규모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산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관이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원조의 KOICA, 유상원조의 수출입은행, 유·무상 원조의 일부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3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 3개의 기관은 정책 목표가 상호 다르기 때문에 수산분야의 ODA 추진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수산분야 자연과학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 담당은 부경대학교, 정책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한 다수 연구기관 등이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련 정책 수립과 행정을 지원하며, 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독창적인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해 주는 단일 파이프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관의 업무에는 단순히 상기에 포함된 기관 외에 수산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민간분야와의 연계도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도 수산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들을 중점협력대상국의 개념에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분야의 수산협력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반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및 공적개발 분야의 수산협력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족된 ‘한·아프리카수산포럼(KORAFF)’은 이와 같은 점에서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한·아프리카 간의 협력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 등의 전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봉순 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농업개발협력 방안」, KREI, 1983.
- 강준영 외, “중국의 대 아프리카 ODA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중국연구」 (49), 2010.
- 권을 외, 「양자 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통일연구원, 2008. 12.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20년사」, 2007.
- _____,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과 영향분석”, 보도자료, 2009. 4. 13.
- 「매일경제」, 2004. 11. 9.
- 박영호 외, 「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 추진방안」, KIEP, 2008.
- 박홍영, “일본형 원조외교의 특징 및 변화상 고찰-서구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국제정치논집」, 3집 4호, 2003.
-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통계업무: 2009년 말 현재, 2010. 3.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09.
- 외교통상부, 「OECD DAC 개황」, 2009.
- 유용조,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보」, 2009년 여름호, 2009.
- 최의현,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사례를 통해서 본 중국의 개도국 직접투자 유형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권 제2호, 2008, pp. 85~109.
- 한국국제협력단, 2008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2009.
- KORAFF, 제1차 한·아프리카 수산포럼-RSA Cape Town 발표집, KMI, 2010. 8.
- _____, 2010 KORAFF 창립기념 심포지엄 발표집, KMI, 2010.
- _____, 2011 KORAFF Angola Symposium 발표집, KMI, 2011.
- _____, 제3차 앙골라 심포지엄 발표집, KMI, 2011. 9.
- 홍현표·마창모, 「수산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10.

홍현표·장홍석, “전략적FTA 추진대비”, 「수산부문 대응전략 연구(3차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KIEP, 「유망국 산업연구」, 2006.

<국외 문헌>

중국 상무부.

AFDB, Africa Development Report, 2007.

African Development Bank, *Commercial Fish Farming Development
Project: Market Research Report*, 2005.

_____, *Commercial Fish Farming Development
: Feasibility Study Report*, 2005.

_____, *Commercial Fish Farming Development
: Project Preparation Report*, 2005.

CIA, *World Fact Book*.

Collier, Paul, “Primary Commodity Dependence and Africa’s Future”,
World Bank, April 2002.

Commission for Africa,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2005. 3.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Statistics*, 2008.

_____,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08*, 2009.

_____, *Fishstat Plus*.

GERMANWATCH,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0*, 2010.

Malawi 경제기획개발부, *Economic Report*, 2011.

Moyo, Dambisa, *Dead Aid—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New York: Niall Ferguson, 2009.

Nathaniel Jonah, Nigeria: “Anti-Corruption Battle”, 2007. 11. 15(www.
allafrica.com)

OECD, Better Aid, Managing Aid—Practices of DAC Member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2005), 2008.

OECD/DAC 통계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0, 2010.

_____, Agricultural Outlook 2011, 2011.

SABUNI,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수산업정책 포럼(DRC), 2000. 6.

U. S. Dept. of State, Summary and Highlights: International Affairs Function 150, 200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_____,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

<인터넷 자료>

FAO 홈페이지(<http://www.fao.org>)

FAO, FAOSTAT(<http://faostat.fao.org/>)

Google 검색(www.google.co.kr)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Malawi 정부 홈페이지(<http://www.malawi.gov.mw>)

부록 1.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의 주요 논점⁸⁵⁾

1.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의 주요 논점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규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크게 양분해 보면, 제도 또는 정책적 실패와 같은 내재적 설명과 외부로부터 주어진 제약요인, 즉 일종의 운명론적인 설명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 및 IMF 등의 국제경제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⁸⁶⁾적인 시각에서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을 찾고 있는 반면에, 제프리 삭스 교수와 같은 개발경제학자들은 자연·지리적 요인과 같은 외생적인 제약요인에 무게감을 두고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적인 시각은 아프리카가 발전의 경로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아프리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정치적 불안과 비민주성, 부패한 지도층, 투명성과 책임성의 부재,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나아가 현대적 발전을 가로막는 퇴행적인 국가통치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이 저개발을 낳았으므로 민영화, 시장개방 확대, 정부지출 축소 등과 같은 제도 또는 정책의 개혁을 통해 발전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시장실패, 열악한 투자환경, 기업가 정신의 부재 등을 저개발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Collier and Dollar(2001) 등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근거한 정책(best practices)을 통해 세계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5) 동 부록은 외부원고 의뢰에 의해 작성된 것임.

86) ‘워싱턴 컨센서스’는 일종의 서방식 경제 발전 모델로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규제 축소,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철폐, 무역자유화 및 시장개방, 자본시장 자유화, 정부예산 축소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발전처방’은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 수준과 고유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의 접근방법 역시 저개발의 원인을 저개발의 결과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이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질병과 기근이 만연해 있는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국가 시스템이 취약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부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너무 가난하여 국가통치 역량을 상실한 채 비효율적인 행정을 일삼는 것이다. 부패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만큼이나 만연한 부정부패를 겪으면서도 고속 성장을 이룩하였다. 기업가 정신도 그 자체가 없다 기보다는 기업 활동을 할 만한 경제·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열악한 기술 및 자기자본의 축적, 금융제도나 자본시장의 미발달 등을 아프리카 저개발의 이유로 들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설명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 신흥경제국들도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자본과 기술이 크게 부족하고 빈곤에 시달렸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저개발의 주 원인이라면 동아시아 신흥경제국의 발전초기 조건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상황으로까지 발전되어 왔는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개발의 현상과 결과를 가지고 저개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장 지글러(2000)와 같은 많은 개발경제학자들 역시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서구식의 정책패키지는 아프리카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서방국의 발전처방은 지난 30~40년 동안 한결같이 공공부문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발전처방

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아프리카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잘못된 처방전을 내놓기도 한다.

예컨대 세계 최빈국인 말라위에 대한 세계은행의 발전처방을 사례로 들어보자.⁸⁷⁾ 세계은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말라위 정부에 대해 비료보조금의 폐지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상업성 작물재배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식량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식량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일관된 논리였다. 이는 주식인 옥수수 농사를 포기하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말라위 정부는 정반대로 비료 보조금을 늘려 나갔다. 그 결과, 옥수수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전체 인구 1,300만 명 가운데 500만 명이 먹을 것을 없어 유엔의 긴급식량원조를 받았던 말라위가 농산물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인근 짐바브웨에만 수십만 톤의 옥수수를 수출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말라위의 식량난 극복에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세계은행은 식량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날로 악화되어 가는 토질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말라위의 이러한 식량난 극복 사례는 국제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국제기구의 조언과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제까지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서구식의 발전처방이 지니고 있는 정책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아프리카 저개발의 모든 책임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부정부패와 비민주성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아프리카 저성장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아프리카의 저개발이 자연적 또는 외생적 제약조건보다는 ‘아프리카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 즉 제도나 정책적 실패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

87) 『New York Times』(2007. 12. 2.)

결론적으로 짧게 요약해 보면, 아프리카 저개발의 현재적 상황은 외부적 제약조건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 저개발의 현상은 대내외적인 문제들이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연결(interlocking)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개발의 원인들은 별도로 분해하는 작업도 용이하지 않다. 설명의 일반화를 위해 Collier and Gunning (1999)과 박복영 외(2007)는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을 몇 가지의 묶음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기준은 저성장의 원인이 정책적 요인이냐 아니면 운명적으로 주어진 제약조건이냐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대내외적인 요인이냐 대외적인 요인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방식은 저자들도 스스로 밝혔듯이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저개발의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으로 그룹으로 묶어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컨대, 아프리카 분쟁의 배후에는 지하자원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부존자원이 부패와 정치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개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적 제약조건임과 동시에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두면서 아프리카 저개발의 문제를 보다 폭넓게 다루고자 한다. 설명의 편의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으나 아프리카의 저개발에 대한 요인들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관찰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저개발에 대한 원인을 대략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요인 모두는 아프리카의 저개발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물론 이들 요인이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여 저개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저개발 원인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와 영역에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의 저개발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간략히 정리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2. 자연·지리적 요인

아프리카 저개발에 대한 올바른 원인진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왜 유독 아프리카의 빈곤이 심각한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종종 간과되는 자연·지리적 요인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연구논문들은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설명함에 있어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리 및 자연 환경적인 측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난한 이유는 복잡하지만 아무튼 자연환경과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다. 실제로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경제 발전에는 강력한 지리적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들은 대부분 온대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우연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후 또는 지리적 여건과 경제 성장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계량연구들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열대지역이 온대지역에 비해 인간의 건강과 농업생산성 측면에서 크게 불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Sachs and Warner(1997), Sachs and Gallup(1998), Sachs(2004) 등의 많은 연구들도 아프리카의 빈곤과 저성장의 원인을 지리적 특성⁸⁸⁾에서 찾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아프리카의 저개발이 열대성 기후와 불리한 해안 접근성에 따른 해외

88) 지리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7가지의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보았다. 첫째, 북 위도에 있는 대규모 세계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며, 둘째, 미국 대륙보다 더 넓은 광대한 사하라 사막에 의해 유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셋째, 자연 항구의 절대적 부족, 넷째, 대륙면적에 비해 짧은 해안선, 다섯째, 해안으로부터 멀리 분포되어 있는 인구, 여섯째, 내륙국가의 높은 비율, 일곱째, 운항 가능한 강의 부족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과의 단절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는 분명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불리한 외생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대부분의 지역(92%)이 열대성 기후에 속해 있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과 각종 풍토병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3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는 모기의 종류, 습도, 기온 등 기후 및 생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세계에서 전염성과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말라리아의 창궐은 목축 및 농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단축 등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아프리카 기후 또한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적 제약조건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토지의 비옥도가 떨어지고 강수량이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가뭄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관계시설이 극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가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은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기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자연 지리적 제약요인으로는 해외시장과의 단절성을 들 수 있다.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y)의 경우 해안지역과 멀리 떨어진 채 육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과의 연결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역내 운송비용이 개도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이것은 교역과 공업화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⁸⁹⁾ 아프리카의 내륙국가들이 설령 공업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상품을 연안지역으로 실어 나르는데 소

89) 아프리카 역내 운송비용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3배 이상, 그리고 아시아 및 남아시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hony and Nuno(1999)는 아프리카에서 운송비용이 절반을 줄어든다면 교역량이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요되는 막대한 수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Anthony and Nuno(1999) 등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은 아프리카의 지리적 운송조건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저렴한 해양무역의 근접성이 경제 발전의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꾸어 해석하면 고립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있어서 경제 발전은 더욱 많은 어려움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 내륙국가가 많이 생겨난 것은 일종의 식민지적 유산으로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분할 통치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경선을 설정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아프리카 전체 대륙 가운데 내륙국가는 15개국, 인구비중은 25%이며, 사하라 이남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비중이 40% 이상으로 크게 높아진다. 아프리카 내륙인구의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있는 대호수와 강, 그리고 광물자원을 따라 인구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내륙지역은 해안지역보다 강수량이 많고 토지가 비옥할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 부 록 표-1 | 연안 및 내륙국가 간의 경제지표 비교

구분	1인당 GDP (달러)	인 구		명목 GDP		경제성장률 (1981~2006)	수출 비중	FDI 비중
		백만 명	구성비 (%)	10억 달러	구성비 (%)			
연안국가 (38개국)	1,023	699.3	75.7	996.9	92.4	2.8	93.9	92.4
내륙국가 (15개국)	264	225.0	24.3	82.5	7.6	3.3	6.7	7.6

주: 아프리카 전체 대륙(53개국) 기준
자료: AfDB(2007)

연안국가가 내륙국가에 비해 경제 발전의 핵심요소인 수출 및 외국인 투자에 있어 월등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또한 내륙국가의 4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 지리적 요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박복영 외(2007)는 자연 지리적 요인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실제보다 많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서구의 매체들이 아프리카의 빈곤을 자연적 재앙과 결부시켜 묘사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고 꼬집고 있다. 사실, 지리 환경적 요인은 분명 경제 발전의 초기조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 요인을 저개발의 근거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이며 운명론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가 내부의 제도 및 정책적 요인에 따라 차별적인 성장을 경험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츠와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츠와나는 전형적인 내륙국가로 독립당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빈곤국이었다. 다이아몬드라는 자원이 경제를 지탱하기는 했으나, 이것보다는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주적 통치 시스템(good governance)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발전의 궤도에 진입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보츠와나의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3. 정치·사회적 요인

어느 나라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적 조건이 필수적이다. 내자 동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국의 자본과 선진기술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수조건이다. 경제 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정부의 성립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 중의 하나이다.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와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리더십의 발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근로의욕이 넘치고, 합리적인 경제의지를 가진 국민대중이 널리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주인의식(ownership)은 고사하고 정치적 혼란과 불안한 치안상태, 인종 및 종교적 대립 등으로 국가 기본질서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⁹⁰⁾

아프리카 분쟁과 갈등의 이면에는 인종과 종교적인 대립이 국내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라는 역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유제로 있다. 즉 아프리카 저개발의 요인은 유럽 제국주의의 국경 분할과 무관하지 않다. 아프리카 사회는 전통적으로 여러 부족들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분열정책에 의해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강하다. 1885년 베를린회의에서 유럽열강은 원주민의 인종이나 문화, 언어 등의 동질성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경선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전통적 국가사회가 유럽 제국주의에 의해 작은 국가단위로 분할(fragmentation)되었고, 이것이 분쟁의 형태로 고착화되다 보니, 아프리카에서는 애초부터 국민적 단결이나 국가적 리더십이라는 경제 발전의 초기조건을 기대할 수 없었다. 결국 여러 종족들로 구성된 국민들은 국가 또는 정부보다는 자기종족에 더 큰 충성심을 가지고 되었고, 이러한 ‘종족주의’는 권력 투쟁과 쿠데타, 그리고 내전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파편화(fragmentation) 정도는 인종이나

90) 지난 40년간 아프리카 국가(SSA)의 약 40%에 해당하는 20개 나라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내전을 경험하였다.

언어, 종교 등의 측면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Easterly and Levine(1997)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높은 이질성이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의 국경선은 민족적 혹은 인종적 동질성의 기준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유럽열강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설정됨으로써 국가 내부의 이질성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러한 인종·언어적 분할이 종족 간 갈등과 내전을 야기하여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제도(institutions) 혹은 거버넌스(governance)의 후진성에도 기인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민주적인 정치 체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 및 법치주의, 재산권의 보호 등이 포함되며, 보다 넓게는 사회 내부에 축적된 신뢰(trust)의 수준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러한 제도나 사회적 자본이 극히 열악하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국가·사회적 취약성은 자원을 둘러싼 내전과 결합하여 ‘자원의 저주’를 순환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자본 축적과 투자를 억제시켜 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물적 혹은 인적 자본의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었다.

모잠비크와 우간다의 사례는 정치적 안정과 거버넌스의 개선이 경제 발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우간다와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물게 각각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빈곤 인구도 크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간다의 경우 하루 1달러 미만의 절대빈곤 인구비중이 1992년 56%에서 2002년에 35%로 급감하였고, 모잠비크 역시 그 비중이 1997년의 69%에서 2003년에 54%로 역시 급감하였다.

보츠와나 역시 개발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1966년 독립 당시 보츠와나의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으로 다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극도로 가난했다. 농업 국가였으나 물이 크게 부족했으며 사회기반시설은 원시적 수준이었다. 하지만 보츠와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독립 이후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 냈고, 이를 토대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현재 이 나라는 에이즈 창궐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1961년에서 1997년 사이 연평균 7.5%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물론 보츠와나에게는 자국에 매장된 다이아몬드가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의 주된 요인은 아니었다. 보츠와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단결’이라는 더 광범위한 인식에 바탕을 둔 정치적 합의를 유지시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콩고공화국(옛 자이레),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들은 천연자원은 풍부했지만 보츠와나처럼 발전의 경로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오히려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로 부패가 더욱 만연하게 되었다.

문화와 역사적인 요인으로도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설명하고 있다. 아프리카(53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는 무려 1천 600여 개에 달하며, 또한 그 수에 버금가는 종족이 살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인종적 복잡성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종교도 매우 다양한데, 고대 기독교의 한 종파가 뿌리를 내린 에티오피아를 제외하면 북아프리카는 아랍 상인들이 들여 온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고, 남부 지역에는 갖가지 토착신앙과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기독교가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은 국가 또는 종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의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국가적 통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인구 증가율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⁹¹⁾

통상적으로 볼 때 인구 증가는 시장을 넓혀 주고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며 기술 축적을 촉진하는 등 동태적으로 성장유발적인 역할을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인구와 빈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작용하게 마련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식량증산 속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와 식량, 인구와 경제 발전 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Bloom and Sachs(1998)는 아프리카의 낮은 기대수명과 높은 인구 증가율이 아프리카 저성장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복영 외(2007)는 아프리카의 낮은 인구밀도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인구밀도가 낮으면 시장과 교환의 발전이 어렵고 경제적 통합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단위 인구당 인프라 건설의 비용도 많이 들고 인프라의 이용효율도 떨어져 전체적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4. 경제 산업적 요인

아프리카 저개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국내자본에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의 투자환경은 극히 열악하고 무수한 ‘아프리카적’ 리스크로 말미암아 투자유입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국내산업의 낙후성으로 이어졌는데 오늘날 아프리카 경제는 원유, 광산물, 농작물 등 1차 산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91) 아프리카(SSA)의 인구 증가율은 연 2.7%로 남아시아(2%), 동아시아(1.4%)보다 월등히 높으며, 1980~2002년 동안 총인구가 3.8억 명에서 6.9억 명으로 증가하였다.

형편이며, 1차 산품 중에서도 2~3개 정도의 소수품목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모노컬처(mono-culture)’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 부 록 표-2 | 아프리카의 자원의존도와 인간개발지수

국가 혹은 지역	1차 산품의 비중(%)		HDI ¹⁾ 순위 (2002)
	수출(2000)	GDP(2000)	
적도 기니	91.8	89.0	109
앙골라	92.6	81.6	166
콩고	97.5	79.1	168
가봉	86.6	62.4	122
기니 비사우	99.7	50.9	172
나이지리아	98.1	50.1	151
아프리카(평균)	78.6	21.2	
개발도상국	30.6	9.6	
선진국	15.8	2.6	
세계	21.4	4.3	

주: 1)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HDI 순위는 총 177개국 기준
자료: AFDB(2007)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상품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말리의 경우, 금과 목화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은 다이아몬드와 석유가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앙골라 역시 원유와 다이아몬드가 전체 수출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광물이나 농작물 등의 1차 산품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영세한 시장 규모도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열강들에 의해 48개의 작은 국가단위의 시장으로 분할되었는데 이러한 시장특성은 역내경제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아프리카가 지나치게 작은

단위로 분할됨으로써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단일경제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작은 단위의 시장이다. 그리고 한 나라가 평균 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경분쟁은 물론 역내교역 및 시장통합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요인은 극히 열악한 인프라 시설이다. 이는 어느 개도국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아프리카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예컨대 일본에서 코트디부아르까지 자동차 한 대를 배로 운송하는 비용은 1,500달러인 반면에, 이를 코트디부아르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무려 5,000달러를 넘고 있다고 한다.⁹²⁾ 또한 야자유를 싣고 인도네시아에서 케냐의 몸바사 항구까지 가는 수송비는 톤당 40달러인 반면에, 몸바사에서 육로를 통해 우간다 수도 캄팔라까지는 톤당 100달러가 넘게 든다고 한다.⁹³⁾ 거리로 보면 1/6에 불과하지만 비용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내륙국가에서는 수출상품을 연안지역으로까지 실어 나르는데 수반되는 운송비용이 수출가격의 무려 3/4에 해당할 정도이다. 이는 극히 열악한 아프리카 역내 인프라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아프리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인프라 시설의 낙후성은 식민지적 유산으로 볼 수 있다.⁹⁴⁾ 아프리카의 사회간접자본은 철저히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철도의 경우 아프리카의 광물을 유럽 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광산지역과 항구를 연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아프리카 지역 내의 교통편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도로망 및 항만시설은 물론 항공노선 역시 이와 크게 다르

92) Commission for Africa,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200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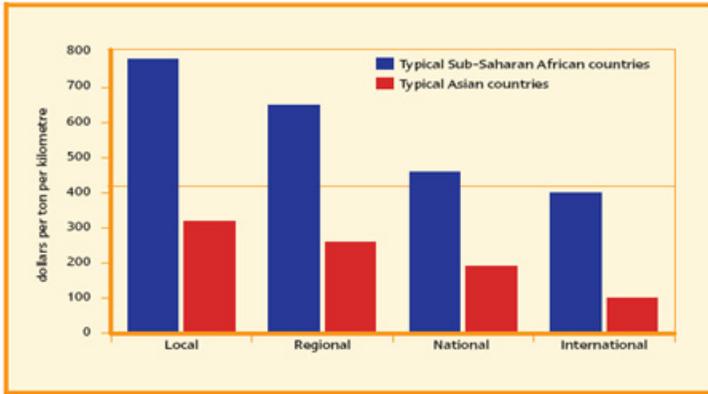
93) 『매일경제』(2004. 11. 9.)

94) 식민통치 기간 중 피식민지 국가들의 인프라 시설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Toreto와 Chowdhury(2004)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정이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박복영 외(2007)).

지 않았다. 이러한 식민지의 유산으로 아직도 아프리카의 많은 항공노선은 런던, 파리, 로마 등의 유럽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역내 간의 항공노선은 매우 취약하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거리상으로 인접해 있다 하더라도) 이동할 때에도 이들 지역의 직선 거리의 수십 또는 수백 배가 되는 런던이나 파리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오늘날 아프리카의 운송비용은 <부록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의 2배에 달하고 있다. 통신도 마찬가지이다. 역내 국가 간의 통신시설도 유럽을 경유해야 빠른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교통과 통신이 모두 아프리카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경영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아직도 이러한 편향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개발구조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업화 또는 산업화가 성공할리 만무하다. 지난 20세기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공산품의 수출비중을 급속히 늘려갔다. 그 결과 개도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공산품의 비중이 20%에서 80%까지 늘어났다. 물론 여기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출의 다각화에 실패했고 그 결과 전 세계 공산품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자료: P. Starkey et al.(2002)

| 부록 그림-1 |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운송비용 비교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촌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의 발전기반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여건에서 농업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프리카 농업여건은 극히 열악하다. 인프라 미비, 가뭄 및 불안정한 기후조건 등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아프리카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계 무역환경, 외국인 투자 및 대외원조의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농업은 발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는 농촌 인구비중이 64%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16.2%에 불과하다. 또한 아프리카는 동남아시아 열대기후 지역과는 달리 총적평야와 강이 크게 부족하여 관개(irrigation) 토지비율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높은 운송비용 등으로 비료 구입이 용이하지 못해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 농업은 아시아나 중남미의 경우처럼 신품종 개발 등을 통한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을 이루기에는 초기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다수확 품종(HYV)의 개발로 농업혁명을 이루었으나 아프리카는 열악한 농경 조건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 인적 자본 측면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아프리카 국민의 낮은 교육 수준에서 비롯되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의 저위성이다. 아프리카 인구의 문맹률은 다른 지역과 견주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문맹률은 70%를 웃돌고 있으며,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교육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말라리아와 HIV/AIDS 등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열악한 보건상태와 열악한 교육환경은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원동력인 인적 자원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아프리카 제국은 숙련 노동력, 즉 훈련된 기술 및 전문분야의 인력은 크게 부족한 반면, 미숙련 노동력은 공급과잉 상태로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대량실업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등교육 이상의 높은 교육 수준으로 훈련된 인력이 요망되고 있으나 아프리카의 실정을 감안할 때에 고급인력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생각된다. 게다가 전문기술인력과 의사 등 고급인력의 해외유출(brain drain)도 심각한 상황인데, 토니 블레어(Tony Blair) 영국 전 총리가 주도하여 설립한 아프리카위원회의 연구보고서(2005)⁹⁵⁾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연간 7만 명가량의 고급 또는 숙련 노동력이 선진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잠비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체 1,600명의 의사 가운데 400명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적 자본 형성은 식민지적인 유산으로도 볼 수 있다. 유럽의 식민통치가 아프리카의 국가 발전에 미친 정도는 지대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95) Commission for Africa,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2005. 3.

유럽의 식민지배는 아프리카에 저개발의 유산을 남겼으며 독립 후에도 국가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식민통치 기간 동안 아프리카인들은 교육의 기회와 조직체의 책임자 자리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국가 경영의 경험을 쌓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독립 이후에도 아프리카에는 국가를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국가통치 시스템이 부재하여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또한 식민통치 시대의 각종 편향적이고 착취적인 교육정책에서 초래된 구조적 모순은 아프리카의 국가 발전을 저해시켜 온 주요 원인이다.

6. 대외경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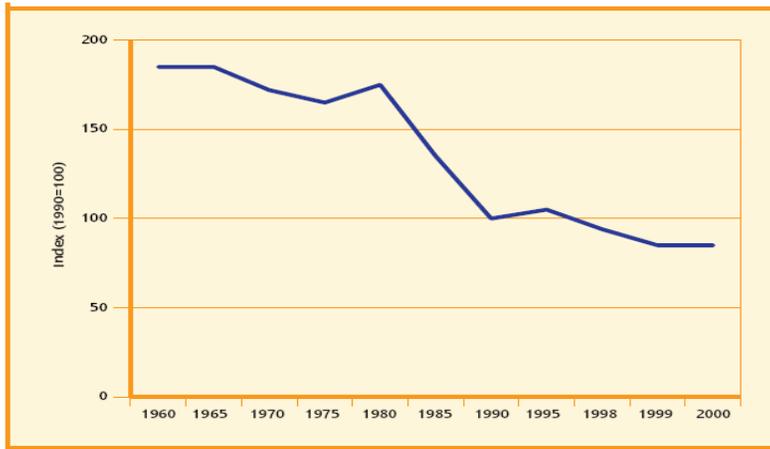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자연 환경적 제약에서부터 인종 혹은 종교적 분열, 식민지적 유산, 정책 실패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또한 지리적 제약 때문에 세계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앞에서 언급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성장을 지속했던 아프리카 경제가 그 이후 성장의 궤도에서 이탈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요인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1차 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은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아프리카 경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 시기부터 교역조건 악화는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인 대외경제 변수로 기능해 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업화를 통해 수출상품의 다각화를 부분적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열악한 산업기반과 기술 부족, 민주적 통치 시스템(good governance)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초기단계에서부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 경제는 과거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단종경작(monoculture)형 경제에서 벗

어나지 못한 채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1차 상품 수출에만 의존하는 ‘모노컬처’형 경제구조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 전반이 기상 변화 또는 국제 상품시세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즉 커피·설탕 등의 주력 수출상품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행히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이들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이후 가격이 급락하면서 아프리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경제는 국제 상품시세의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1980~2000년 사이에 국제 설탕가격은 77%, 코코아는 71%, 커피는 64%, 면화는 47%씩 각각 하락함으로써 아프리카의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요약하면, 1차 상품 위주의 수출구조와 공산품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역구조 하에서 수출상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역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교역조건 악화는 아프리카 저성장의 출발점이었는데, 교역조건 악화는 수출로 인한 이득을 감소시켜 국민총소득(GNI) 증가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⁹⁶⁾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1차 상품의 수출 호조로 7%대에 달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국제 상품시세의 하락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6) 국민총소득(GNI)은 한 경제가 한 해 동안 생산한 총부가가치(국내총생산, GDP)에서 무역 손실은 빼고 자국민이 해외에서 번 소득을 더한 것으로, 국민들의 구매력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료: FAO(www.fao.org)

| 부록 그림-2 | 아프리카 농산물의 교역조건

7. 환경적 측면

아프리카 빈곤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종종 간과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연구들은 아프리카의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환경적인 측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부족 등 빈곤 문제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환경 문제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 역시 빈곤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환경 악화가 빈곤을 낳고 이어서 이것이 훨씬 더 큰 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자연환경은 토양, 물, 공기 등의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량안보, 생계 유지, 건강 등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아프리카의 환경 악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기후 변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환경 악화가 아프리카의 저개발

밭을 압박하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농업 또는 자원개발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있어 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환경 압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는 매우 광역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가뭄과 사막화, 산림 파괴, 물 부족 사태, 생태계 파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환경 문제는 여러 요인이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악화가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예컨대 가뭄과 사막화는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식량안보를 위협함으로써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물 기근은 질병 확산 및 이에 따른 사망률 증가를 물론 수자원을 둘러싼 부족 또는 국가 간의 분쟁을 초래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 해결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아프리카 환경 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기후 변화는 가뭄, 토양 황폐화, 사막화, 물 부족, 생태계 파괴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환경재해를 유발하고, 이것이 식량난과 기아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의 경제적 손실이 GDP의 1.9~2.7%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라리아 등 질병의 확산을 유발하는 위협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92%)의 지역이 열대성 기후에 속해 있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과 각종 풍토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2030년에는 아프리카 국민 9,000만 명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⁹⁷⁾ 말라리아의 창궐은 목축 및 농업 등 여러 경제활동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명단축 등 인간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다.⁹⁸⁾ 이처럼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에게 있어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natural fragility)이 높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워낙 광범위한데다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연경제(natural economy)에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있어 기후 변화는 식량안보, 보건 등 인간의 생존 문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환경연구기관(Germanwatch)에 의하면 글로벌 기후 변화로 기상 변화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⁹⁹⁾ 아프리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UN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28개국 중 22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부록 표-3>은 아프리카 환경 문제가 미치는 주요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뭄과 사막화는 농업생산 감소에 따른 식량 부족의 문제를 뛰어 넘어 식량 폭동 등 정치적으로 소요사태로 발전하기도 한다.¹⁰⁰⁾ 또한 영양실조와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막화로 인해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벌목을 통한 산림 개간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산림 파괴와 자연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산림은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해 줄

9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

98)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3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는 모기의 종류, 습도, 기후 및 생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세계에서 전염성과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99) GERMANWATCH.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0, 2010.

100) 전 세계 식량부족 국가(86개국) 가운데 아프리카가 43개국이며,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니제르, 세네갈,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분의 저장, 홍수 조절, 기후 변화 억제 등의 많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파괴는 온난화 가속, 사막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와 같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물 부족은 지역(부족) 또는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부족한 수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아프리카의 물 사정은 극히 열악한데 현재 8개국(에티오피아·소말리아·차드·모잠비크·적도기니·니제르·콩고(DRC)·나이지리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5년경에는 25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아프리카 인구 중 약 3.4억 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농촌 주민(주로 부녀자)들은 식수를 얻기 위해 평균 6km를 걸어가야 하는 실정이다.¹⁰¹⁾

| 부 록 표-3 | 아프리카 환경 문제의 주요 영향

5대 환경 리스크	주요 영향
사막화	· 농업생산 감소 → 식량 부족 · 기아인구 증가 → 식량가격 폭등(식량 안보 위협) → 정치·사회적 불안 · 농업생산 감소 → 식량난 → 영양실조 → 사망률 증가 · 농경지 감소 → 산림 개간(벌목) → 산림 파괴 → 자연생태계 파괴
물 부족	수자원을 둘러싼 내전 및 국가 간 분쟁 → 지역정세 불안
산림 파괴	온난화 → 이상기온 → 작황 불안 및 식량생산 감소
환경오염	질병 확산 → 사망률 증가
생태계 파괴	관광산업 타격(SSA 국립박물관 동물의 25~40%가 사라질 우려)

환경오염에 따른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아프리카는 공공위생 서비

101) Commission for Africa,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2005. 3.

스가 극히 열악하여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질 악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는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여러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가 광범위성을 띠고 있는 이유는 빈곤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가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로 귀결되고 있어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원시적인 농업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있어 토지의 과다한 사용(over-exploitation of land)은 피할 수 없는 사정인데, 이것이 토지 황폐화, 사막화, 산림 파괴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추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리카 환경 문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확산성을 들 수 있다. 환경 문제는 그 영역이 한 국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로 까지 확산되어 환경을 오염 또는 파괴하는 국경 간 환경이동 문제(transboundary environment)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경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오염 사례가 이 유형에 속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에 걸쳐 있는 빅토리아 호수¹⁰²⁾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 국가의 오폐수 방출이 다른 국가들에 수인성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뭄(물 부족)이나 사막화 등과 같은 환경 위협이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02)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 제1의 호수로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의 3개국에 의해 분할되어 있으며, 나일 강의 수원지이다.

부록 2. 아프리카 수산분야 ODA 지원 내역

| 부록 표-4 | 아프리카 수산분야 ODA 지원규모 주어

단위: 원, %

연도	수산분야 ODA 지원규모(A)	수산분야 아프리카 지원 금액 (B)	비중(%) (B/A)
1991	132,103,037	17,419,896	13.2%
1992	159,944,128	36,802,020	23.0%
1993	256,134,121	10,513,000	4.1%
1994	249,768,493	71,475,287	28.6%
1995	279,434,395	134,082,784	48.0%
1996	247,322,919	19,834,769	8.0%
1997	325,479,289	44,127,435	13.6%
1998	777,581,364	28,970,484	3.7%
1999	895,649,646	14,529,345	1.6%
2000	118,809,357	30,876,686	26.0%
2001	847,926,841	63,271,729	7.5%
2002	763,187,828	43,898,108	5.8%
2003	328,018,781	31,487,575	9.6%
2004	648,260,866	29,442,474	4.5%
2005	2,793,261,335	10,915,112	0.4%
2006	1,788,264,286	112,852,385	6.3%
2007	1,013,142,450	700,258,545	69.1%
2008	4,062,087,206	1,925,500,352	47.4%
계	15,686,376,342	3,326,257,986	21.2%

자료: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부록 표-5 | 아프리카 대상 수산분야 ODA사업 추진현황

연도	대상국가	사업형태	사업내용	금액 (달러)	DAC 원조목적 코드명
1991	모리타니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2,930	어업 개발
		전문가	수산경영	3,502	어업 정책/행정/관리
	나이지리아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6,465	어업 개발
1992	알제리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3,363	어업 개발
		전문가	어업기술	7,718	어업 연구
	튀니지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6,681	어업 개발
		전문가	수산물양식	5,554	어업 개발
1993	잠비아	전문가	수산물양식	13,010	어업 개발
1994	에리트레아	물자지원	어업용구 지원	49,606	어업 정책/행정/관리
	가나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6,545	어업 개발
	말라위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6,545	어업 개발
	모리타니	전문가	해양생물	13,154	어업 정책/행정/관리
	모리셔스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6,545	어업 개발
	잠비아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6,545	어업 개발
1995	앙골라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4,585	어업 개발
	에리트레아	물자지원	어업용구 지원	52,125	어업 정책/행정/관리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4,361	어업 개발
	가나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4,692	어업 개발
	케냐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0,887	어업 개발
	모리타니	전문가	수산경영	16,337	어업 개발
	모리셔스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1,038	어업 개발
		전문가	해양오염	6,212	어업 정책/행정/관리
	모잠비크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7,716	어업 개발
	세이셸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8,409	어업 개발
토고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7,524	어업 개발	
1996	앙골라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7,435	어업 개발
	튀니지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7,212	어업 개발
1997	알제리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1,682	어업 개발
	가봉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12,340	어업 개발
	상투메프린시페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6,549	어업 개발
	튀니지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8,414	어업 개발
전문가		수산물양식	7,410	어업 개발	

| 부 록 표-5 | 아프리카 대상 수산분야 ODA사업추진 현황(계속)

연도	대상국가	사업형태	사업내용	금액 (달러)	DAC 원조목적 코드명
1998	상투메프린시페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8,016	어업 교육 및 훈련
	탄자니아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4,008	어업 교육 및 훈련
	튀니지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8,687	어업 교육 및 훈련
1999	모로코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	6,076	어업 교육 및 훈련
	탄자니아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	6,139	어업 교육 및 훈련
2000	모리타니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 사후 관리	5,950	어업 교육 및 훈련
	탄자니아	물자지원	탄자니아 어망 및 어구	21,360	어업 교육 및 훈련
2001	알제리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10,445	어업 개발
			가공식품 품질 관리	4,294	농수산물 가공업
	이집트	연수생 초청	가공식품 품질 관리	7,669	농수산물 가공업
	감비아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6,504	어업 개발
	가나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7,042	어업 개발
	가나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6,590	어업 개발
	상투메프린시페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6,474	어업 개발
2002	알제리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11,849	어업 개발
	가나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8,024	어업 개발
	모로코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15,211	어업 개발
			BIE 수산양식 파트너십	0	어업 정책/행정/관리
	튀니지	연수생 초청	BIE 수산양식 파트너십	0	어업 정책/행정/관리
2003	케냐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13,120	어업 개발
	모리타니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	5,611	어업 교육 및 훈련
	탄자니아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7,687	어업 개발
2004	코트디부아르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기술	7,355	어업 개발
	모로코	전문가	수산물양식	11,497	어업 개발
	나미비아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기술	6,870	어업 개발
2005	나미비아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10,656	어업 개발
2006	알제리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19,230	어업 개발
	이집트	연수생 초청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7,323	농수산물 가공업
	가나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20,881	어업 개발
	케냐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8,984	어업 개발
	말리위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12,360	어업 개발
	모로코	연수생 초청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8,273	농수산물 가공업
	세네갈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31,913	어업 개발
튀니지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9,142	어업 개발	

부록 표-5 | 아프리카 대상 수산분야 ODA사업추진 현황(계속)

연도	대상국가	사업형태	사업내용	금액 (달러)	DAC 원조목적 코드명
2007	알제리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21,567	어업 개발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	9,822	어업 개발
	베냉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22,777	어업 개발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12,491	어업 개발
	부르키나파소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7,086	어업 개발
	카메룬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7,881	어업 개발
	카보베르데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8,796	어업 개발
	중앙아프리카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8,579	어업 개발
	콩고공화국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48,458	어업 개발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	9,822	어업 개발
	코트디부아르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6,993	어업 개발
	적도 가니	연수생 초청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19,644	어업 개발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9,074	어업 개발
	가봉	연수생 초청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	9,822	어업 개발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8,427	어업 개발
	가나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21,136	어업 개발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13,577	어업 개발
	가니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업식	22,583	어업 개발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45,390	어업 개발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	19,644	어업 개발
가니비사우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업식	13,441	어업 개발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46,081	어업 개발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	19,644	어업 개발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8,451	어업 개발	

| 부 록 표-5 | 아프리카 대상 수산분야 ODA사업추진 현황(계속)

연도	대상국가	사업형태	사업내용	금액 (달러)	DAC 원조목적 코드명
2007	케냐	연수생 초청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유통요소 중점 관리	9,822	어업 개발
	라이베리아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10,296	어업 개발
	말리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8,035	어업 개발
	모리타니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7,557	어업 개발
	모로코	연수생 초청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유통요소 중점 관리	9,822	어업 개발
			모로코 수산양식	83,630	어업 개발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6,405	어업 개발
		전문가	어업기술	9,313	어업 연구
	모잠비크	연수생 초청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22,056	어업 개발
	나미비아	연수생 초청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21,868	어업 개발
	나이지리아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7,596	어업 개발
	세네갈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	12,031	어업 개발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46,434	어업 개발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유통요소 중점 관리	9,822	어업 개발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8,592	어업 개발	
수단	연수생 초청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21,456	어업 개발	
토고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7,679	어업 개발	
튀니지	연수생 초청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21,314	어업 개발	
콩고 민주공화국	연수생 초청	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8,698	어업 개발	
2008	알제리	프로젝트 일반사업	알제리 보리새우양식장 건설 및 기술이전사업	686,246	어업 개발
	앙골라	연수생 초청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16,377	어업 교육 및 훈련
	카메룬	연수생 초청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17,008	어업 교육 및 훈련
	이집트	연수생 초청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유통요소 중점 관리	7,633	어업 개발
	가봉	연수생 초청	연안수산양식기술	22,176	어업 개발
	가나	연수생 초청	아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16,241	어업 교육 및 훈련

부록 표-5 | 아프리카 대상 수산분야 ODA사업추진 현황(계속)

연도	대상국가	사업형태	사업내용	금액 (달러)	DAC 원조목적 코드명
2008	케냐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15,805	어업 교육 및 훈련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유통요소 중점 관리	17,383	어업 개발
			연안수산양식기술	10,210	어업 개발
	모로코	연수생 초청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유통요소 중점 관리	16,729	어업 개발
			모로코 수산양식	135,079	어업 개발
		전문가	바다양식	1,034	어업 정책/행정/관리
	나미비아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15,815	어업 교육 및 훈련
	세네갈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17,306	어업 교육 및 훈련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유통요소 중점 관리	9,911	어업 개발
			연안수산양식기술	10,760	어업 개발
	수단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31,546	어업 교육 및 훈련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유통요소 중점 관리	8,394	어업 개발
	탄자니아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31,279	어업 교육 및 훈련
	튀니지	프로젝트 일반사업	튀니지 패류양식 기술이전사업	564,880	어업 연구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30,452	어업 교육 및 훈련	
		연안수산양식기술	9,375	어업 개발	
콩고 민주공화국	연수생 초청	이프리카 수산기술자 양성	33,790	어업 교육 및 훈련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유통요소 중점 관리	9,099	어업 개발	

자료: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부록 3.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재단

1. 해외어업협력(Overseas Fishery Cooperation: OFC)

일본의 수산분야 해외진출 중에서 정부 지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어업협력’이며, 해외어업협력재단¹⁰³⁾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적개발원조 혹은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¹⁰⁴⁾의 형태로서 어업 선진국인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어업원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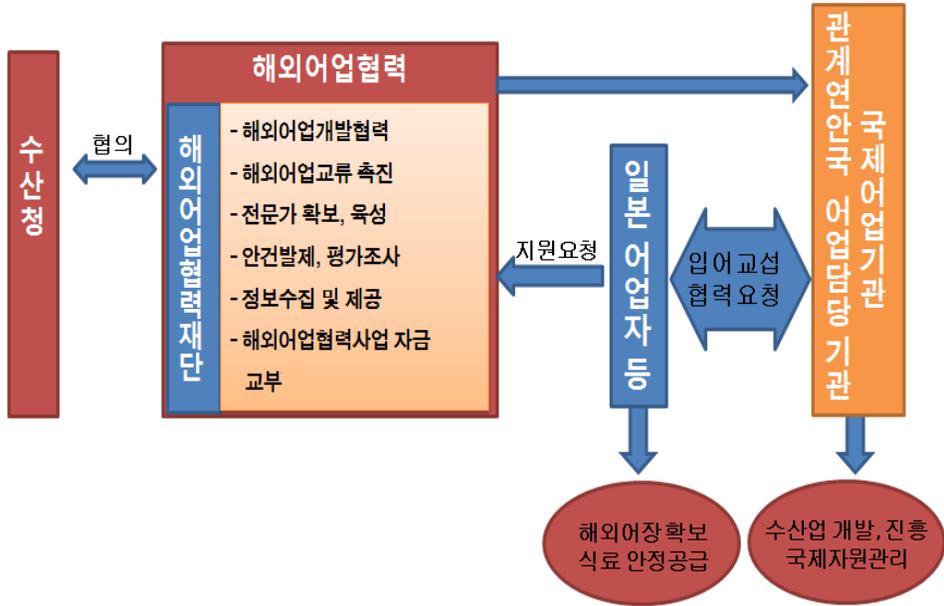
1)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의 조직구성 체계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의 조직구성 체계는 수산청이 관할부서의 역할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 실질적인 운영은 해외어업협력재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주로 일본 어업자들에 의한 해외어장 확보와 식료 안정 공급의 목적으로 일본 어업자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해외어업협력재단에서 이를 수용·인가하여 해외어업협력을 지원하고 수산청에 보고한다. 한편으로는 해외어업협력재단이 직접 국제어업기관 혹은 관계연안국 및 어업담당기관에게

103) 해외어업협력재단(Overseas Fishery Cooperation Foundation of Japan: OFCF).

104)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출처: 두산백과사전).

수산업 개발 진흥 및 국제자원 관리와 관련한 지원을 수행하고 수산청에 보고한다.



자료: 해외어업협력재단(www.ofcf.or.jp)

| 부록 그림-3 | 일본 해외어업협력의 지원 흐름도

2) 해외어업협력의 목적과 내용-해외어업협력사업자금의 대부사업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은 해외어업협력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73년 6월에 설립된 이 재단은 해외의 수산업 개발, 진흥 및 국제적인 자원 관리 등에 공헌하는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동시에 일본의 해외어장 및 어선의 안정 조업을 확보하며, 일본 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재단은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통해서 2001년 6월에 공포된 일본의 수산기본법의 기본 이념인 수산물 안정 공급의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의 목적은 동 재단의 설립목적과 상동한다

고 볼 수 있다.

동 재단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해외어업협력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해외어업 개발이다. 이는 일본의 해외어장 확보를 위해 관계 연안국의 수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협력이다.

둘째, 해외어업 교류 촉진이다. 연안관계국 등의 수산 관련 요인(要人)을 일본에 초청하여 어업과 관련한 양국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셋째, 전문가 확보 및 육성이다. 해외어업협력에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해당 전문가의 능력 및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서, 2007년 말 현재 총 20개 분야에 100여 명의 해외어업협력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넷째, 정보 수집 및 제공이다. 해외어업협력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서 관련 연안국의 어업 관련 정보를 수집 후 정리하여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해외어업협력자금의 대부(貸付)이다. 일본의 어업자가 해외에서 연안어업 등의 개발 및 진흥, 국제적인 자원 관리 추진, 현지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어업협력사업을 할 때에 해당 어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내용 중에서 ‘해외어업협력자금 대부사업’은 현재 동 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자금은 제3의 개인 혹은 일반 자금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자금 대부사업에서 제3자의 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동 대부사업의 대부조건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외어업협력자금의 대부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무이자 융자와 저리 융자이다.

무이자 융자는 외국정부에 대한 시설의 양도, 어업개발 조사 및 국제

적인 자원 관리에 기여할 경우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해 저리 용자 사업은 일본의 어업자 등이 해외에서 현지법인 설립 등과 같은 해외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에 현지법인의 출자 및 설비자금, 기타 장비자금 등을 대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외화 포함)을 저리로 용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대부사업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 대부사업으로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해당 대부사업의 대상사업이 국제 자원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을 포함한 일본의 해외어장 확보와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 ‘국제 자원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이라 함은 해당 사업이 복수국 및 지역에 따른 고도 회유성어종, 수하성어종, 고갈자원, 해산포유류 등의 관리대상어종에 관련 있는 조사·연구, 관리·단속, 증식 개발의 촉진, 국제기관의 기능 강화 등에 공헌 등을 포함한다.

둘째, 대부 대상사업이 일본의 식료 안정 공급 및 일본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만 한다. 여기서 동 대부사업이 ‘일본의 식료 안정 공급에 기여’하고 하는 것은 해당사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직접 혹은 제3국 경유로 일본에 반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 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제3국 등에 의한 동종의 입어 및 합병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 대부 대상사업의 리스크 평가가 곤란하여 민간금융기관의 참가가 곤란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동 재단은 ‘민간금융기관의 참가가 곤란한 경우’라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서 무이자 용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하의 요소를 감안(勘案)해야 한다. i) 대부 대상사업의 리스크, 즉 자원 상황, 어장 해황(漁海況) 등 자연환경의 변화 및 자본 회수에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한 리스크, ii) 사업실시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 리

스크, 즉 투자, 어업, 어획할당 등과 관계있는 법제도가 조정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리스크 등, iii) 사업실시국 등의 과거 사업실적, 즉 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역 혹은 분야의 과거 사업실적의 유무 등을 감안해야 한다.

즉 세 번째 조건과 연계하여 동 대부사업의 조건을 정리하면, ‘일반적인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어려운 해외어장 확보 및 식량 안정 공급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저리 용자의 대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 해외어업협력사업자금의 대부사업 범위와 추진 규모

해외어업협력사업자금의 대부사업 범위는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일본 어선이 있는 해외지역에서 조업과 관련되어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그 대상어선은 협정, 입어, 입찰, 나용선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일본 자국법인 등의 출자와 연계된 해외의 현지법인 등에 의한 조업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셋째, 일본 자국법인 등의 출자와 연계된 해외의 현지법인 등과의 밀접한 관계, 즉 파트너십, 용자, 제휴 등의 관계가 있는 사업이 포함된다.

넷째,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일본의 식료 안정 공급에 공헌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사업에 준하며, 수산청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사업 범위에 해외어업협력자금의 대부사업 지원금 규모는 2007년에 총 647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542억 원은 2007년 당해 예산으로 말레이시아 등 3개국에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105억 원 2006년의 이월 예산이다.

4) 일본 해외어업협력사업의 성과

일본의 해외어업협력사업은 다양한 해외어업사업협력을 통해 일본에 게 중요한 수산자원을 확보하여 일본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산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다랑어 자원과 관련해서 연안국 다랑어 자원과 관련된 국제기구들로부터 가장 많은 쿼터량을 할애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해외어업협력 사업은 상기의 목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같은 국제기구 내에서 할애 받는 다랑어 자원량은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품목 중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다랑어류의 자원 확보에서 뒤처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록 표-6 | 다랑어류 자원 국제기구의 국가별 쿼터량(2008)

단위: 톤

구분	어종	한국 쿼터 현황		일본 쿼터 현황	
		쿼터량	순위	쿼터량	순위
WCPFC	눈다랑어	21,442	2위	28,503	1위
IACCT	눈다랑어	12,576	2위	34,076	1위
CCSBT	남방참다랑어	1,140	3위	3,000	2위
ICCAT	참다랑어	339	하위권	2,431	2위
	눈다랑어	2,100	하위권	25,000	1위

자료: 원양산업협회, 내부자료

부록 4. 가나의 한국 자본 참여 수산기업 및 문제점

1. Hasim Fisheries 및 가나 한인협회 임원진 회의

- IUU어업에 대한 EU 규정 발효(2010년 1월)에 따라서 IUU어업이 원양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연구기관의 영향 분석 및 해석이 필요함
 - 가나의 경우 가다랑어를 어획 후 가공공장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다양한 EU 인증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아프리카 해역에서 수산물을 어획하여 EU에 수출할 경우에는 EU에 어선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가나의 외국인투자는 50:50 비중으로 하고 있으며, 가나투자청(GIP)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ODA에 대한 수요 및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가나의 연안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안어업(주로 카누어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양식어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둘째, 가나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양식어업에 관심이 많음
 - 셋째, 가나 대통령의 수산자문을 일본의 JAICA(약 3천만 달러 규모)가 하고 있으며, 주로 바다나 하천의 준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음
 - 넷째, 한국은 KOICA 및 KOTRA가 지점을 낼 예정에 있음

- 가나의 수산 관련 주요 연구기관에는 KNUST 등이 있으며, 사회경제분야는 없고 주로 양식어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음

- 가나의 수산 관련 협회 혹은 단체는 가나 TUNA 협회, 가나 INshore 협회(영세어업협회) 등이 있음

2. 가나의 주요 한국 자본 참여 수산기업

1) AFKO 수산기업

- AFKO는 1970년대 가나에 김복남 사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1980년대에는 가나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의 규모 있는 수산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가나의 경제 발전에 따라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AFKO 기업은 주로 가다랑어 등을 어획하여 가공공장에 판매하거나 냉동냉장창고에 보관한 후에 도매업자에게 어획물을 판매하고 있음
 - 최근 AFKO의 기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선원 수급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는 간부급은 물론 일반 선원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임
 - 이러한 선원 수급의 문제는 가나에 선원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으며,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선원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아프리카 권역별 선원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실정임
 - 넷째, 한국은 KOICA 및 KOTRA가 지점을 낼 예정에 있음
- 가나의 어업자원의 상태를 보면, 크게 저서어(문어 등)는 거의 황폐화되었고, 가다랑어와 멸치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저서어를 대상으로 하는 트롤어업이 축소되고 있고, 멸치를 미끼로 하는 가다랑어 채낚기 어업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국인 역시 가다랑어 채낚기나 건착망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다랑어 채낚기 어업은 가나의 풍부한 멸치 자원을 미끼로 어획한 후에 가다랑어 채낚기(일본조)를 통해 가다랑어를 어획하고 있음
 - 최근에는 가다랑어 채낚기 어선이 멸치 미끼를 사용하여 어군을 집어하면, 건착망이 일순 어획하는 동조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PANOFI 수산기업-신라교역 계열

- PANOFI는 우리나라의 수산 대기업 중의 하나인 신라교역의 자본이 가나에 투자하여 설립한 수산기업임
- PANOFI는 Tema 항의 어항이 규모가 작으며 수심이 낮아 현재의 어선 및 양륙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나 Tema 항 내 어항의 규모 확장에 대해 ODA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Tema 항의 어항 인근에 여분의 부지가 있으며, 가나에서도 어항 확장을 위해 남겨둔 부지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음
- 가나의 대형트롤어업은 거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소형트롤어업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 중임
 - 대형트롤어업은 주로 갑오징어, 문어, 조기 등을 어획하고 있는데, 남획으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어 어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해 50톤 이하의 소형트롤(주로 청어 및 정어리류 어획)은 과거에 가나인들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자본이 투입되면서 그 세가 늘어나고 있음
- 가나의 가다랑어 채낚기 어업은 현재 대부분이 한국인 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가나의 조업허가 제한으로 인해 진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국원양공사(CNFC)나 중국 정부의 대 아프리카 원조 정책 등이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가나 정부의 최우선 경제 현안은 고용 창출에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에 관심이 많음

- 대표적인 사례가 수산분야의 참치 통조림 공장이며, Tema 항 배후부지에 가동하지 않고 있는 2개의 참치 통조림 공장을 구입할 사업자를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어항 부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투자 건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어항은 부두의 규모가 적으며, 현재의 수심 6.5m는 작기 때문에 9m 정도로 준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두의 배후도로도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수리조선업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자본이 들어와 현재 Tema 항의 수리조선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가나 노동자들의 관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
 - 외해양식사업에 대해서도 가나 정부의 관심이 많은데, 이는 가나 해역에 태풍이 없으며, 대서양 황다랑어의 생육이 빠르다는 점 등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지 한국인 투자 수산기업이 가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사전 수출 보고에 따른 가나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크다는 점이다.
- 가나는 상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산청의 차관 및 장관에게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 있으며, 사후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로부터 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가나 현지인이 운영하는 참치 통조림 공장에서 원료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수출을 막고 가나 현지인의 공장에 가다랑어 원료를 강제 하역하는 경우임
 - 뿐만 아니라 이 가공공장은 한국인이 투자한 수산기업의 어획물에 대한 구매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경우도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의 최대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

3) 동호수산

- 동호수산은 Tema 향의 어항부지에 입주한 한국인이 투자한 수산기업으로 가다랑어 채낚기 어선으로 가다랑어를 어획하여 현지 통조림 가공공장 원료 공급과 아비잔에서 도매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음
 - 현지에서 운영 중인 참치 통조림 공장은 Myloc(현지인)과 PFC(프랑스계)로 전자는 일일 최대 100톤(보통 80톤), 후자는 일일 최대 200톤(보통 120톤)을 생산할 수 있음
 - 참치 통조림 공장에 공급되는 가다랑어 가격은 세계가격을 기준으로 ‘가나 가다랑어 가격 협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음
 - 동 협정은 가나 정부 관계 기관 3개, 가공공장 2개, 다랑어 협회 2명이 참가하여 가격을 결정하며, 주로 태국 방콕의 가다랑어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낮추어서 판매하고 있음

3. 가나의 한인 수산업자 문제점

- 가나의 우리 수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인 수산업자들이 사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가나의 장은 협소하나 어장 Point가 확실하여 어탐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나 자원이 풍부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새로운 어업회사가 진입할 경우 현지 판매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음
 - 가나 정부의 어업허가제도는 사업자 선정(허가권)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로비에 의해 탄력적으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허가권이 유지된다고 보장하기 어려움
 - 가나에서 어업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는 선원 수급 문제인데, 선장, 기

관장, 1항사, 1기사 등 고급 인력의 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음

- 가나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나 수산청의 차관 및 장관의 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패의 기회가 상존하고 있으며, 서부 아프리카 양륙수산물 최대 시장인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잔 시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 코트디부아르 아비잔 시장의 장점(가나의 Tema 시장 대비)

- 시장이 커서 바이어가 많음
- 양륙 및 매매 체계가 상대적으로 우월(시간 절약, 합리적인 하역 등)
- 준조세가 적음(가나의 경우는 각 단계별로 준조세가 존재하나, 아비잔은 일괄적임)
- 가나에 있는 한국인 수산기업은 대부분이 어선 1~2척의 영세근해어업회사이기 때문에 지원책이 필요하나 가나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50%로 한정되어 한국 국적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원양산업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음
- 최근에 가나 현지인의 가다랑어 통조림 공장(Myloc)은 순수 가공공장 사업에서 탈피하여 최근 1년간 가다랑어 어선 4척을 구입하는 등의 원료 수급을 위한 수직적 통합 활동이 활발히 전개 중에 있어서 한국인의 수산사업에 경쟁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가나의 수산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음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어업 외에 새로운 수산분야로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수매사업(Fish Trading-과거 SK해운이 수행한 적이 있음), 냉동냉장창고사업, 수산물 도매업(현재는 레바논계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음)
- 어업분야에서는 기존의 가다랑어 채낚기 어업의 방식보다는 건착망의 방법이 사업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 건착망 단독 조업보다는 채낚기를 어탐선으로 이용하는 공조 조업이 합리적임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 연구

2011年 12月 29日 印刷

2011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金 學 韶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 화 02-2105-2700 FAX : 02-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組版 · 印刷 / 영진피엔피 02-734-371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02-394-0337